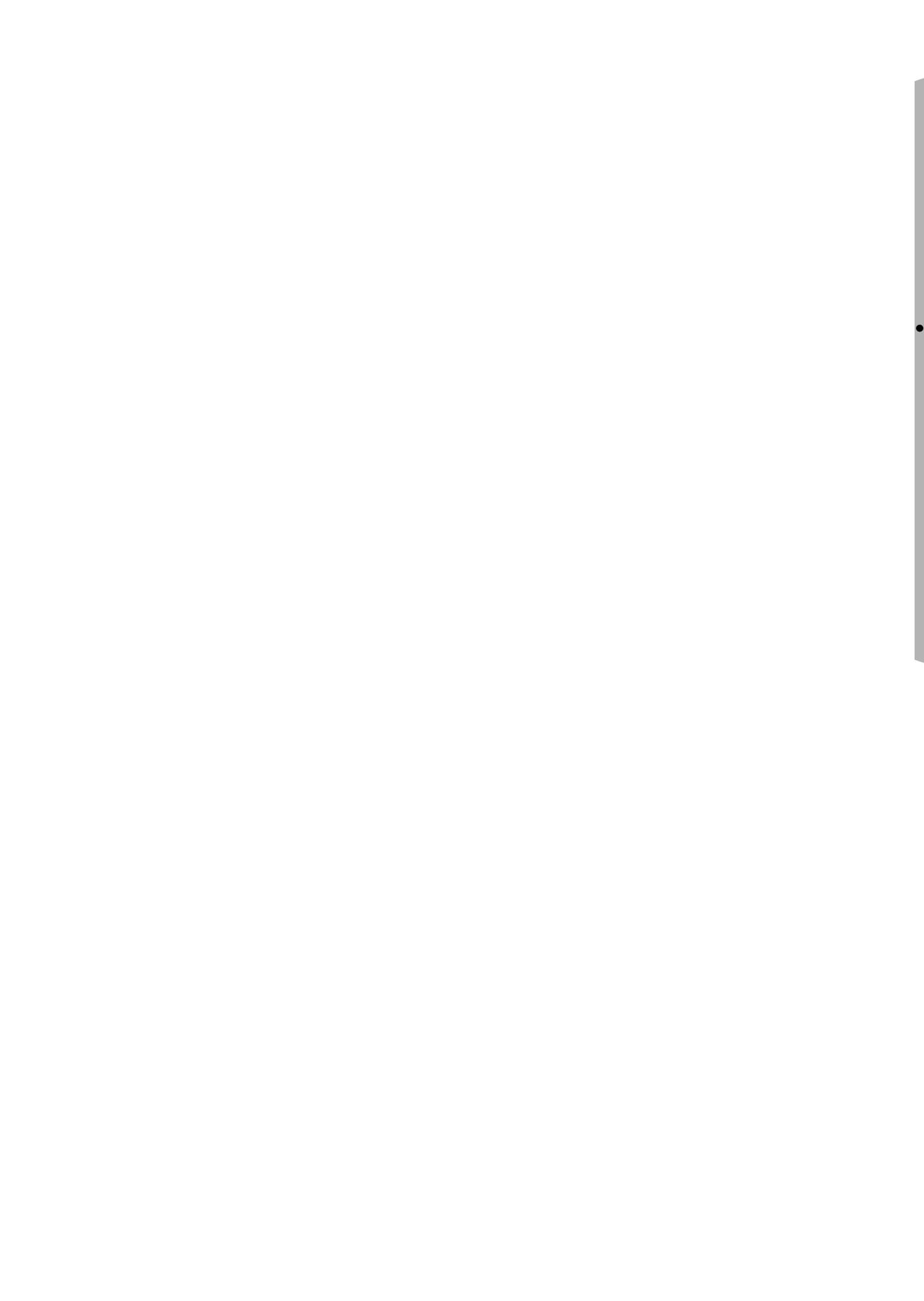


# 시리의소리

제 5호

2004 · 9 · 1

||| 교양사회



특 집

## 사회주의의 오늘

- 6 러시아 / 사회·민족주의의 경합을 통한 활로 모색 - 홍민식  
25 중 국 / '계획'과 '시장'의 역동성 - 김승채  
47 유 고 / 민족적 긴장과 적대감에 따른 분절과 변환 - 김경숙  
65 독 일 / 사회주의와 유럽의 근대와의 결합 시도 - 최치원  
79 쿠 바 / 외부 충격 무력화시킨 적응 능력 - 김두진  
94 월 남 / 국가부문과 사적부문의 균형발전 모색 - 이강우  
115 일 본 / 노조운동 재편에 따른 동반 침체 - 권순미

- 132 **포커스** Q&A 이라크의 주권 - 정리 / 최철호  
136 **시대논단** 변화하는 임무, 변모하는 미군 - 램스펠트  
148 재외미군전력, 기지 재조성의 이해와 패해 - 캠벨  
154 중국의 정치개혁은 진전되고 있는가 - 에코노미  
172 **Archive** 陳水扁 대만총통 취임연설



특 집

## 사회주의의 오늘

〈러시아〉 사회·민족주의의 경합을 통한 활로 모색

〈중국〉 '계획' 과 '시장' 의 역동성

〈유고〉 민족적 긴장과 적대감에 따른 분절과 변환

〈독일〉 사회주의와 유럽의 근대와의 결합 시도

〈쿠바〉 외부 충격을 무력화시킨 적응 능력

〈월남〉 국가부문과 사적부문의 균형발전 모색

〈일본〉 노조운동 재편에 따른 동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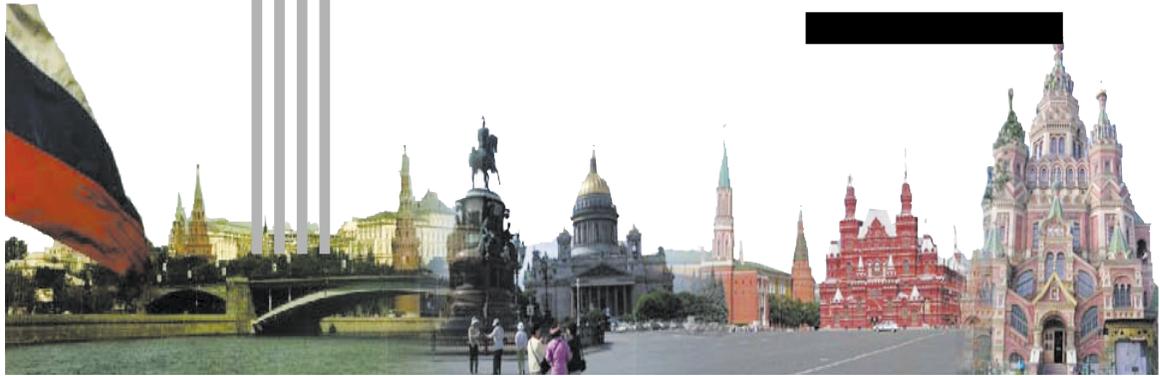


특 집

## 러시아의 사회주의

# 사회·민족주의 결합을 통한 활로 모색

홍민식 (강원대 교수)



### 머리말

“러시아는 비극적인 기로에 서있다”로 시작하는 러시아연방공산당(КПРФ) 강령은 소련붕괴 이후 급진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무리한 이행과정에서 초래된 러시아연방의 극렬한 혼란과 불안한 상황에 대해 “현 집권체제가 기만과 강압으로 러시아인민들을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내몰고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반동, 사회적 퇴보의 길인 동시에 러시아연방을 파멸로 이끄는 민족 재앙의 길”이라고 신랄히 지적하고 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이제 러시아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국은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러시아의 국가 통일과 통

1) 1995년 1월 확정된 현 러시아 연방 공산당 강령. Программа Партии <http://www.kprf.ru/about/progam.shtm> (검색일 2004년 7월 1일)

합 및 독립을 위하여 투쟁할 뿐 아니라 인민들의 안전과 복지 및 러시아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해 놓고 있다.<sup>2)</sup>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견고한 당·국가(Party-State) 체제 하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의 핵심으로써 사회 전반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사실상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를 구가했던 소련 시절의 공산당이 아니다. 이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현 러시아연방의 정치과정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여러 정당들 중의 하나일 따름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의 급진적인 이행을 추진해온 옐친 정부 초기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은 꾸준히 재결집되었으며 특히 이들 중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제 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른바 포스트 공산주의 시대를 맞고 있는 러시아적 정치현실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이 같은 약진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옐친 정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의 무리한 이행과정에서 빚어진 사회·경제적 혼란과 불안에 대한 반사적 지지의 결과라는 평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포스트 공산주의 시대의 이러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다.

이 글은 이 같은 현실인식을 토대로 러시아연방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재결집 양상을 소개하고, 그동안 특히 러시아연방의 정치과정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성장과 최근의 분열 양상을 검토해 봄으로써 신세기의 러시아 사회주의의 이해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자본주의 러시아연방과 공산주의 세력 재결집

### 자본주의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의 등장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등장은 소연방 공산당과 소련의 해체 과정의 연장선에서 파악될 수 있다. 소련의 당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빼레스뜨로이까의 기치 아래 원할한 경제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했던 고르바초프에게 공산당 일당독재는 커다란

2) 문수언,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강 및 정책방향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1997. 가을. pp. 132 - 135.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1988년부터 착수된 일련의 정치개혁은 공산당과 국가기구들을 분리함으로써 전반적인 개혁 추진과정에서 가급적 공산당의 영향력을 축소·배제하기 위한 고르바초프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된 것이었다. 우선 1988년 12월의 헌법개정에서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를 신설하고, 소련사상 최초의 복수 후보제 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보수적인 다수의 공산주의 세력이 소연방 인민대의원대회를 장악하게 되어, 고르바초프의 의도와는 달리 개혁관계법안의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원활한 경제개혁 추진은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련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1990년 3월 러시아공화국인민대의원대회를 신설한 러시아공화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당시의 러시아 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는 1993년 12월 엘친의 헌법개정 때까지 계속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대의기구로 존속함으로써 개혁정책 추진을 둘러싼 끊임없는 보수-혁신의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었다.

1990년 3월 헌법개정에서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소련 헌법 제 6 조 를 삭제하고 복수 정당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산당을 국가로부터 완전 분리 시켰다. 아울러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신설된 최고회의 의장직 및 대통령직을 겸직함으로써 고르바초프는 소련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1990년 12월 제 4차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는 기존 각료회의를 폐지하고 내각을 신설하였으며, 부통령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사실상 공산당 일당 독재를 종식시키고 국가권력을 강화시킨 이 같은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은 행정권과 입법권 사이의 불분명한 구분으로 인한 제도적 마찰, 그리고 보수적인 다수의 공산주의 세력으로 구성된 의회의 존속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계는 원활한 경제개혁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었으며, 엘친의 새로운 러시아연방도 적어도 신 헌법 제정 이전까지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동안 소련경제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었다. 더욱이 글라스노스찌가 확산되면서 연방내부의 소수민족문제가 증폭되고, 이는 바로 발틱 3국 등 일부 연방 구성공화국들이 분리독립 선언과 연방재편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과 아울러 러시아 민족주의를 등에 업은 엘친의 러시아연방에 의한 소연방 중앙 권력의 잠식은 소련 해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0년 6월 1일 러시아 연방회의는 러시아 연방법이 소련 연

방법 보다 우선한다  
는 주권선언을 발표  
하고, 금융·재정 부  
문에서 소연방 중앙  
권력에 단호한 압박  
과 통제를 가함으로  
써 소련을 사실상 ‘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의 급진적인 이행을 추진해온 옐친 정부 초기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기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은 꾸준히 재결집 하며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제 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령국가’화 했다. 주권선언 채택 이후 소연방 공산당을 정식으로 탈당한 옐친은 이어 6월 12일에는 소연방 공산당 간부가 러시아 연방 고위직을 겸할 수 없다는 ‘권력에 관한 법’(Декретовласти)을 러시아 공화국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68만 2,800여명의 소연방 공산당원이 탈당한 결과 소연방공산당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어, 소연방내의 비러시아 공화국들의 주권선언이 뒤따르게 되었다.<sup>3)</sup>

소연방 구성공화국들의 강력한 연방재편요구 압력에 따라 고르바초프가 제시한,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의 신연방조약안이 조인되기 전날인 1991년 8월 19일의 불발 쿠데타는 중앙 집권적 연방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세력의 지도자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보수쿠데타의 실패로 소련의 중앙집권구조의 붕괴가 가속화되었다. 보수 쿠데타 실패 직후, 고르바초프 역시 소연방 공산당을 탈당하였다. 보수 쿠데타 저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 옐친은 쿠데타 전날 러시아 연방 최초의 직선 대통령(1996년 6월 12일 선거)으로써 러시아 연방 영토내의 소련 군부와 KGB 및 기타 국가조직에서 모든 소연방 공산당의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11월 초에는 소연방 공산당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소연방의 국가 및 정부기관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게된 옐친은, 일련의 법령선포를 통하여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있는 소연방 관할하의 모든 기업과 조직들을 러시아 연방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10월에는 급진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화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위기 극복과 강력한 개혁수행을 위한 비상대권을 러시아 연방 인민대의원대회로부터 승인 받았다.

옐친이 주도한 1991년 12월 21일 Alma Ata 선언에서, 발틱 3국과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공화국의 독립과 CIS 창설, 러시아에 의한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3) 우평균, 「소련 붕괴와 현대 러시아 정치」(서울. 매봉, 2003) pp.75 - 101  
АргументыиФакты(1990. 7. 3)

승계, 1991년 12월 26일부로 소연방의 공식적인 해체 등이 결의되었다. 이로서 사회주의 소연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자본주의 러시아연방이 역사의 전면에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 공산주의세력의 재결집

사회주의 진영의 챔피언으로서의 소련을 70여 년 간 이끌고 지탱해온 소연방 공산당이, 고르바초프와 옐친 같은 소연방 공산당의 최고핵심 지도자들에 의해 축소되고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지만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언제나 헌신적인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하며, 그 동안 공산당에 의해 왜곡된 소련의 사회주의를 보다 민주화·인간화하겠다는 고르바초프에게 있어 그 나름대로의 개혁 정책추진을 가로막은 소연방공산당은 그 영향력을 반드시 축소해야만 했던 대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르바초프적인 개혁 정책의 한계를 이미 인식하고 보다 실질적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옐친에게 있어서 또한 소연방 공산당은 구조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어떤 논자들은 또한 소연방 공산당의 주요강점은 민주집중제를 토대로 한 견실한 내부 조직에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까지 지배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공산당을 불법화 시켰던 커다란 약점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sup>4)</sup>

빼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찌에 입각한 고르바초프의 '수정주의' 적 개혁정책에 반발하여 1990년 6월 폴로즈코프(Ivan Polozkov)와 쥬가노프(Gennady Zyuganov)가 중심이 되어 '러시아 공산당'(Russian Communist Party)이 결성될 때까지 소연방 거의 전 기간을 통해 러시아 공화국은 자체적인 공산당 조직이 없었다.<sup>5)</sup> 소연방 공화국출범이후 레닌은 러시아 공화국을 제외한 다른 소연방구성공화국들에게는 독자적인 공산당을 허용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러시아 연방 공산당을 소비에트시기에 자행된 소연방 공산당의 죄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있다.<sup>6)</sup>

4) R. Judson Mitchell, R. S Arrington, "Gorbachev, Ideology and the Fate of Soviet Communism" i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33, (2000) pp. 472-473

5) 1990년 6월 결성된 러시아 공산당의 정식 명칭은 '러시아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공산당(КП РСФСР)

6) Steve D Boilard, 「Russia at the Twenty - First Century: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the post-Soviet Era」(New York, Harcourt, 1998). 김형기 외 역, 「러시아 - 21세기를 향한 도전」(서울, 한울, 1999), pp 98 - 105

1991년 8월 보수 쿠데타 실패이후 옐친은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러시아 공화국 전역에 공산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재산몰수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서도 공산주의 세력들은 다양한 분파별로 끊임없는 재결집의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과거 소비에트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로 전체 소연방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 세력으르든, 같은 해 안드레예바(Nina Andreeva)가 주도한 ‘볼셰비키 공산당’(Communist Party of Communist)과 프리가린(Aleksei Prigarin)이 만든 ‘공산주의 직업동맹’(Worker’s Union of Communist) 등이 있다. 과거 소연방지역 전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분파들은 별다른 성과 없이 미약한 세력으로 머물러 있다. 역시 같은 해 소연방 헌법 제 6조에 규정된 소연방 공산당의 독점적 권리를 제거라도 공산당은 지배 정당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을 했던, 역사가자 메드베데프(Roy Medvedev)가 주도한 ‘사회주의 노동자당’(Socialist Worker Party)이 있지만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sup>7)</sup>

1992년 7월에는 소연방 공산당 잔존세력들이 비밀리에 제 29차 소연방 공산당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크루츠호프(Anatoly Kryuchkov)의 ‘러시아공산주의자 정당’(Russian Party of Communist), 안펠로프(Viktor Anpilov)의 ‘노동러시아’(Working Russia), 루츠크이(Alexander Ruts koy)의 ‘러시아 인민당’(People’s Party of Russia)등의 분파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들 공산주의 분파들은 공통적으로 옐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같은 해 9월 러시아 공산당의 주가노프는 옐친에 반대하는 좌파와 우파를 모두 통합하여 민족구국전선의 결성에 협력하였으며, 옐친은 곧바로 이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1992년 11월 30일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민족구국전선의 활동을 금지시킨 옐친의 포고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다양한 분파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새롭게 재결집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러시아연방 출범 초기부터 충격요법에 따른 급진적인 가격 자유화 조치가 엄청난 인플레이를 유발하여, 국가경제를 일시에 대혼란에 빠뜨려,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게 되면서 광범위한 반 옐친 불만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미 12개가

7) The Guardian, April 20, 1990 스티브 보일러드, 위외책.

넘는 다양한 분파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자신들의 조직재건과 재결집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1993년 2월 14일 유가노프가 주도한 러시아 공산당은 제 2차 전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당명을 '러시아연방공산당'으로 바꾸고, 이미 50만명의 당원을 확보한 공식적인 정당조직으로 새롭게 재건되었다. 이들은 과거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았던 소연방 공산당의 조직과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당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다.

1993년은 공산주의 세력들에게는 대약진의 해였다. 러시아 연방공산당 창당에 이어, 툴킨(Viktor Tyulkin)이 주도한 '러시아 공산주의 노동자당'(Russian Communist Worker Party)과 라프신(Mikhail Lapshin)이 이끄는 '농업당'(Agrarian Party)이 창당되었다. 이중 급진적 세력인 러시아공산주의노동자당은, 러시아연방공산당을 신랄히 비판하는 입장이고, 비교적 온건세력인 농업당은 러시아연방공산당을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1995년 의회선거에서 정당명부제 지지율 5%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지역구에서는 두마의석 20석을 차지하였다. 새로운 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에 따른, 1993년의 두마선거이후, 2003년 말까지 농업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두마선거에서 계속 승리함으로써 제 1야당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현 러시아연방의 정치과정에서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군소 공산주의 계열 정당들은 제외하고, 러시아연방공산당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러시아 연방 공산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책 방향

### 러시아 연방공산당의 이념적 정체성

지금까지 유가노프가 주도해온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치열한 계급투쟁, 폭력혁명 및 무신론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아니다.<sup>8)</sup> 현재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옐친의 무리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화 추진으로 야기된 현대의 위기 탈출을 위한 지혜를 마르크스-레닌주의 교리가 아니라 과거 러시아의 건설적

8)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의 해석과 평가에 관한 서술은 문수연,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당 및 정책분석" 「한국정치학회보」31집 3호, 1997, 가을 pp.129-148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 전통과 역사적 연속성에서 찾으며, 러시아 민족과 국가의 재건을 기본적인 신념으로 강조하는 민족적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민족적 사회주의’ 노선의 공산당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sup>9)</sup>

1993년 2월 14일 제 2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현 러시아연방공산당 규약(УСТАВ КПРФ)은 러시아 연방공산당이, 1990년 6월 고르바초프의 ‘수정주의’ 적 개혁 정책 노선에 반발하여 플로즈코프와 주가노프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러시아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 공산당’(이하 러시아 공산당)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10)</sup> 이 러시아공산당의 핵심지도세력은 과거 소연방 공산당 내에서 경제 및 조직 활동 기구에서 활약했던 보수적 성향의 노멘클라투라들로서, 이미 그 당시에 소련식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그것의 사회민주주의적 변형이 더 이상 대중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sup>11)</sup> 따라서 대중적 지지가 흔들리는 이같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사회주의가 지향해 온 사회정의와 애국주의를 결합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당 규약은 러시아연방공산당이 ‘공산주의적 이상’을 고수하는 ‘애국자들의 당’이며, 이념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발전’에 기초하며 ‘사회정의, 집산주의, 자유, 평등의 사회’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함을 공언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적 애국주의는 민족 공산주의(National Communism)라 할 수 있는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자본주의 러시아연방의 현실에 새롭게 복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탈린 체제가 공고화되고 소련에서 계급투쟁이 일단락된 후,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서 민족주의가 소련의 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냉전시기에 서방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국가이념으로 강조되었다.<sup>12)</sup>

과거 소련에서 이 같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결합양상은 이제 소련 내의 계급투쟁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계급투쟁은 다만 자본주의 서방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사회주의의 조국으로 간주되는 소련을 지키는 것이 사회주의의 궁극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민족주의를 합리화 시킬 수 있었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sup>13)</sup> 그러나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자본주의화가 되어 새로운

9) Veljko Vujacic, "Gennady Zyuganov and the 'Third Road'", Post Soviet Affairs, vol. 12, no2, pp. 118 - 154.

10) УСТАВ КПРФ, <http://www.kprf.ru/about/program.shtml/> (검색일 2004년 7월 1일).

11) 김창진, "소련해체이후<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체성", 『한국과 국제정치』제 12호 제2호, 1996, pp 262-263.

12) Veljko Vujacic, op.cit pp. 122-123.

계급갈등이 대두한 새로운 러시아연방에서 계급투쟁은 언급하지 않고 민족과 국가의 재건을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당 강령에서 조차 계급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계급보다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 러시아 사회의 기본적 모순은 적대적 계급간의 모순이 아니라 새로운 매판 자본가들에 의하여 지원되는 현 집권세력과 인민전체 사이와 모순이며, 동시에 역사의 동인은 계급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쥘가노프의 현실인식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sup>14)</sup> 그는 또한 새로운 상황을 빚고 있는 러시아연방에서 “오늘날의 주요투쟁은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투쟁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코스모폴리탄들과 민족 국가주의자들 간의 투쟁이므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현재의 과업인 국가의 보존(국가성), 사회정의, 인민의 권력행사(인민성), 그리고 애국주의를 위하여, 계급적 접근은 뒤로하고 민족주의적 우파세력과도 연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세계자본주의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계급화해와 계급단결 그리고 민족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여전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의 운명적 종말을 언급하던 과거 소연방공산당 강령(1986년 소련공산당강령)과는 달리, 러시아연방공산당강령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라는 그 본래적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채, 국가간의 분쟁을 지속시키고 있지만, 나름대로 내부적 모순을 가라앉히고 비교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대신 자본주의의 대량소비 및 자원의 낭비적 특성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자본주의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분배 및 소비의 형태가 지속된다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재앙에 부딪혀 결국 이 세계는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리라는 것이다. 반면에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생산의 자원낭비적 성격과 대량소비적 특성이 극복된 지구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발전 형태를 채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러시아와 인류문명의 미래는 지속적 생

13) 문수연, 앞의 글.

14) Jeremy Lester, "Overdosing on Nationalism : Gennady Zyuganov and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New Left Review*, No. 221(Jan-Feb, 1997).

15) 김창진, 앞의 글.

존을 위해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대의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차별성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러시아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란 당 강령의 표현처럼 오늘날 러시아연방 공산당은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조국을 구원하는 신념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민족적 애국주의적 의지를 불가분의 것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교리 보다는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방식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러시아가 자본주의적 개별성 및 이기주의, 개인주의 보다는, 사회주의적 친화력을 지닌 특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포스트-공산주의시대의 이념적 정체성의 근원을 서구적인 마르크스 사상이 아니라, 러시아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찾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보고에서도 쥬가노프는 ‘사회주의적 기본 경향을 나타내는 러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산당 활동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16)</sup> 이에 따라 당 강령에서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인 옴쉬나(Община)와 러시아 정교회의 집단공동의 원칙인 소보르노스찌(Соборность)를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의 근원적 형태로 파악함으로써 오늘날의 사회주의와 러시아 역사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유기적 일부분”이라는 당 강령의 표현처럼 오늘날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조국을 구원하는 신념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투쟁과 민족적 애국주의적 의지를 불가분의 것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사회주의가 유일한 절대적인 목표로 간주되던 과거 소연방 공산당 강령과는 달리 이제는 사회주의와 함께 민족적 애국주의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더불어 민족과 국가 이익의 방어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정책방향

제4차 러시아연방공산당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보고는 “공산당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전진을 의미한다고”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모델로 회귀

16) 제3차 러시아 연방 공산당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보고, ‘Воимяотечествавинтересахнарода’, СоветскаяРоссия 1995년 1월 24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것들을 반복하는 저주를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sup>17)</sup> 따라서 현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기초위에서 설정되고 있다.

과거 소련 공산당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림에 있어, 러시아연방공산당 강령은 스탈린에 대해서는 직접적 평가를 유보하는 반면, 고르바초프, 야꼬블레프, 옐친, 쉘바르드나제 등이 당을 배신하고,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조국을 파괴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고르바초프의 빼레스뜨로이까로부터 역사적 단절을 꾀하면서 빼레스뜨로이까 이전 소련 공산주의의 기본흐름은 포용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 강령은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서 소련 공산당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오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소련 사회주의는 생산력 발전에 대한 진부한 모델에 집착함으로써 역사적 주도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sup>18)</sup> 이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책방향을 주로 경제정책, 정치사회정책, 사회보장정책, 대외정책 면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경제정책에 있어서, 당 강령은, 러시아연방이 급진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화로 인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기간동안 제한적으로 다원주의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정 및 세금, 중요한 원료 및 에너지 자원의 분배, 그리고 군산복합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기본적인 상품의 대외무역은 정부가 독점화 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기본입장은 “실제로 몇몇 금융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경제가 러시아의 경제를 결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영역에서 시장의 경쟁을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한다”는 혼합경제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데, 이를 위해,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부활시켜 사회적 소유 및 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다원화된 경제체제가 구상되고 있다.<sup>19)</sup> 그런데 당 강령은, 이러한 혼합경제가 단지 전환기에 해당하는 공산당 집권 초기 단계에만 한시적으로 존재할 따름이며, 그 이후에는 보다 의욕적인 정부관리경제로 전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기업의 사유화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많은 주식회사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국가적 소유, 조합적 소유, 사적 소유

17) 제4차 러시아연방 공산당 단합대회 중앙위원회 정치보고 “Russia will be Great and Socialist”. СоветскаяРоссия.1997. 4월 25일 in FBIS-Sov-97-078

18) 문수언, 앞의 글.

19) Т.А.Зюганов, «Россия и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Москва:Обозреватель, 1995) pp. 60 문수언, 앞의 글에서 재인용.

등 다양한 소유제도와 다양한 구조의 경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sup>20)</sup> 여기서 공산당의 중요한 과업은 재산소유자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모든 국가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혹은 공동소유자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사유화의 확장에 대하여 투쟁을 심화시키고, 인민들로부터 재산을 공공연히 강탈하는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사회정책면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강력한 대중적인 정당의 기반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제의 폐지 혹은 대통령 권한의 과감한 축소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에 의한 직접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의회를 통한 집권을 시도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두마(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 운영됨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받고, 의회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억압받는 노동자 인민 대다수의 권력의 부활이 즉, 인민주권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가노프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소비에트 제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문제에 관하여 공산당은 각 민족의 자주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러시아 영토의 통합을 모색하는 국가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비러시아계 민족들의 분리독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사회보장정책면에서, 당 강령은 인간의 민주적 권리 원칙에 철저하며, 범죄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이미 상실하였거나 상실해 가고 있는 다양한 권리의 회복, 즉 노동할 권리, 무상 교육 및 의료서비스, 특히 노인과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적 조치들을 약속하고 있다.

끝으로 대외정책면에서, 러시아연방 공산당은, 러시아의 이익과 위엄을 손상시키는 조약이나 협약은 폐기할 것이며, 서구의 가치와 미국주의(Американизм)의 확산을 중지시킬 것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지나친 개방으로 경제, 과학, 문화전체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는 외교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sup>21)</sup> 또한 러시아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거나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지역에 대한 관계 재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오랜 동맹 관계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아울러 정의로운 국제 경제관계를 강조하고, 실질적인 신식민주의와 불균등한 무역교환의 극복을 외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요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20)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6. 8. 2.

21) 제4차 러시아연방 공산당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보고.

주장한다.

## 러시아 연방공산당의 성장과 분열

### 러시아 연방공산당의 성장

1993년 2월 유가노프를 대표로 선출하며 재창당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과거 소연방 공산당의 전국적인 거대한 조직과 구조를 토대로 새로운 러시아 연방에서 원내 제1당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우수한 정당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89개의 러시아연방 행정단위 가운데 45개 지역에서 공산당원 주지사가 선출될 수 있을 만큼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화로의 이행기의 러시아연방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다.<sup>22)</sup> 특히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주로 산업화된 소도시들과 농촌지역, 노년층, 빈곤층, 소연방 시기에 퇴역한 군인들과 관료들, 연금생활자 등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sup>23)</sup>

1992년 러시아연방 출범 이후 지금까지 4번에 걸친 의회(두마)선거(1993년, 1995년, 1999년, 2003년)와 3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1996년, 2000년, 2004년)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성장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먼저 의회선거는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5%이상을 획득함으로써 비례대표제의석을 차지한 정당들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실시된 1993년 12월의 의회선거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정당만이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였고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옐친정부의 개혁주도세력인 가이다르(Yegor Gaidar)의 ‘러시아의 선택’과 극우민족주의 세력인 지리노프스키(Vladimir Zhirinovsky)의 ‘자유민주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sup>24)</sup>

2년 임기로 규정된 첫 번째 두마가 끝나고, 1995년 12월 재차 실시된 의회선거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정당만이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였고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두마 총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친옐친세력인

22) John L. Perry, "Russia's Going Communist Again" in <http://www.newsmax.com/archives/articles/164950.shtml> (검색일 2004년 7월 7일)

23) D.Roderick Kiewiet, Mikhail G. Myagov, "Are the Communists dying out in Russia?" i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35(2002) pp.39-50

24) 이후 두마선거결과표는 해당년도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등의 보도를 중심으로 제작성하였다.

〈표-1〉 1993년 두마선거결과 주요 정당별 의석수

정 당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대표 의석수	전체 의석수
러시아의 선택	40	30	70
자유민주당	59	5	64
러시아연방공산당	32	16	48
농업당	21	12	33
러시아 여성	21	2	23
러시아 통합과 합의	18	1	19
러시아 민주당	14	1	15

〈표-2〉 1995년 두마선거결과 주요 정당별 의석수

정 당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대표 의석수	전체 의석수
러시아연방공산당	99	58	157
우리집 러시아	50	5	55
자유민주당	50	1	51
야블로꼬	31	14	45

‘우리집 러시아’는 2위에 머물렀고 대체적으로 반엘친세력의 커다란 승리로 귀결되었다. 1999년 실시된 의회선거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정당이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였고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원내 제1당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선거에서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을 비롯한 주요정당들이 다른 정치세력들과의 연합을 시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다.

푸틴 정권하에서 2003년 12월 실시된 의회선거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정당이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였고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원내 제1당의 위치를 상실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친크렘린 정당인 통합러시아가 압승을 거두었고 특히 민주-애국주의 세력인 자유민주당과 조국 블록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996년 6월 16일 실시된 최초의 러시아연방 대통령선거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유가노프 후보가 엘친후보에 거의 승리할 수 있었던 치열한 접전이었다. 선거법상 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2명의 후보를 2차 결선투표에 올리는 규정에 따라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35.3%를 획득한 엘친과 32%를 획득한 유가노프가 7월 3일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되었다. 투표결과 53.7%를 획득한 엘친이 40.4%의 지지에 그친 유가노프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0년 3월 26일 실시된 두 번

〈표-3〉 1999년 두마선거결과 주요 정당별 의석수

정 당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대표 의석수	전체 의석수
러시아연방공산당	68	43	111
일치당	66	10	76
조국 - 전러시아	33	29	62
우파연합	24	5	29
야블로꼬	17	5	22
지리노프스키 블록	17	0	17

〈표-4〉 2003년 두마선거결과 주요 정당별 의석수

정 당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대표 의석수	전체 의석수
통합러시아	103	82	185
러시아연방공산당	56	42	98
자유민주당	26	1	27
우파세력연합	15	9	24
조국블록	25	4	29

째 러시아연방 대통령선거는 총리이자 대통령권한대행인 푸틴 후보가 11명의 후보자 가운데 총투표수의 53%를 획득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위를 한 유가노프는 29.7%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2004년 3월 14일 실시된 세 번째 러시아연방 대통령선거는 “빠른 시일 안에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국가건설”을 천명한 푸틴 대통령이 총투표수의 71.2%를 획득하는 압도적인 승리로 끝맺음을 하게 되었다. 5명의 후보가 경합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새로운 후보 하리토노프(Nikolai Haritonov)는 13.7%를 획득해 2위에 머물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유가노프, 야블로꼬당의 야블린스키, 자유민주당의 지리노프스키 등 유력인사들이 출마를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러시아연방의 의회 및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이 획득한 지지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마 선거는 1993년 12%, 1995년 22%, 1999년 24%, 2003년 12%의 지지율을, 대통령 선거는 1996년 40%(2차투표), 2000년 29%(1차투표), 2004년 13.7%(1차투표)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다.<sup>25)</sup>

25) <http://em.wikipedia.org/wiki/cprf> (검색일 2004년 7월 7일)

이러한 결과는 혼란하고 불안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혁과 민주화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우는 옐친시기에는 러시아연방공산당에 대한 러시아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지만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강조하는 푸틴정권이 출범하면서 러시아연방이 비교적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러시아연방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 러시아연방공산당의 분열

공식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교리를 강조하기 보다는 ‘민족적 애국주의’(National Patriotism) 또는 ‘국가 애국주의’(State Patriotism)를 표방하며 1993년 2월 쥬가노프를 대표로 재결성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적어도 2003년 12월 국가두마 선거 때 까지는 러시아연방의 모든 사회주의 세력 가운데 유일하게 정당 명부제 투표율 5%이상을 획득한 원내 제1당으로서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누려왔다. 또한 옐친정권의 혼란하고 불안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개혁과 민주화로의 이행기에 ‘충실한 반대자’(Loyal opposition)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계급투쟁보다는 계급화합을 내세우며 합법적인 원내투쟁에 주력해온 만년 야당으로서의 면모도 동시에 갖는다.

러시아연방공산당 재건 과정에서 쥬가노프는 러시아연방 전역에 걸쳐서 당 조직 기구를 새롭게 복원 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 가운데 모든 좌파와 우파를 하나로 묶고자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급진좌파인 안벨로프(Viktor Anpilov)의 ‘러시아 공산주의 노동자당’과 온건우파인 바르타자토바(Lyudmila Vartazatova)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었다. 안벨로프는 당내 많은 행동주의자들을 그리고 바르타자토바는 많은 피동적인 연금 수령자들을 상실하게 되었다.<sup>26)</sup> 그런데 많은 공산주의 운동 분파들이 쥬가노프를 중심으로 연합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의 강력한 집권의지였다. 그러나 쥬가노프의 강력한 집권의지는 동시에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주요한 약점 이기도하였다. 명백한 프로그램이나 이론, 그리고 권력장악을 가능케하는 대중운동이 결여된 그의 권력추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요소를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잠재적인 분열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6) Boris Kagarlitsky, "Russia: Five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n" in <http://www.kagarlitsky.narod.ru/iv66.html> (검색일 2004년 7월 7일)

실제적으로 급진적 공산주의 세력들은 합법적 정치 공간 밖으로 쫓겨나고 비합법적 투쟁을 위한 대담성과 지도자 및 자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1993년 10월 다수의 공산주의 세력으로 구성된 보수의회를 옐친이 포격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유가노프는 직접적인 관여를 피하고 침묵하였다. 또한 의회 내의 유가노프 분파는 1994년 봄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광부들의 파업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정부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다. 1994년 중반,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의회에서 유일한 좌파정당이었을 뿐 아니라 유일한 주요 전국정당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점차 러시아 사회 전반에는 유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감정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1995년 말의 국가두마선거와 지방의회선거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sup>27)</sup>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1995년 정부예산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1996년 6월과 7월, 대통령선거에서 온갖 변칙과 부정수단을 동원한 옐친에게 아깝게 패배한 이후, 유가노프는 옐친정부에 보다 협조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 원내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다시 정부예산을 승인해주고 장관임용에도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1996년 8월 러시아연방공산당 주도로 결성된 ‘인민애국주의연맹’은 민족적 애국주의의 토대 위에 좌파 및 중도파 민족주의 세력들과의 광범위한 연합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였는데, 이 때문에 민족적 애국주의 세력연합의 유지에 몰두했던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수많은 노동자 계급의 문제에 별로 관심을 갖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극좌파, 중도파, 우파로의 명백한 이데올로기적 노선대립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극좌파는 셰닌(Oleg Shenin)등이 중심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전통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반인민적 정권’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집권과 소비에트 체제의 재건을 주장하며, 우파는 국가두마의장인 셸레즈노프(Gennady Sheleznov)와 국가두마 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마슬류코프(Yuri Masluykov)등이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사회민주주의화를 지향한다. 중도파는 유가노프와 쿠프초프(Valentin Kuptsov)등이 중심으로 애국주의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광범위한 지지세력의 규합을 시도하고 있다.<sup>28)</sup>

1999년 국가두마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연방공산당은 표면적인 분열의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당내의 여러 분파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조직 결성을 시도하

27) Boris Kagarlitsky, "Russia: Is there life for KPRF after Yeltsin?" in <http://www.greenleft.org.ru/back/2001/432p22.htm> (검색일 2004년 7월 7일)

였다. 온건 좌파인 포드베레즈킨(Aleksei Podberезkin)이 ‘정신적 유산’이라는 정당을 결성하였고, 2000년 7월에는 중도 좌파 애국주의를 지향

**열린시기에는 러시아연방공산당에 대한 러시아국민 지지도가 높았지만 푸틴정권이 출범하면서 러시아 연방이 비교적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러시아연방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로시아’ 운동이 국가두마의장 셸레즈노프를 대표로 조직되었는데, 이 운동은 크렘린과 건설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999년 국가두마선거에서도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원내 제1당의 위치를 공고히 유지하는 상황에서 여러 분파들의 독자적인 조직들은 대단히 미약한 지지수준을 유지할 따름이었다. 보다 결정적인 당분열의 계기는 2003년 국가두마선거에서 원내 제1당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참패이다. 특히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엄청난 액수의 공천헌금을 받으며 올리가르히(과두재벌)들을 전국구후보에 올려놓았고 257명의 지역구 후보의 19%를 대기업 인사로 공천함으로써 이에 커다란 불신감을 갖게 된 많은 공산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초래했다. 즉 이것은 공산당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고 따라서 그동안 공산당의 절대적 지지자들인 빈곤계층, 연금 생활자들, 반정부적 성향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다른 민족애국주의 정당인 조국블록이나 자유민주당, 심지어 친크렘린 정당인 통합러시아 지지로 돌아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3년 국가두마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2004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쥬가노프 대신 하리토노프가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총 유효투표수의 71.2%를 획득한 푸틴의 압승으로 끝난 대통령선거이후 러시아연방공산당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결국 2004년 7월 1일 러시아연방공산당 제16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 158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쥬가노프를 당 대표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다.<sup>28)</sup> 이에 대해 쥬가노프는 즉시 반발하고 앞으로 당의 미래를 7월 3~4일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7월 3일에 러시아연방공산당은 2개의 전당대회를 따로 치러야 했다. 쥬가노프가 주도하는 전당대회는 참석대의원 246명 중 214명의 찬성으로 쥬가노프를 당 지도자로 지지함을 밝혔다. 반면 쥬가노프 반대세력들이 주도하는 전당대회는 참석대의

28) 문수연, 앞의 글. p140

29) <http://politics.pravda.ru/politics/2004/1/5/8/17337ZYGNOV.html> (검색일 2004년 7월 7일)

원 262명 중 146명의 찬성으로 유가노프 반대자들을 당의 지도자들로 승인하였다.<sup>30)</sup>

## V. 맺음말

VCIOM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지지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66%는 러시아연방공산당 유가노프의 리더십이 약하다 보고 있으며 24%만이 유가노프가 강한 지도자라고 응답하였다.<sup>31)</sup> 게다가 최근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친 유가노프 분파와 반 유가노프 분파로 양분되어 서로 반목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이러한 분열과 쇠퇴현상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슬로건에만 의존해 온 당 지도부의 무사안일함과 상황판단 능력의 부재에 직접 기인한다. 즉, 푸틴정권의 출범으로 엘친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러시아연방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침체,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가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이 되었던 소외된 빈곤계층이나 연금생활자, 노년층, 퇴역군인들과 관료들에게는 보다 실천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러시아연방의 정치과정에서 여전히 제1야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급진적 좌파들은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야당의 지위를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러시아연방에서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주로 농촌과 소도시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노동자와 광범위한 지식인층 그리고 젊은 청년층의 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시대의 러시아가 점차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나아갈 수록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정체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 변화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포스트 공산주의 시대를 맞고있는 오늘날 자본주의 러시아 연방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요구받고 있다.

30) 지난 6월 러시아연방공산당의 2인자인 온진과 쿠바초프가 사임을 발표했으며 젊은 지도자들을 위해 유가노프도 용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가노프는 셀레즈노프와 세미긴 (Gennady Semigin)을 비롯한 많은 인기있는 지도자들을 당에서 제명하였다. <http://www.hindustantimes.com/News/181.htm> (검색일 2004년 7월 7일) 향후 2개의 러시아연방공산당 사이에 정통성 시비가 벌어질 전망이다.

31) <http://politics.pravda.ru/politics/2004/1/5/8/173372ZYGNNOV.html> (검색일 2004년 7월 7일)

## ‘계획’ 과 ‘시장’ 의 역동성

김 승 채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 아직도 두 마리 고양이는 존재하는가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소평(鄧小平)은 신중국 건설 이후 국가주도 하에 발전을 거듭하던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의 자체모순과 더불어 자연재해로 인해 큰 시련에 봉착하자 소위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sup>1)</sup>을 주장하면서 모택동(毛澤東)과는 다른 정책으로 생산력 발전에 만전을 기한 적이 있다.

당시 덩소평이 흑묘백묘론을 주창할 때는 검은고양이와 흰고양이보다는 ‘쥐를

1)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는 논리로,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이든 사회주의적 요소이든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의미한다. 흑묘백묘론은 신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신중국을 건설한 모택동 주석이 사회주의를 통해 중국을 철저하게 변화시킨 이래 정치우선의 논리로 중국사회주의를 변화시켜 나가다가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운동에 와서 한계에 봉착하자 유소기(劉少奇)와 함께 생산력 증대를 강조하던 덩소평(鄧小平)이 추진했던 조정정책 시기의 대표적인 논리였다.

잡는' 목적(결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유생산력론(唯生產力論)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의 유생산력론에는 '계획'과 '시장'의 논리가 내재해 있었다.

비록 등소평은 인민공사의 재조정을 통해 농업부문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가져왔으나, 생산력 증대를 도모했던 그의 정책은 농업을 비롯하여 공업 등 경제의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문예와 학술에까지도 확대되어 운영되었다. 등소평이 이렇게 사회의 전분야에 걸쳐 유생산력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정치우선, 사상우선에 기초한 '계획'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이 전사회적인 생산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신중국 건설의 이상(理想)으로 제시되었던 전인민(全人民)의 평등과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안에는 '계획'과 '시장'이라는 두 요소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중국특색적 사회주의'에서 철저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全会에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연평균 약 9.7%의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중심에는 등소평이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중국의 괄목할만한 성장의 배경에 등소평이 있었다면 그런 등소평의 기저에는 '계획(計劃)'과 '시장(市場)'<sup>2)</sup>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1965년 유소기와 등소평에 의해 추진된 조정정책의 본질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과 정책을 통해 구현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계획'과 '시장'의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은 바로 '계획'과 '시장'의 역동성에서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유용한 분석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코나이(Janos Kornai)의 지적에 근거할 때도 '계획'과 '시장'을 통한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코나이는 사회주의 체제, 특히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세 지주로 독점적 이데올로기, 당·국가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를<sup>3)</sup> 지적하면서 이 세 요소는 서로 항상 연관되고 응집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중에서

2) 여기서 말하는 '계획'과 '시장'이라는 개념을 거칠게 말하면 계획=사회주의, 시장=자본주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사회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계획'을 상정하고 자유경쟁적 시장원리를 운영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로 '시장'을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의 모습을 '계획'과 '시장'으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것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 요소에 의해 운영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요인에 의해 운영되는가에 대해 분석하려는 배경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3)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의미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4)</sup>

그런데 중국 사회주의의 경우 독점적 이데올로기로서 공산주의는 모택동 시기 이후 지금까지 줄곧 강조되고 있고, 특히 등소평이 4항 기본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공산주의와 공산당의 지배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국가체제의 경우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특히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당정분리와 공산당 역할의 상대적 약화 혹은 감소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당국가체제로서의 위상은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산주의의 본래적 원칙에 철저한 당국가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를 평가할 때 남는 마지막 변수는 사회주의 경제라는 변수다. 개혁개방 이전에도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부에서의 논란도 있었지만,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경제부문이다. 1976년, 1980년, 그리고 1989년의 천안문 사건 등이 있어 정치, 사상적 변화의 흔적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분야의 변화에 비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12기 3중전회를 통해 공식화된 ‘계획적 상품경제’,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13전대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그리고 1992년 중국공산당 14전대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은 물론 ‘계획’ 과 ‘시장’ 의 논리가 교묘하게 연결되어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측면은 바로 사회주의 경제, 그 중에서도 ‘계획’ 과 ‘시장’ 의 역동성에 대한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아직도 두 마리의 고양이(計劃과 市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정치우선과 경제우선, 이데올로기와 실천 등)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계획’ 과 ‘시장’ 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

4)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계획: 새로운 중국의 희망(?)

### ‘계획’의 형성과 발전

1921년 창당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신중국을 건설하였다. 국민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학정(學政)에 반대하면서 항일투쟁의 승리를 통해 신중국 건설의 중심에 있던 모택동은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정복하기 위한 이상(理想)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모든 인민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었다. 그런 이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택동이 사용한 도구가 바로 사회주의였고, 그것의 핵심이 ‘계획’이었다. 따라서 신중국 건설 이후 모택동의 화두는 ‘계획’이었으며, 그것은 신중국의 희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당 후 28년 동안 토지혁명전쟁, 해방전쟁, 항일전쟁을 통해 제국주의, 봉건주의 그리고 관료주의를 일소하고 탄생된 신중국은 구중국의 경제체제를 이어 받아 구조적으로는 반봉건·반식민지적 경제구조와 상품경제가 미발달한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국 정부의 당면과제는 구시대의 경제구조와 성격을 사회주의적으로 변혁하는 것이었다.

스탈린형(型) 개발전략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자원을 적절하게 특정한 어떤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보다 짧은 시간에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장’과는 달리 ‘계획’에서는 소비자 주권이 아니라 계획자 주권이 작용하는데 그 때문에 소비자 또는 대중의 후생수준은 저하되게 되었다.

스탈린형(型) 개발전략에서 채용된 계획제도는 중앙집권형 계획체제이다. 즉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켜 중앙과 기업, 소비자 사이를 지령과 보고의 수직적 의사결정기구로 묶으려는 계획제도이다. 중앙집권적 계획체제를 위해 중국은 1952년 국가계획위원회, 국가통계국 등을 설립하여 중앙통제의 지령성 계획경제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총생산량, 임금, 이윤 등 지령성 지표를 각 기업에 하달하고 기업은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기업 이윤은 국가에 일괄적으로 상납되고 필요한 투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통제정책이 실시되었다.

‘계획’에 대한 모택동의 실천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즉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시작하여 우선 2,858개의 관료독점자

본의 수중에 있던 기업을 몰수하고, 주요 은행, 철도 및 해운회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을 국가통제하에 두었다.

**모택동이 실시한 계획은 전형적으로 스탈린식 발전 모델이다. 스탈린식 경제정책의 목표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었다.**

1952년까지 토지 개혁을 완료하여 농업부문의 봉건주의적 생산관계가 해체되어 4,330만 헥타르의 농지가 소작농, 영세농에게 배분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농업부문에서 생산력이 발전하고 국내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법(1950년 6월 30일)을 통하여 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하고, ‘**耕者有其田의 原則**’에 따라 그 몰수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합법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에 의한 토지 분배는 가족단위의 분배가 아니라 인민 개개인에게 분배하여 토지소유와 가족제도 간의 연계고리를 단절하여 사회의 기본단위를 와해시킴으로써 공산당의 통치를 제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공산혁명 이후 토지개혁혁명의 완결은 중국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인구를 토지를 매개로 하여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치제도로 작용하였고, 또한 생산수단의 공유를 바탕으로 공산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수단이였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에 의한 토지 개혁은 경제적인 의의는 물론 정치적인 의의까지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을 종료한 뒤 농업부문의 협동조합화를 강화하였다. 1956년까지 1억 2천만의 농가의 96.3%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되면서 농업부문에서 개체경제의 사회주의적 전환이 종료되었다. 또한 수공업의 협동조합화가 동시에 추진되어 1956년까지 6백만명 이상의 수공업자(전체의 92%)가 10만개 이상의 생산자조합을 결성하였다.

초기에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사회주의화시키는데 있어서 중국은 “**無產階級專政下의 國家資本主義**”라는 레닌의 사상을 원용하여 여러 형태의 국가자본주의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사기업의 생산물을 국영유통기구에서 매입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국영기업의 생산물을 사영상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공기업과 사기업간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일시적으로 사영부문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를 국영부문과 조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투입하였다. 1956년까지 6만개 이상의 공장과 28만개의 상점들이 합작기업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상·공·운수 분야의 국영기업은 지령성계획을 시달하여 관리를 하였는데, 중앙의 각 부서가 관리한 대형공업기업은 1953년도에 2,800여개였고 1957년도에는 9,300여개에 달하여 총 기업수의 16%를 차지하였으며 생산액의 4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형기업들은 조달물자는 국가의 조달가격으로, 판매에서는 상업부 및 물자 부서의 수매가격으로 생산과 판매에 대한 관리를 받았으며 중앙정부가 재정수지를 총괄하였다. 이윤과 감가상각비는 전액 중앙으로 납부되었고 기술개발비 및 고정자산투자비에서도 국가의 재정지출 형식으로 중앙의 집중관리를 받았다.

주요 생산자료의 계획적인 조달 및 통일분배는 제1차 5개년계획의 '저에너지·물자가격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953년 전국에서 중요한 물자에 대하여 통일적 배분제도가 실시되었다. 각종 물자를 국가통일 분배물자, 중앙 공업주관 부서 분배물자, 지방이 분배하는 물자로 나누어 분배하게 된 것이다.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배분한 공산품은 110여가지에서 300여가지로 증가하여 공업총생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높아졌고, 국가통일 분배물자는 227종에서 532종으로 증가하였다.

모택동이 실시한 계획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1953년부터 시작된 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모택동이 실시한 계획은 전형적으로 스탈린식 발전모델이다. 스탈린식 경제정책의 목표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공업의 우선발전과 생산재 생산의 확대, 중공업의 중점육성과 경공업·농업·상업·교통운수업의 동시적 발전, 품질향상, 기술개선, 소비와 투자의 적정한 비율유지 등이며 이중 가장 강조된 것이 중공업 우선 정책이다.

중공업 우선전략은 공업생산의 현저한 발전을 가져온 반면 농업의 침체를 야기함으로써 낙후된 농업국이라는 현실적 모순을 확대시켰다. 농업부문의 저성장은 오히려 공업의 발전에 장애로 와 닿았는데 특히 농업생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공업의 경우 성장률이 1953년의 30.2%, 1954년에는 16.3%, 1955년에는 5.7%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침체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부터 1957년 사이에 시행된 제1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중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1957년 계획기간이 종료되면서 공업부문의 생산액은 128% 증가하였으며, 농업부문은 24.8% 증가하였다. 이 기간 농공업의 순생산액 연평균증가율은 10.9%

로, 공업이 18% 그리고 농업이 4.5%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9%의 신장율을 나타냈다.

토지와 공장 등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농업의 집단화와 공업부문에서 집체화와 전인민의 소유의 확대를 통하여 모택동은 불완전한 ‘시장’ 보다는 완전한 ‘계획’ 이 신중국의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증명하였다. 사회주의의 핵심인 ‘계획’ 은 이제 신중국의 희망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회주의는 인적·물적자원의 완전고용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주의보다 우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물론 사회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볼 때 중앙계획에 의거한 사회주의 발전 노선은 그 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매우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업화 초기단계에 나타났던 놀라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달성은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요소의 효과적인 동원에 기인하고 있다. 모택동에 의해 시작된 농업과 공업의 ‘계획’ 도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분명하게 산출해 냈다.

그러나 만민평등과 공동부유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기 위한 모택동의 ‘계획’ 은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계획’ 의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도록 오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이 1958년부터 시작된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계획’·만능주의의 좌절과 ‘시장’의 태동

1957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마친 모택동은 보다 야심차게 ‘계획’ 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모택동은 거의 ‘계획 만능주의’ 정도로 ‘계획’ 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추진하였는데, 소위 삼면홍기운동(三面紅旗運動)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 대약진운동, 그리고 인민공사운동이 그것이다.

1958년 5월 중공당 제8기 5중전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은 신민주주의를 거치면서 사회주의로 전환된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를 신속히 완수하고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는 것이다. 이것은 모택동이 ‘계획’ 의 효율성을 감지한 이후 ‘계획’ 의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1953년부터 1957년 사이의 제1차 5개년계획에 의하여 비약적인 성

장을 했으나, 중공업의 집중적인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무시로 경제의 부문간 불균형과 경제의 악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균중운동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1957년말부터 시작된 대약진운동이다.

대약진운동의 구체적인 형태는 농촌에서 농업증산을 위한 균중운동(수리시설확충과 퇴비증산운동)과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공업육성과 지방공업대약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1959년 이래 3년간의 大凶年과 목표량 달성의 主力과 통계의 조작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모택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당은 7년 내에 영국의 생산수준을 넘어서고 8년-10년 이내에 미국의 수준을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제2차 5개년계획(1958-1962년)을 수립하고 공업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26%-32%, 농업은 13%-16%로 성장률을 높게 편성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토대로 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실현하려 했던 대약진전략은 공업의 강철중심, 농업의 식량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약진은 대약진운동 자체의 비현실성과 부적합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시행과정, 그리고 중소분쟁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효과 인하여 실패로 끝났다.

1차 5개년계획의 성공에 들떠 있던 모택동은 '계획'의 성과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것이 대약진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택동의 의지는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해와 통제 체제의 오작동으로 인해 효과를 볼 수 없었고, 그것은 사회주의의 천적(天敵)인 '시장'에게 자리를 내주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한편 모택동은 중국 농업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중국농촌의 봉건적 요소를 일소하여 사회주의적 집단소유제를 확립함으로써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단계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발판까지도 갖추는 목표를 둔 대규모의 다목적이고 종합적인 농업협동운동인 인민공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인민공사는 합작사보다 더 큰 규모로 농업생산을 집단화시키는 방법이고, 지방 정부와 같은 것으로서 농업, 교육, 사회복지, 보건위생, 공공사업, 군사방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토지, 농기구, 가축, 가옥, 합작사의 출자분도 모두 인민공사에 출자하여 철저한 집단소유제를 채택하였으며, 그 대신 식량, 의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5가지 분야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민공사는 합작사가 갖고 있던 自留地, 개인의 사적 소비품, 은행예금, 가축 등의 개인재산을 몰수하여 그렇지 않아도 합작사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의 불

만을 가중시켰고, 인민공사의 3대원칙인 ‘조직의 군사화’, ‘행동의 전투화’, ‘생활의 집단화’는 사실상 농민들을 24시간 혹사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생활의 집단화는 사실상 가정을 소멸시켜 오히려 생산의식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에 근거하여 농업의 발전을 기초로 공업을 성장시키려던 모택동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삼면홍기운동은 농민의 반발, 농업생산의 저하, 공업 발전의 미전환 등으로 국내정책에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모택동에 의한 ‘계획 만능주의’가 사회주의 신중국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임으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것은 ‘시장’의 논리를 도입한 경제의 조정정책으로 유소기와 등소평에 의해 추진되었다. 중국은 1961년에 들어서면서 제반 경제정책을 재조정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모택동은 과거 몇 년간의 과업수행에서 발생된 오류에 대해 자아비판 하면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공업생산 및 건설규모의 삭감, 노동자, 간부 및 도시인구의 축소, 농업생산의 강화, 인플레이션의 완화 등 몇 가지 수단을 제안하면서 2선으로 후퇴하였다.

모택동의 2선후퇴로 전면에 등장한 유소기와 등소평은 국민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균형을 위해 중화학에 대한 투자를 하향조정하고, 인민공사의 하부단위로서 생산대의 기능을 활성화시켰으며, 인민공사에 속해 있는 가족단위의 부업을 장려하면서 농촌자유시장을 육성하였다. 그리고 1963년부터 3년간에 걸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농업을 기초로 하고 공업을 주도 산업으로 하는 정책을 완수하고 공업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국민경제상황은 호전되었고 공업과 농업생산은 상당한 균형을 이루었다. 중국경제는 196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회복국면에 들어섰고 1965년에는 총생산액에서 공업은 17.5%, 농업은 11.1%의 신장률을 보였다.

유소기와 등소평에 의해 추진된 조정정책은 국가중심의 계획을 다소간 완화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농업생산의 증대를 도모하였고, 중공업, 농업, 경공업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도모하였다. 이것은 ‘계획 만능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시장’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의 조정정책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개선되자 ‘계획 만능’의 좌파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문화대혁명으로 ‘시장’은 철저하게 붕괴되고 더불어 중국 사회주의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 ‘시장’ 말살정책과 ‘계획’의 맹신

경제 조정정책으로 중국 경제는 비교적 활기에 차 있었다. 경제성장률도 높았고 내륙지역을 국가전략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점차적으로 공업입지를 재조정함으로써 내륙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모택동은 우파 반혁명분자들과 우파추종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명의 필요성을 제창하면서 전면적인 문화대혁명을 시작하였다.

문화대혁명은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자본주의 추수정책으로 평가하고, 이제 다시 한번 ‘계획’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문화대혁명을 거쳐 1970년도 제4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국유기업에 대한 자산투자권한이 지방재정의 책임으로 되어있던 것을 취소하고 중앙재정의 특별지출로 바꾸었으며 지방과 각 부서 및 기업의 예산외자금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각 사업의 심사허가권도 다시 중앙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넣을 수 없도록 하였다. 대중형 건설사업은 일률적으로 국무원 혹은 국가계획위원회가 허가를 하며, 모든 기본건설은 모두 반드시 심사허가 권한에 따라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기본건설 사무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또 물자관리 권한에 대해서도 대약진운동 기간 중에 물자의 공급경로가 문란해져서 각 부서, 지역별로 국유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물자의 분배계획과 공급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국가경위에 소속되어있던 물자관리총국을 국가물자총국으로 바꾸고 지방의 분배물자에 대하여 중앙으로부터의 수직적인 관리체계를 세웠다. 따라서 중앙관리 물자는 통배물자 326종, 부관물자 253종으로 579종이 되었다.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관리 권한과 물자관리 권한을 중앙으로 재집중하였고, 국유기업 운영상의 제반 처리문제도 중앙에서 관여하게 되었으며, 중앙 각 부서 직속 기업의 행정관리, 생산지휘, 물자관리배치, 간부배치권은 모두 중앙의 주관 부서로 귀속되었다.

이제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계획 만능주의’가 다시 한번 중국 사회주의의 근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장’의 손에 맡겨졌던 다양한 조치들은 이제 ‘계획’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으며 이것은 ‘시장 말살’과 ‘계획 만능’ 혹은 ‘계획 맹신’으로 치닫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 만능’ 정책은 산업간 생산비중과 축적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총생산액 중 생산액 비중을 보면 1965년 농업(37.3%), 경공업

(32.3%), 중 공 업 (30.4%)의 비중에서 1976년 농 업 (30.4%), 경 공 업 (30.7%), 중 공 업 (38.9%)의 비중을 나타나 산업간 생산관계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계획 만능주의’가 중국 사회주의의 근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장’의 손에 맡겨졌던 다양한 조치들은 이제 ‘계획’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으며 이것은 ‘시장 말살’과 ‘계획 만능’ 혹은 ‘계획 맹신’으로 치닫게 하였다.**

의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공업내의 경·중공업 부문의 비례관계도 1965년의 51.6 : 48.4에서 1976년의 44.2 : 55.8로 중공업부문의 생산비중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냈다. 특히 계획지표를 높게 설정하여 고축적률을 유지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착취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문화대혁명 후기로 갈수록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모택동의 이론과 이념은 점점 국민들로부터 흡인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중국 사회주의에서 ‘시장’은 없어지고 ‘계획’만이 생존하였으나, 그것은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시장’ 불신과, ‘계획’ 맹신으로 인한 사회주의의 종말을 예고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신중국에서 ‘계획’은 과연 희망이었는가?

세계체제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국면의 발전 궤적을 갖는다고 한다. 즉 제1국면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의 이탈(withdrawal)이고, 제2국면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국가간 체제로의 재편입(reintegration)이다. 중국 사회주의는 창당 초기 토지혁명을 필두로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시장으로부터 제1차 이탈을 하였고,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 사회주의 축적의 물질기초의 형성을 위한 사회주의제도의 개혁, 사회주의 집체관리제도의 확립, 그리고 과도기 총노선을 통하여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함으로써 제2차 이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 세계시장과의 단절은 중국사회주의 체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와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주관리체제는 자연적으로 해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중국 건설 이후 초기의 성과를 지속시키지 못함으로써 ‘계획’은 더 이상 희망으로 남아있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계획’ 자체가 갖는 한계와 더불어 사회주의에 적대적이었던 주변국 상황이 더 이상 중국에 주요 모순이 아닌 부차적 모순, 2차적 모순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재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8년 중공당 11기 3중전회를 통한 등소평의 개혁개방 선언은 바로 ‘계획’ 보다는 ‘시장’

을 전면에 포진시키는 전략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희망이 ‘계획’에서 ‘시장’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 ‘시장’, 제2의 혁명인가?

### ‘계획’의 한계와 ‘시장’의 괴력(怪力)

사회주의국가의 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 최대의 역사적 딜레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이상적인 세계혁명적 목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중상주의적 국가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 사회주의는 중상주의적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중국사회의 지연된 생산력을 회복하고, 중국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혁명목표를 달성하여, 세계경제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던 중국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연계하여 국가자본을 축적하여 반주변부의 지위를 극복하고 핵심으로의 지위상승을 지향하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사회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하여 서방선진국을 추월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도 국가는 ‘사회적 총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총자본가의 역할에 한정하는 한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국가의 정책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중국은 ‘계획’에 기초한 내부 자원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체제 내적 한계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부재로 체제위기의 극복 위하여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혁을 필요로 했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이라는 ‘시장’의 중시로 나타나게 되었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를 통하여 덩소평은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10년 대란(大亂)의 문화대혁명과 모택동 시기의 ‘계획’ 만능에 따른 폐해로부터 벗어나 ‘시장’ 중시를 통한 생산력 제고를 추진하였다. 제11기 3중 전회에서 당내 다수파를 장악한 덩소평은 경제 발전과 4개 현대화를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선언하고, 사상 해방과 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담한 문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 경제의 ‘3단계 발전 전략’인데,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GNP를 2배로 성장시켜 원바오(溫飽) 수준을 달성하며, 2단계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다시 GNP의 2배 성장

을 달성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샤오캉(小康)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마지막으로 3단계는 21세기 중엽까지 완전한 현대화를 완성한다(따통(大同))는 것이다. 원바오는 인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개발 도상 국가의 낮은 단계를, 샤오캉은 중류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는 개발 도상 국가의 중간 수준을, 그리고 따통은 전면적인 현대화가 달성된 이상적인 복지 사회로서 선진국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1979년부터 중국 경제는 본격적인 경제 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경제 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1979년 6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조정(調整)·개혁(改革)·정돈(整頓)·제고(提高)”의八字方針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개혁 초기 단계의 정책 목표가 ‘조정’에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 이후 중국 경제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조정 정책의 조기 종결을 논의하였다.

한편 중국의 빠른 성장은 제6차 5개년계획 기간(1981년-1985년) 동안에도 계속 되었다. 농업의 발전은 농가별로 농지를 임대 받아 생산 계약을 맺어 할당량을 생산하고, 정부 지정의 가격으로 정부에 납품하고 남은 초과분을 자유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농가경영청부책임제’와 같은 새로운 경영 방식의 도입에 의한 것이었다. 이 방식은 토지의 상속이나 임대가 허용되었다. 이렇게 하여 농민들은 전인민소유인 토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개혁 초기의 중국 경제는 사회주의 하에서 누적되어 온 도농간 및 산업간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산업 구조의 불균형도 점점 해소되어 갔으며 국민의 생활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물론 이 시기의 개혁은 ‘시장’(메카니즘)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실험적인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 가격 체계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가격 형성 메커니즘의 개혁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가격 체계를 고정가격, 부동산가격, 협상가격, 시장가격 등으로 구분하여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금융 부문에서도 1979년 중국 농업은행과 중국 건설은행을 설립한 데 이어 1984년에는 중국 공상은행을 설립하여 중국 인민은행의 상업 금융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아직 금융 시장 및 통화 정책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이 시기의 ‘시장’의 괴력은 다음의 지표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개혁의 초기에는 특히 농업생산성 향상과 산출물 증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8년-

1984년 사이에 농업 산출량은 연평균 8.8%의 성장을 기록했고, 1984년부터는 전국의 기본적인 식량자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개혁 초반인 1981년-1985년 사이에 추진된 제6차 5개년계획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0.8%였다. 그리고 당시 국유기업을 독립된 경제 주체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혁 조치(1978년-1983년)는 ‘분급관리(分級管理)’와 ‘방권양리(放權讓利)’로 표현되는데, 이는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임을 지방 정부와 기업에 분산 위임함으로써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이 시기에 이윤유보제(利潤留保)<sup>6)</sup>를 통해 1979년에는 기업에 대한 광범한 권한 이양으로 확대되었고, 1981년에는 전년도 이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유보 비율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에 더욱 강한 이윤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 사회주의는 이제 ‘계획’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신중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 ‘시장’의 팽창과 ‘계획’의 매력

개혁·개방의 선언으로 ‘시장’의 힘을 인식한 중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시장’의 팽창과 ‘계획’의 매력을 유지하는 사회주의 상품경제 혹은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고도의 생산력이 발달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고 인식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역사적 조건이라는 제약이 있어 공상적 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반성 하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과도적 시기가 아니고 하나의 독립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사회주의와 상품경제를 상호대립 혹은 대치하는 존재 관념을 타파하고,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12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획적 상품경제는 다음과 같다. 즉 상품경제는 자본주의 특유의 것이 아니다. 과거 중국은 생산수단 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계획경제는 상품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관점이 주류였다. 하지만 개혁파논리에 의하면 상품경제는 자급자족적인 폐쇄적인 자연경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분업이 발달

6) 기업이 수량, 품질, 이윤 등에서 국가의 계획을 달성한 경우에 이윤의 일부를 발전 기금, 집단 복지 기금, 노동자에 대한 상여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 않고 교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경제에 비해 상품경제는 사회적 분업을 기초로 각각의 생산자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자의 노동생산물을 교환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경제가 자본주의라는 도식은 어긋나고, 사회주의에서도 상품경제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품경제의 성질은 지배적 지위의 생산소유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단순 상품생산은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하는 소상공생산과 사회의 관계를 반영하고,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은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자본가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사이의 착취-피착취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연합된 분업·협업관계라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상품경제는 사유제 기초 위에서 맹목적 경쟁과 무정부주의적 생산이 지배하지만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공유제 기초 위에서 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국가의 거시적 계획 하에서 균형 있게 경제발전을 한다는 것이다.

상품경제에서는 화폐가 사용된다는 면에서 자급자족경제와 구별될 수 있다. 상품 교환은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가격이 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계획에 의해 잉여가 교환되는 산품경제(product economy)와 구분될 수 있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상품경제를 배척한 결과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생기와 활력이 결핍되어 사회주의가 본래 가져야 할 우월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지 산품경제 하에서는 시장의 수요·공급을 무시하고, 노동소비만 중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과 경영에 기업가의 적극성을 제약하여 능률저하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기와 활력 있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위해 상품경제는 발전시키고, 가격·화폐·시장을 활용하고, 계획경제와 상품경제의 조화측면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적 상품경제의 핵심과제는 ‘계획’ 과 ‘시장’ 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이다. 그동안의 이론적 성과를 총괄하여 1984년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양자는 상호 통일적이라 표현하였고, 1987년 13차 당대회의 조자양(趙紫楊)의 보고에 의하면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메카니즘”이라고 개괄하였다.

‘계획’ 과 ‘시장’ 의 관계는 이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과 비교해서 계획 중심적이고, 시장은 보충적인 결합형태이다. 국가 통제 하에서 시장이 존재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획’과 ‘시장’의 개념이 변화되었다. 계획은 지령성 계획에서 지도성 계획으로, 직접적 계획에서 간접적 계획으로, 실물지표체계에서 가격, 조세, 이자율, 환율 체계로 의미가 변화하였다. 시장은 소비재만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이 생산재와 생산요소도 상품으로 간주되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기업과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율권을 확대하여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시장·분업·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활발한 사회주의적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적 상품경제 추진 결과 중국의 경제적 성과는 이제 농촌을 넘어 도시와 전 산업으로 확장되었다. 즉 1986년-1990년 사이의 제 7차 5개년계획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7.8%, 1985년-1991년 사이 농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4%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향진기업은 개혁, 개방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1988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기업 수 1,888만여 개에 이르며, 종업원 수는 9,545만 명으로 농촌 노동력의 23.8%를, 총생산액은 6,495억 원으로 사회 총생산의 24.9%, 농촌 총생산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전국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은 9,500억원으로 전국 사회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4, 전국 공업총생산액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에 납부한 세금도 410억 원에 달한다. 향진기업의 이러한 발전은 과거의 농촌 공업이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운영되었던 반면 개혁 이후 새로 생겨난 향진기업은 농민 자신을 풍요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과 특히 농촌의 풍부한 노동력을 적절히 이용했다는 점 등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집체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수 천 개의 주식제 기업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 규범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간의 자금 조달 효과를 얻는데 그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주식 회사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국가와 기업의 분배관계에서도 계획적 상품경제의 효과는 남다르게 나타났다. 1987년부터 이개세<sup>7)</sup>를 기초로 여러 형식의 청부경영책임제<sup>8)</sup>가 실행되었는데 이는 “반드시 기본 액수를 유지하여 상납분을 확보하되 초과분은 유보하고 부족분은 스스로 보충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시험적 개혁은 국가와 기업 간의 이

7) 기존의 이윤 상납을 조세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와 기업 간 이윤 분배 방식을 제도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다.

8)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 소유의 전제 하에 기업에 경영권을 위임하여 생산, 판매, 재산관리, 인원관리, 임금책정, 유보된 이윤의 사용 등에서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익분배 관계를 점차  
규범화하고 기업의 평  
등경쟁 조건을 조성하  
여 통일적 시장의 형  
성을 촉진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  
의 자금 분배관계의

개혁을 통해 수년간에 걸친 지방의 중앙의존 상황을 타파하고 각급 정부의 적극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단일세제에서 유전세(流轉稅)<sup>9)</sup>와 소득세를 주체로 한 다양한 세종과 다채롭고 복합적인 세제로의 전환을 가져와, 대외개방과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에 기본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했다

결국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시장’에서 찾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경제를 완전하게 ‘시장’에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하여 ‘계획’과 ‘시장’의 조화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적 상품경제를 주장하게 되었다. 1987년 중국공산당 13차 당대회에서 조자양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로 진입할 때 거쳐야만 하는 최초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빈곤과 낙후를 점차적으로 탈피해 나가는 단계로 공업국가로 변화해 나가는 단계”이며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로 나가는 개혁과 탐색을 통해 활력이 충만한 사회주의 경제·정치·문화체계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단계”라는 지적은 ‘계획’과 ‘시장’의 절묘한 조화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촉진  
되자 기존체제와의 이질감으로 인해 정부정책 수립  
과 시행에 혼란이 적지 않았고, 천안문 민주화 운동  
이 발생하게 되자 중국 당국은 이 문제에 입장을 표  
명할 필요성은 등소평의 남순강화라고 할 수 있다.**

### ‘시장’: 창조와 붕괴의 아누스

중국은 1978년 12월 개혁개방 선언 이래 ‘시장’의 효과를 통해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농촌에서는 물론이고 도시에서의 경제성장은 과거 중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과를 도출하면서 이제 ‘시장’이 새로운 ‘창조의 화신’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창조의 화신’으로서 ‘시장’은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게 붕괴의 일면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다.

9)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 업무 중, 납세자가 취득한 판매수입 또는 영업수입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과세다.

1989년 천안문민주화 운동은 분명히 창조적 화신인 '시장'이 가져다 준 부산물임에 틀림없다. 중국은 '시장'의 부산물이 가져다 준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유혈진압이 피(血)라면, 1992년 덩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촉진되자 기존체제와의 이질감으로 인해 정부정책 수립과 시행에 혼란이 적지 않았고,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게 되자 중국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가 덩소평의 남순강화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덩소평은 남순강화에서 “계획경제가 사회주의는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은 있다”, “사회주의의 원칙은 첫째 생산력 발전에 있고, 둘째는 다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논쟁을 해방시켰다.

이후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제기되었고, 1993년 제 8기 전인대회에서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체제화하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사회주의가 곧 계획경제다'라는 등식을 부정하고, 사회주의 틀 안에서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연속선상에서 생산력을 강조하고, 사회적 상품경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예를 들면 계획과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체제모델이다.

그러나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덩소평이 말했듯이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계획적 상품경제론과 비교하여 기존의 공유제가 계획중심에서 시장이 보조적 역할을 했다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시장과 계획의 혼합형 경제틀 내에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시장의 기능이 철저히 긍정되고, 사회주의 틀 안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상품경제에서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자급경제와 비교되는 교환경제를 강조한 반면에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자원배분측면에서 시장과 국가를 바라보고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한다.

중국경제이론가에 의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고 지적한다. 어떤 기업이든 자주적 정책을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경영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생산품, 서비스, 화폐, 자본, 노동 등을 포괄하는 생산요소는 모두 가격원가의 유리성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한다. 경쟁 매카니즘은 경제안정의 견지를 어렵게 한다. 시장경제자체운영에 의존할 경우 주기적인 경제위기가 발

생하고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소유제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공유제이다. 전민 소유제, 집단 소유제 기업이 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개체, 사영, 외자기업은 시장 활동의 보충적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개체, 사영, 외자기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그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분배적 측면에서 공동부유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부(先富)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여 비노동적 부분의 분배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등소평은 “국가를 위한 많은 부를 창조하여 개인 수입은 당연히 많이 지고, 집단 복지도 당연히 좋아진다.” 라고 했다.

셋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정권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자본의 무제한의 증대와 수입의 양극분화가 초래되는 반면, 사회주의 정권은 조절메커니즘 및 사회정책으로 소득격차 확대를 저지하며 최종적 공동부유를 실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3년 10월의 중국공산당 16기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은 공유제(公有制)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소유제, 지도체제 개선,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개선에 관한 당 중앙 결정」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국유제 대신 공유제를 주축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 보다는 시장경제, 즉 ‘계획’ 보다는 ‘시장’ 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의 개혁개방 선언,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12기 3중전회에서의 ‘계획적 상품경제’의 채택, 1987년 10월 당 13전대에서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1992년 당 14전대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더불어 ‘계획’ 과 ‘시장’ 관계에 관한 또 다른 이정표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04년 3월 전인대 10기 2차회의를 통해 헌법을 수정하고, 그 가운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 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유재산을 공유재산과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렸다. 또한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고무하고 지지하며 인도한다’ 는 조항도 새로이 첨가하였다.

더욱이 2003년 당 16전대에서 당장에 삽입된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 주석의 3개 대표론도<sup>10)</sup>헌법 전문에 삽입해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의 전위정당에서 자본가까지를 포함

하는 국민정당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중국공산당이 사유재산보호 조항을 헌법에 삽입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보호를 천명함으로써 이제 중국은 ‘계획’ 보다는 ‘시장’의 원칙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력 발전을 위해 도입한 ‘시장’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에까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조치는 ‘시장’이 신중국을 부강한 국가로 창조해 줄 수 있는 요인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무산계급의 집합체인 공산당 붕괴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

### 계획의 완성인가, 시장의 만능인가

생산력의 해방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통한 중국 사회주의 체제 개혁은 ‘지령성 계획경제’에서 ‘계획적 상품경제’, 그리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거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이어 공유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유재산의 헌법적 보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과 ‘시장’의 절묘한 연합 매카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즉 중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말까지 사회주의의 본질을 ‘계획’에서 찾았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뒤 1980년대 전반기부터 계획경제를 주로 하되 상품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계획적 상품경제’를 제시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라는 교조적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파기하고, 사회주의와 상품경제의 연합가능성을 인정하였고, 그 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라는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발전단계를 상정하였으며, 이를 한층 발전시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통해 생산력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3년 10월 중국공산당 16기 3중전회와 2004년 3월 전인대 10기 2차회의를 통해 공유제를 소유제의 주축으로 하면서 사유재산의 헌법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계획’과 ‘시장’에 대한 관계를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주의’로부터 ‘중국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폐쇄경제체제’에서 ‘개방경제체제’로, 그리고 낙후된 경제체제에

10) 공산당이 중국의 선진생산력과 선진문화,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사상이다.

서 현대화된 산업경제체제로 지속적인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까지 ‘계획’과 ‘시장’이 공존함으로써 기업이 완전한 시장주체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시장기능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 생산요소 시장의 정체, 전국적 통일시장과 지역적 시장의 병존, 정부의 거시적 통제기능 미숙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같은 문제점 이외에 보다 본질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즉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시장’의 확대를 통한 생산력 발전이 ‘계획’의 완성인가 하는 점이다. 등소평을 비롯하여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胡錦濤)에 이르는 중국의 지도부는 ‘시장’의 도입과 확대발전을 통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충실하게 사회주의를 추구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중국 정부의 ‘시장’ 운영은 ‘계획의 완성’도, ‘시장의 만능’도 아닌 ‘계획’과 ‘시장’의 절묘한 조화이고 중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줄타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시장’이 더 발전하여 그 파장이 경제 이외의 분야로 확대될 경우 중국의 ‘계획’은 무너질 것이며, 또한 ‘계획’을 살리기 위하여 ‘시장’을 축소시킬 경우 중국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사회주의의 장래는 이제 ‘계획’과 ‘시장’의 줄타기보다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으며, 바로 이 선택이 체제생존의 방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정식(외), 『현대중국경제』(서울: 교보문고, 2001)
- 김한규, “전통시대 중국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역사비평』2000년 봄호(통권 50호)
- 당문성, “중국정치 변화방향: 6중전회에서 강택민의 강화를 중심으로”, 『국동문제』, 제24권 1호(2002.1).
- 박두복,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결과분석”, 『국제문제』, 제34권 5호(2003. 5).
- 박찬익, 「아시아 사회주의 제국의 개혁·개방정책」, 『韓國東北亞經濟學會』『東北亞經濟研究』第9卷, 第1號, 1997.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서울: 나남, 1997).
- 신광영,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
- 안병준, 『中國現代化의 政治經濟學』(서울: 博英社 1992)
- 안석교, 형혁규, “중국 국유기업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미래”, 『중소

- 연구』, 제23권 제4호(1999-2000).
- 오용석,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 중국의 경우”, 한국비교경제학회 제 7차 학술대회, 『아시아적 경제발전은 가능한가?』1998.12.
- 오일환,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화와 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 『중소연구』, 제23권 제4호(1999-2000).
- 이상만, “중국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내재적 의의”, 『현대중국의 이해 1』(서울: 한울, 2002)
- 이수훈, “반주변부적 국가발전의 성공과 좌절”,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서울: 전통과 현대 1998)
- 이중희, “중국 단위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위기”,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3호(2003. 10).
- 이희옥, “중국: 중국적 길과 사회주의의 그늘”, 『중소연구』, 제25권 제4호(2001-2002).
- 羅榮渠, 『現代化新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 羅榮渠 · 董正華 編, 『東亞現代化: 新模式與新經驗』(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 李曉, 『東亞奇迹與強政府-東亞模式的制度分析』(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96)
- 顧海良 張雷聲 主編, 『鄧小平的經濟思想』(北京: 中國經濟出版社 1996)
- 陶文達 主編, 『中國社會主義經濟發展論』(遼寧: 人民出版社 1990)
- 林毅夫, 蔡昉, 李周 共著, 『中國的奇蹟: 發展戰略與經濟改革』(上海: 人民出版社 1995)
- 趙曉雷, 『中國工業化思想及發展戰略研究』(上海: 上海社會科學出版社 1995)
- 『鄧小平文選』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十一屆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讀』(上, 下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7)
- 『十四大以來重要文選選編』(上/下) (北京: 人民出版社 1996)
- 中國統計年鑑(北京: 中國統計出版社), 各年號
- Barnett, Thomas ed., China Marxism and Democracy(New York: Humanities Press, 1996).
- Meisner, Maurice, Deng Xiao-ping Era: An Inquiry into the Fate of Chinese Socialism 1978-1994(New York: Hill and Wang, 1996).
- Ogden Suzanne, China's Unresolved Issues: Politics, Undevelopment, and Culture(New Jersey: Prentice-Hall, 1995).
- So, Alvin Y. & Chin, Stephen W. K., East Asian and the World Economy(Sage Publication, 1995).

# 민족적 긴장과 적대감에 따른 분절과 변환

김 경 숙 (공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서론

1990년대에 정치체제의 큰 변혁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흐름 속에서 동구의 공산당들이 모두 잔존해 내지는 못했다. 이들 국가와 정당들의 변환이 생각했던 것처럼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새롭고 분명한 현실적 정향을 제시하는 공산당도 없었다. 특히 이념적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 또는 민족적 공산주의나 유로코뮤니즘의 철학이 이러한 변화의 범위나 규모 및 강도를 설명해 내지도 못했다.

동구의 혁명적 변화들은 “나쁜 공산주의자들”과 “좋은 공산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과 “개혁적 공산주의자들”들을 구별해 내지도 못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정당의 엘리트들이 교체되고 모든 형태의 공산주의가 부정되었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정치사전에서 사라져 갔다. 그러나 이렇게 공산주의와 그 상징들이

사라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족적 운동들은 이를 대신할 이념이나 강령 또는 상징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공산주의적 정향이 확산되기는 했으나 단지 공산주의에 대한 깊은 적개심만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반공산주의 정향의 대부분은 분파적 차이점들을 감추기 위한 민족적 상징으로 활용되었을 뿐, 민주적 다원주의의 가치체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정권은 다원주의와 관용의 전형은 아니었다.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 정권들은 당시의 절박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의 동구 정부들은 그들의 정통성과 민족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슬로건이나 외국인 혐오적인 슬로건에 의존했다.

서구, 특히 북미에서도 반공산주의와 민주적 다원주의 간의 차이점들을 구별해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좌파의 권위주의와 우파 권위주의 간의 고유한 유사성을 인지하는 것은 더욱 그랬다. 동구 국가 국민들의 삶에 있어 정치적 영역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강압성은 약화되어 갔지만 그만큼 시민사회가 발전해 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파퓰리즘과 민주적 정책 결정을 구별하는데는 더 큰 혼란이 수반되었다.

이들 국가에서의 탈사회주의 과정에서 새로운 정권들이 이전의 공산주의자들 및 여타의 반대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정치 엘리트들의 연설과 민족적인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개괄하는 것 보다 새로 시작되는 정치 체제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들 신 정권들이 공산주의적 제도 및 입법 형태들을 기꺼이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은 새로운 엘리트들의 가치와 민주적 정향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다. 탈사회주의 과정에 나타난 특징들과 신 정권이 보인 정향들은 공산주의적 제도와 헌법 및 행정이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여전히 일당 지배를 지속하고자 했으며 다른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여전히 있었다. 즉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관습과 타성들이 이들 정권의 정부와 정치의 근간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Socialist Federation of Republics of Yugoslavia : SFRY)은 국가 사회주의로부터의 전환 과정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는데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SFRY 내 6개 공화국들의 다양한 탈사회주의로의 변환 과정은 정권 교체에 있어서의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타 동구 국가들이 민주적 다원주의 정권을 형성해 나가면서 직면했던 난관도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SFRY 내 공화국들의 다양한 경험들은 시민사회의 취약성, 제도적

견제와 균형의 결여, 경쟁적 엘리트의 부족, 파퓰리즘과 민주주의의 혼돈, 합의적 또는 연합적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기초 정립의 실패들을 잘 보여 준다.<sup>1)</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SFRY의 유고공산주의자연맹(League of Communists of Yugoslavia : LCY)이 탈사회주의 과정에 어떻게 분절되어 갔는가, LCY의 뒤를 이은 신정권들이 공산주의적 제도 및 입법 형태들을 유지하려고 하였음에도 각 공화국에서 LCY가 붕괴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SFRY에서 공화국 분리운동이 본격화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만으로 구성된 FRY(Federation of Republics of Yugoslavia)로 남게 된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LCY 분절의 역사적 조망

제2차 세계대전 중의 티토와 LCY가 이룬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는 공산주의자 레지스탕스 운동을 모든 유고슬라비아인들의 국가 내 반파시스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LCY는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전쟁 중에도 상당한 위엄과 지지를 얻었다. 1948년쯤에 LCY는 전쟁 전 왕조의 모든 자취를 근절시켰다. 그리고 그 해 스탈린과의 단절이 이어졌을 때 세계로부터 SFRY의 주권을 가진 유일한 세력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티토는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SFRY 국민들이 인정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으로 이러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또한 연방을 구성하고 일련의 민족적 타협을 이루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SFRY에는 4개의 공식 언어, 6개의 주권 공화국, 2개의 자치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SFRY의 민족적 단합은 “티토당, 인민”(Tito, Partija, Narod)이라는 대중적 슬로건에서 표현된 것처럼 티토와 당 및 군의 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기도 하였다.

민족적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법적-철학적, 제도적 리더쉽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SFRY의 민족적 타협들은 지속적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1966년 브리오니 회담(Brioni conference)과 1971년에 발생했던 크로아티아의 민족주의적 대응 및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졌다.

법적-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SFRY는 유고슬라비아 반파시스트 민족해방전선

1) Jim Seroka & Vukasin Pavlovic (ed.), 『The Tragedy of Yugoslavia-The Failure of Democratic Transformation』, (M. E. Sharpe Inc., 1992), pp.67-69.

(AVNOJ)의 민족적 신념과 “자주관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AVNOJ는 뻘치산이 주도하는 전시 임시정부였다. 이

**민족적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법적-철학적, 제도적 리더십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SFRY의 민족적 타협들은 지속적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1966년 브리오니 회담과 민족주의적 대응 및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졌다.**

는 전 지역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전후 공산정권의 초석이 되었다. AVNOJ는 SFRY가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임을 선언하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마케도니아에게는 공화국의 위상을 부여하고 각 구성 공화국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했다. 또 소수 민족들의 보호를 보장하고, 인종적으로 단일화된 정치적 단위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금했다. 티토정부의 정통성이란 이러한 전쟁 중의 반파시스트 저항 운동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리고 헌법적 논쟁들도 AVNOJ가 제시한 원칙 내에서 이루어졌다.

SFRY가 자주관리를 강조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것 역시 전후 연방의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했다. 자주관리제하에서 민족에 기초한 정치적 요구들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변형된 마르크스주의에 따라 민족주의는 반 마르크스주의적, 반 진보적, 반 자주관리적인 것이자 노동자 연대와 형제애 창출을 저해하는 반 유고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자주관리 이념은 때로는 파괴적인 민족주의의 형태로 간주되기도 하면서도 민족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은 자주관리와 민족적 표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전자 대신 후자를 선택했다.

전후 SFRY는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정통성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헌법적-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했다. 마케도니아는 공화국의 위상을 부여받고 고유의 언어와 민족 정체성을 인정받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다 민족적, 비분파적 공화국의 원형이었다. 헝가리 소수민족이 중심이 된 보이보디나와 알바니아인 다수가 중심이 된 코소보는 자치를 인정받은 곳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치성은 자신들 정치적 주권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책임감과 권력이라는 면에서 여타의 공화국들과 동등해졌다.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스스로 선택한 언어로 교육받았다. 이러한 자유와 더불어 민족 차별과 민족간의 갈

등 및 민족적 조롱이나 희롱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요된 금지 조항들은 개인적 행동을 구속하거나 때로는 상당한 대중적 분노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종종 종교와 문학 및 예술적 표현들은 잠재적으로 민족 간의 긴장을 야기하기도 했다. 학교와 언론들은 LCY가 침략자 파시스트와 매국노들에 대항하는 투쟁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인들의 이념을 위해 싸운 유일한 조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LCY는 유일한 전유고인들의 정치조직으로 승격되었고 지도자 티토는 유고 이념의 살아 있는 상징으로 추앙되었다. 당과 티토에 대한 반대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반대로 간주되었다. 민족간 유대를 기초로 당이 통제하지 않는 모든 조직은 그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로써 국가의 정통성은 당의 권한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티토와 함께 투쟁했던 당 지도자들은 1970년대 말까지 SFRY의 최고 지도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엘리트 층원과 정책 형성 과정을 통제했다. 전후 시기에도 이들 지도자들의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지도자들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몇몇 지도자들은 행정부 내에서 권한을 상실하거나 부패하기도 했다.

1980년 티토가 사망할 때 까지 SFRY는 공개적이었다. 예를 들어 1966년 브리오니 회의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을 분권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했다. 그리고 경제의 많은 부분이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크로아티아에서 민족 소요가 발생한 이후 1971년에 각 공화국들과 자치성들은 예산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1974년에 공화국들과 자치성들은 SFRY의 합의적 정책 결정과 비토권 및 연합을 선호할 정도로 더욱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티토가 사망하자 현실적으로 정치적 변화와 적응은 어려워지는 듯 했다. 어떠한 제도나 개인도 연방단위 조정에서 변화의 모색할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주요한 정책들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SFRY의 1980년대는 연기된 위기의 시기였던 셈이다.

티토가 사망한 후 10여년간 SFRY의 역사적인 연방주의적 타협은 실패했다. 제도 및 헌법적 질서의 권위와 정통성도 점진적으로 잠식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이 있다. 그들 중 하나는 티토의 개인승배가 후계자들에 대한 권위와 정통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sup>2)</sup> 즉 티토의 카리

2) 『N. I. N., (Oct. 15, 1989), pp.1-16.

스마와 대중적 신뢰가 그를 승계한 약체 집단 지도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sup>3)</sup> 이러한 문제들은 티토가 레지스탕스로부터 살아남은 마지막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서 더욱 복합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사망 후 어떠한 승계자도 전쟁 기간 중 AVNOJ 신화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AVNOJ는 티토와 함께 끝난 것이었다.

두 번째는 SFRY의 당이 점차 공화국과 자치성 정당들의 연맹이 되어 갔다는 점이다. 콤로베치(Kumrovec) 당 학교를 제외하고 당의 새로운 세대들이 공화국간 네트워크나 정치적 트러스트를 이룰 기회란 거의 없었다. 전시의 당 지도자 세대들은 함께 투쟁했다. 그러나 전후 세대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었으며, 따라서 공화국 내의 경쟁과정을 통해 경력을 쌓아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화국과 자치성의 당 조직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티토가 시도했던 협상과 같은 것이 제도적 차원에서 실패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공화국간에 교류되는 이익을 창출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 공화국 단위의 산업체에서 일하는 단일화된 노동자들은 다른 공화국에서 상대가 될 만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찾을 수 없었다. 한 공화국에서의 기업이 다른 공화국에서의 기업과 협력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매스 미디어, 세금정책 등도 한 공화국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임용이나 승진 등도 경쟁 보다는 공화국이나 민족을 잣대로 이루어졌다. 군이 예외이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진정한 SFRY의 제도는 없었던 셈이다.<sup>4)</sup>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SFRY라는 개념은 사람 간의, 그리고 제도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뿌리가 없었던 셈이다.

티토 사망 이후 SFRY의 민족적 타협이란 변화에 대한 거부와 정치적 마비, 그리고 민족의 경제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능력 부재 등의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sup>5)</sup> 티토 이후의 리더십은 점차 연방 보다는 연합적 요소를 확대하고 자신들의 개인적 권력과 자치권을 제고하려는 민족 간 투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sup>6)</sup> 그러나 문제가 복합적이 됨에 따라 시민들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고 다른 공화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세다가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공화국간의 적대감은 더욱 증가했다.

3) 『Borba』, (March 12, 1990), p.6.

4) 『N. I. N.』, (Oct. 8, 1989), pp.16-17.

5) 『Danas』, (Oct. 17, 1989), pp.16-17.

6) 『Intervju』, (June 8, 1990), pp.5-7.

SFRY의 헌법 및 법적 장치는 정통성 및 권위의 위기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헌법과 공식 이념은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켰다. 예를 들어 SFRY의 의회체계는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었을 뿐 아니라 내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리더십이 변화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체계는 정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이상적인 정치적 질서를 창출해 내기 위한 규범적 문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 복잡한 체계는 변화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불평등은 희생을 요구했다. 결국 1980년대 중반쯤에 이르러 헌법의 권위와 정통성은 거의 사라져갔다.<sup>7)</sup>

## LCY 변환의 실패 요인

1987년과 1990년 사이에 LCY는 SFRY 국내경제의 악화와 국제관계의 변화 및 당 권위와 단합의 약화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이 시기 동안 공산주의 정권의 지속을 정당화하던 기반은 무너질 위협에 놓였다. 경제는 침체되고, 당도 민족적인 적대감과 갈등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자 기능하는 단일한 단위체로서의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방 전체의 공화국 정당들은 40년에 걸친 1당 지배 조직을 이끌어 온 대부분의 마르크스-레닌주의-티토주의의 원리들을 포기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미 1980년대에 SFRY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매년 인플레이션 비율이 1000%를 넘었으며<sup>8)</sup>, 생산율은 매년 극적일 정도로 격감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락했다. 개혁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것이다. 경제 개혁이라는 것도 오히려 엄청난 정치적 자본을 소비할 뿐, 이득은 없었다.<sup>9)</sup> 부패와 수뢰 사건도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경제부문에의 정치적 개입과 정책 결정 과정의 상업화 등은 SFRY 경제에 있어 이미 고유한 현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비합리적인 투자정책 결정과 자본의 비생산적인 소비를 야기시켰다. 노동자들도 점차 경제 개혁 이념에 적대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치체제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난관으로 인해 SFRY가 목적의식

7) Jim Seroka & Vukasin Pavlovic (ed.), 앞의 책, pp.69-73.

8) 『Borba』, (June 2, 1989), p.3.

9) Jim Seroka, "The Interdependency of Institutional Revitalization and Intra-party Reform in Yugoslavia", 『Soviet Studies』60, (Jan. 1988), pp.84-99.

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SFRY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동안 서구 국가들은 대조적으로 경기가 부양되고 있었다. 따라서 SFRY

**자주관리 이념도 전반적으로 비합리적인 경제 정책 결정을 양산했으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정부는 직업과 보건, 주택 및 사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권에 협력하는 국민들이 격감했다는 점이었다.**

의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야 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각 세대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수입을 더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노년층은 은퇴를 연기해야 했고, 이는 다시 젊은 층의 실업을 증대로 이어져 노동 이동성이 급격하게 역전되었다.

사회 서비스 부문 역시 지나치게 부담이 되었다. 건강보험 체계도 악화되고 공중보건 분야도 위축되었다. 연금으로는 기본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지하경제의 규모 역시 급격히 확대되고, 교육의 질도 국가가 설정한 기준에 훨씬 못 미쳤다. 자주관리 이념도 전반적으로 비합리적인 경제 정책 결정을 양산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정부는 직업과 보건, 주택 및 사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정권에 협력하는 국민들이 격감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자주관리의 절차와 가치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많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도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 SFRY의 민족 안정을 위한 환경도 변화되었다. SFRY의 국가적 유대란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단합해 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었다. 그러나 블록 내의 긴장 완화, 냉전 종식, 바르샤바 조약의 해체 등으로 SFRY의 민족 갈등 재현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진 것이었다.

유럽 전역에서 군사력이 해체됨에 따라 SFRY에서도 강력한 군의 필요성은 사라져 갔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내부 위협의 억제와 징병 및 대규모 군대의 상설화 등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SFRY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갔으며,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것 보다 내부적 문제에 예산을 배당하는 문제가 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0)</sup> 베를린 장벽의 붕괴, 체코슬로바키아의 “벨

10) 『Politika』, (April 19, 1988), p.5

벡혁명”, 헝가리의 “철의 장막” 해체 등은 SFRY 국민들에게도 역사가 지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러나 비록 세계가 국가사회주의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SFRY는 발전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 보다 제3세계에 더 적합한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다당제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SFRY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념적 우월성을 역설했던 칼델리(Kardeli)의 신념이 확산되었다.<sup>11)</sup> 1989년 12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의 폭력적이고 급격한 붕괴는 SFRY의 정치 엘리트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때문에 루마니아가 국가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다당제 선거와 다원주의적 원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SFRY와 알바니아는 유럽을 휩쓰는 변화들에 저항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제가 악화되고 외부 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하자 LCY는 중요한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었다. LCY의 붕괴와 분절은 티토 사망 후 10년간 SFRY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SFRY이 “우리는 티토 노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자주 표방했던 것에서도 나타난다.

40년간 1당 지배를 하는 동안 당은 지역 당 지도자들을 연계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기업들과 공화국 및 연방의 관리들도 정치 및 경제적 유동을 통제하는 그물망을 이루었다. 1974년 헌법 이후 시도된 지도부 순환 체제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구성원들을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엘리트의 충원과 승진에 있어 능력보다는 충성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젊은 사람들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으며 SFRY의 제도들은 변화와 개혁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역기능을 하였다.<sup>12)</sup> 이 기간의 10년 동안 SFRY의 당 엘리트들은 정책 결정 구조가 변경될 우려가 있거나 티토 이후 리더십의 권위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들을 봉쇄했다. 예를 들어 노멘클라투라는 안전장치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 확대를 주장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환경운동을 반대하기도 했다. 외국차관이 경제성이 낮은 공장을 건설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투자 배당 정책도 지역과 공화국 관리들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증대시키는데 활용되었다. 공화국들은 개별적으로 외국 파트너와의 상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채무 위기와 동구 경제의 붕괴로 인해 경제 엘리트와 지역 및 공화국 엘리트들의 네트

11) 『Borba』, (Feb. 13, 1989), p.2.

12) Jim Seroka, “Economic Stabilization and Communal Politics in Yugoslavia”,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5, (2)』, (June 1989), pp.131-147.

워크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짧은 기간에 연이어 발생한 마케도니아의 FINA 니켈 공장 폐쇄와 세르비아의 스메데레보(Smederevo) 철강 노동자 및 티토그라드 알루미늄 노동자의 피해는 이들 공화국 노멘클라투라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노멘클라투라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알바니아인들이 다수인 세르비아의 코소보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에서는 인종폭동, 스트라이크 및 여타 세르비아 관리들에 대항하는 폭력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세르비아 관리들은 지역의 권력 구조들을 파괴하고 당의 자치성 의장 블라시야(Azem Vlasija) 등 코소보 관리들을 반역명목으로 단죄하기도 했다.<sup>13)</sup> 노멘클라투라의 대대적인 변화는 1987년, 1988년, 1989년에 걸쳐 대부분의 공화국에서 이루어졌다. 1987년 밀로세비치(Slobodan Milosevic)가 세르비아에서 권력을 장악하자 티토 정권기의 노멘클라투라들은 제거되거나 퇴임했다.<sup>14)</sup> 슬로베니아에서는 티토에게 막역하게 자문을 해왔던 돌란치(Stane Dolanc)에 이어 폴리치(Polic), 세틴치(Setinc)가 퇴임했다. 1989년 봄에는 무명의 경제학자 드르노프섹(Janez Drnovsek)이 능력과 변화를 강조하는 강령을 내세워 오랜 경력을 지닌 당료를 패배시키기도 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한 엘리트가 보스니아 노멘클라투라에 도전하는 사라예보대학 총장 케츠마노비치(Kecmanovic) 박사에 대항하여 공화국 권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비밀경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누설해 곤경에 빠지기도 하였다. 비록 이 경우에는 노멘클라투라가 우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공화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1988년과 1989년 밀로세비치파가 코소보, 보이보디나, 몬테네그로 공화국 관리들을 교체하는 작업에 개입하면서 티토주의자 노멘클라투라의 와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3지역 모두 밀로세비치 지지자들이 조직한 대규모 거리 시위가 전개되고 정부 및 당 인사들의 대대적 사임이 요구되었다. 1988년 가을 보이보디나의 자치성 정부에서는 지도부의 대대적인 사임이 있었다. 1989년 초에는 몬테네그로의 당 및 정부 구조도 조정되었다.

크로아티아의 수바르(Stipe Suvar)가 이끄는 연방 당 장치는 이러한 위협이 고조되자 강력하게 대응했다. 수바르는 밀로세비치에 대항하여 당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밀로세비치는 수바르를 비난하는 움직임을 조정했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수바르를 지지했으나, 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는 협상을 모색했다. 결국 어떠한 분파도 다른 분파를 지배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13) 『Borba』, (Sep. 26, 1989), p.4.

14) 『Politika』, (Dec. 6, 1987), p.8.

서 불거진 내부 언쟁은 당 단합에 있어 지속적인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결국 각 공화국 정당들은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민주적 다원주의, 민족정책 및 연방/연합주의와 관련된 철학과 이념의 변화는 LCY의 구조적 분절을 야기한 주요 요인이었다. 1990년 쯤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심해져 1990년 1월 LCY의 14차 전당대회에서 당은 해체되었다. 1980년대 시기 동안 모든 공화국의 당에서는 구성원의 이탈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sup>15)</sup>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당 구성원의 핵심 집단인 젊은 층과 노동자 계층 사이에서 가장 심했다. 더욱 우려할만한 것은 구성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비례해 당의 기율이 확고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1980년대의 당 구성원들은 당 활동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때때로 당의 프로그램 및 강령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슬로베니아는 자주관리적 사회주의로 훈련받은 당원들과 결별하고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옹호했던 첫 번째 공화국이다. 이러한 운동은 1986년 슬로베니아 청년조직이 티토 우상화의 중단과 언론의 자유 및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주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는 특히 보다 엄격한 환경 보호 규제를 요구하며 공화국 의회에 이르기까지 평화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 사이에서 확대되었다. 1987년 말 슬로베니아 청년조직 잡지 물라디나(Muladina)는 독립적인 사회운동을 허용하는 입법 개혁과 양심적 반대자들의 신분 보장 및 소집에 응한 병사들이 민족적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들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잡지는 일부 군 고위 관리들의 부패 사례를 폭로하기도 했다.

비록 당국이 이러한 청년조직의 제안들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이 운동을 지지하는 세력은 확산되었다. 슬로베니아의 당 통제 하에 있던 민족전선 조직조차도 이러한 권위의 하락을 인정하고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슬로베니아의 민족적 휴일로 인정함으로써 대중의 편에 서기도 하였다. 다원주의와 시민사회를 향한 슬로베니아의 행진은 날이 갈수록 힘을 얻었다. 그리고 1988년 연방의 군 관리들이 물라디나 편집장에게 반역죄 명목으로 기소 결정을 내리자 오히려 그에 대한 지지는 더욱 커져갔다. 이 일은 슬로베니아 당 지도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에 연방 당국에 대항하기 위해 공화국 차원에서의 동원이 시작되었으며 10만명 이상이 등록한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SFRY 최초의 대중 조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수천명의 항의 집회를 주도하기도 하였으며, 슬로베니아인들의 정치적 삶의 영역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5) 『Borba』, (Jan. 15, 1990), p.4.

1989년 1월에는 슬로베니아 민주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6월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체를 대변하기

**슬로베니아는 자주관리적 사회주의로 훈련받은 당원들과 결별하고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사회를 옹호했던 첫 번째 공화국이다. 청년조직이 티토 우상화의 중단과 언론의 자유 및 의회권을 확대하는 헌법개정을 주장 했다.**

위하여 많은 대안적 운동과 연맹들이 조직되었다. 이들 조직들은 다른 공화국들, 특히 세르비아에 대항하는 슬로베니아 당 지도부를 지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 조직들은 각자 세르비아의 코소보정책에 반대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더 큰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를 보냈다. 1989년 8월에 다당제 선거와 의회제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고조되었다. 이어 연방법 폐기와 연방 탈퇴권을 명기한 슬로베니아 공화국헌법이 비준되었다. SFRY의 첫 번째 다당제 선거가 슬로베니아에서 계획되었고 슬로베니아와 여타 공화국들, 특히 세르비아아의 격차가 뚜렷해졌다.

슬로베니아 정당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부분 특히 1989년 봄에 실시된 선거 이후 슬로베니아 지도부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연방 내에서 슬로베니아 정당은 다당제와 강력한 시민권의 보호, 대표 입법체계, 사회 내 정치제도의 재편 등을 주도했다. 다른 공화국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슬로베니아 정당은 정당 개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해 나갔다. 그리고 14차 전당대회에서 슬로베니아 대표들은 연방 내 슬로베니아 공산당 조직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다른 공화국에서도 정당의 다원화를 주도하는 조직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슬로베니아에서와 달리 지역과 공화국 정당 조직들은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브 민주이니셔티브, 보이보디나 농민연맹, 신민주 서클 등이 주도하는 다원주의에 저항했다.<sup>16)</sup> 그러나 이들 조직 중에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경우와 달리 정치적 기반을 다시 주도해 나갈 단합된 명분도 없었다. 다원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공화국 당들은 새로운 사회적 운동과 다당체제로부터 소외되어갔다.

공산당의 분절 역시 인종적 긴장과 적대감으로 더욱 고조되었다. 세르비아의 코

16) 『Borba』, (March, 3, 1989), p.6.

소보정책에 대해 슬로베니아가 비판하자 1989년 12월 세르비아는 슬로베니아에 대항하는 경제 보이코트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코소보정책과 밀로세비치의 권력 집중 시도에 대해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가 비판하자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 내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은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 정당들의 권위를 추락시켰으며, 공산당 지배 유지를 위한 논거로 내세울 수 있었던 민족간 평화와 관용이라는 명분도 사라졌다.

1990년 1월 베오그라드에서 14차 전당대회가 개최될 즈음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슬로베니아의 당 지도부는 민주화를 서약했다. 크로아티아의 당 지도부도 근본적인 전환을 진행시켰다. 이제 코소보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보이보디나와 몬테네그로의 정당은 세르비아 밀로세비치파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게다가 보스니아의 당 위계구조에서는 공화국의 정통성이나 당에 대한 존경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케도니아정당은 친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의 민족적 분파로 양분되었다.<sup>17)</sup> 모든 공화국에서 당 멤버십은 극적으로 추락해갔다. 단지 군대 내의 당 조직만이 미미하나마 단합과 규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1990년 5월 14차 전당대회가 소집되었을 때 LCY가 할 수 있는 일이란 LCY의 조직 및 기능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뿐이었다.

## FRY의 사회주의, 의회 민주주의, 민족주의

SFRY가 붕괴하자 연방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양 공화국만이 잔존해 FRY(Federation of Republics of Yugoslavia)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1990년 9월 28일에 공화국 신헌법을 공포했다. 몬테네그로도 같은 해에 종전의 1974년 헌법을 개정했다. FRY헌법과 양 공화국의 신헌법이 SFRY 시기의 사회주의헌법을 어떠한 측면에서 계승하고 차별화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FRY에서의 사회주의를 가늠하는 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RY는 양원제 의회를 채택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헌법 80조에 의거하여 연방의회는 시민의회(Chamber of Citizen)와 공화국의회(Chamber of Republics)로 구성되었다. 시민의회는 6,500명 유권자 당 1명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에서 직접 선거로 의원을 선출해 구성했다. 공화국의회는 공화국간 형평 원칙에 따라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 각각 20명씩 선출했다. 이는

17) Jim Seroka & Vukasin Pavlovic (ed.), 앞의 책, pp.73-80.

FRY에서 합의제적 민주주의 원리가 도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세르비아 인구는 979,145명이었고 몬테네그로 인구가 618,287명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화국의회에서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와 동수의 대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정책결정 과정에 다수에 대항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장치도 마련한 것이었다.

1990년에 실시된 첫 자유선거에서 세르비아는 다수결의 선거체계를 택했으며, 몬테네그로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또한 FRY 헌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비해 우월한 형태의 제도를 정립했다. 이는 의회보다 공화국 대통령에 더 큰 권한을 부여했던 1990년까지의 세르비아헌법과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몬테네그로헌법에서도 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은 세르비아의 경우보다 크지 않았다. 몬테네그로에서는 공화국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세르비아에서와 같은 의회 해산권이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 전쟁 선포권 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몬테네그로에서는 의회에 공화국 대통령의 소환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회가 공화국대통령 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몬테네그로헌법 76조는 민족적 이질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화국 평의회(The Republican Council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Ethnic Groups) 구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2년 4월 국가가 FRY로 재구성된 이래 세르비아의 사회주의자 밀로세비치가 감행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코소보와의 내전은 FRY 민족정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사건이었다. 생산을 저하, 실업을 증가, 생활수준의 악화, 재생산 고리의 파괴 등 민족관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던 FRY 경제는 특히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들 거주지역인 스프스카공화국에 대한 대대적 군사 원조와 크로아티아로부터 탈출한 50만명의 난민을 지원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FRY의 경제 및 사회 상황은 UN 안보리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 대한 경제제재를 선언한 1992년 5월 30일 이후 보다 악화되었다. 1990년 - 1994년의 생산지수는 1990년을 100으로 할 때 1991년 84, 1992년 79, 1993년 63으로 계속 하락했다. 1994년 FRY의 생산율은 1990년의 36.2%에 그쳤으며 1994년 중반의 사회부문 실질 임금도 1990년의 30%로 감소했다.

이러한 속에서 SFRY 시기로부터 계속되어 온 민족간 적대 관계도 계속되었다. 비록 FRY헌법이 소수 민족에 대한 제반 권리를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적 선언들을 무색하게 하는 정치적 관행들이 계속되었다. 많은 국가의 정책들과 조치들도 소수 민족집단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FRY의 인

권문제를 위해 설치된 헬싱키위원회가 1995년에 간행한 “제반 민족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FRY에 있어서의 입법 및 관행 보고 -” (Int’l Convention i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A Review of Legislation & Practice in FRY)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보고에서는 1993년과 1994년 코소보에서 알바니아인들이 처형되었던 20건의 정치재판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이 정치재판이 진행된 법원에 알바니아인 판사는 한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억압이 세르비아급진당(Serbian Radical Party : SRS)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FRY에서 사회주의적 세력이 의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항해 다시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RS와 정부가 역할 구분을 하여 소수민족 집단을 박해한 사건은 사니아크(Sanjak)에서도 일어났다. 이 지역에서는 2건의 유괴사건이 발생했으나 범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1992년 10월 22일에는 스예브린(Sjeverin) 근처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17명의 회교도들이 유괴되었다. 1993년 2월 17일에는 스트르프치(Strpci)역에서 18명의 회교도들과 1명의 크로아티아인이 유괴되기도 하였다. 1994년 12월 16일에는 세르비아 민족의회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유산의 기준을 규정한 “문화유산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수 민족의 역사에 관한 것은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서 제외되었다.

1992년 이후 FRY의 민족간 관계는 2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RY 선언을 한 때부터 1993년말까지는 소수민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기 동안 SRS는 “보다 위대한 세르비아”라는 슬로건을 다시 내세워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정책을 감행했다. 그리고 SRS는 <정치강령>에서 “현재의 세르비아과 몬테네그로 지역 뿐 아니라 드브로브닉(Dvrovnic), 리카(Lika), 코르둔(Kordun), 바니아(Banija), 슬라보니아(Slavonia), 슬렘(Srem) 서부지역, 바란야(Baranja) 지역으로 까지 확대된 전 세르비아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의 재건”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당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슬로건들은 1992년 5월 연방의회 선거와 12월의 연방 및 공화국 의회 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1992년 12월 선거에서 세르비아의 여당인 세르비아사회당(SPS)은 의석의 29%를 차지한 세르비아 급진당의 지지를 받아 의석의 40%를 차지함으로써 사회주의 정부를 구성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세르비아 사회당은 세르비아 급진당이 국가 통제하의 매스 미디어를 활용하여 그들의 소비니즘적 이념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세르비아 사회당과 세르비아 급진당 간의 연합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인 거주 지역을 세르비아로 합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세르비아사회당과 세르비아 급진당간의 연합은 여당

**1992년 의회선거에서 세르비아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소비니즘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세르비아급진당에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는 FRY의 내전을 주도한 밀로세비치의 “인종적 동원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인 세르비아사회당이 FRY의 내전 해결을 위한 밴스-오웬(Vance-Owen)안을 수용한 1993년 중반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양 정당이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가을 세르비아 급진당이 여당인 세르비아 사회당을 “배반적인 세르비아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세르비아 급진당은 세르비아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하도록 요구했다. 세르비아 사회당은 세르비아 급진당의 총서기가 “원시적 소비니즘”과 “자극적인 호전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비난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sup>18)</sup> 이러한 세르비아 급진당의 요구를 의회가 받아들일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자 1993년 10월 20일 세르비아의 공화국 대통령은 민족의회를 해산하고 1993년 12월 19일 선거를 실시하도록 확정했다. 이 선거에서 세르비아 사회당은 의석의 49.2%를 차지함으로써 세력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군소정당인 신민주주의정당과 연정을 구성했다. 반면 극단적 민족주의 노선을 표방한 세르비아 급진당은 참패했다.

세르비아 사회당은 소수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약화되면서 온건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극단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세르비아 급진당이 국가 통제 하에 있는 언론을 통해 소수민족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설파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민족간의 분위기도 우호적이 되어갔다. 그러나 세르비아 급진당은 여전히 배타적인 민족정책을 견지해 나갔다. 1994년 1월 30일 제3차 전당대회에서 세르비아 급진당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코소보 내 알바니아인 분리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 강령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알바니아인 이민자들과 그 자손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해고시키며, 이 곳을 떠나고자 하는 모든 알바니아인들에게 이민 여권을 발급하며, 코소보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모든 세르비아인들에게 영구적인 경작지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18) 『Borba』, (Sept., 28, 1993), p.6.

FRY의 민족간 긴장은 1994년 5월에 정부가 알바니아인들, 헝가리인들, 모슬렘 등 소수민족 집단 대표들과의 대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약화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도 미미한 것이었으며 인종적 배타주의와 내전으로 계속 악화되어 온 민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1993년 세르비아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코소보와 메토히야 지역에 거주하는 알바니아인들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1/3이 알바니아인들에게 그들의 문화 및 전통과 관련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sup>19)</sup> 다른 민족집단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다른 조사에서는 알바니아인과 모슬렘에 대해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8%, 52.7%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불신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20)</sup> 1992년 의회 선거에서 세르비아에서는(22.6%) 몬테네그로에서 보다(7.5%) 3배나 많은 유권자들이 소비니즘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세르비아 급진당에 지지 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는 FRY의 내전을 주도한 밀로세비치의 “인종적 동원”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 결론

이 글에서는 SFRY의 LCY가 탈사회주의 과정에 어떻게 분절되어 갔는가, LCY의 뒤를 이은 신정권들이 공산주의적 제도 및 입법 형태들을 유지하려고 하였음에도 각 공화국에서 LCY가 붕괴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SFRY에서 공화국 분리운동이 본격화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만으로 구성된 FRY 재편된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았다.

SFRY의 해체와 내전의 짝은 이미 사회주의기에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FRY기에 정립된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도 극단적인 민족 갈등을 약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은 SFRY의 지배적 정치 엘리트들이 다민족국가 유고슬라비아에 적

19) 코소보와 메토히야 거주 알바니아인들의 권리 부여에 대한 세르비아인들의 의견 (%)

	동의함	동맹	중립노련	IMF-JC
문화 및 전통	61	34	5	100
알바니아어 교육	51	44	5	100
알바니아인 대학	22	72	6	100
자치권	13	80	7	100

Belgrade, (Institute of Social Science—Center for Pol. Science Research and Public Opinoin), 1993.  
 20) Vladimir Goati, “The Impact of Parliamentary Democracy of Ethnic Relations in Yugoslavia, 1989–1995”, Dusan Janjic, 『Ethnic Conflict Management—The Case of Yugoslavia』, (Longo Editore Ravenna, 1997), pp.80 - 87.

절하지 않은 정치제도들을 채택했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즉 SFRY의 LCY가 주도해 온 이념 및 제도들은 지배적 정치 엘리트들에게 사회의 모든 관련된 부분들을 정치적 영역에 포함시키는 준거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소수민족 집단들을 주변화 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민족 집단은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위축되었던 것이다. FRY와 같이 분절된 사회에서는 국가의 전 구성원들을 정치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적절한 합의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고 민주적 질서를 수립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SFRY 붕괴 이후 신경권들이 공산주의적 제도 및 입법 형태들을 유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화국에서 LCY가 붕괴되고 FRY가 된 후에도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세운 인종청소와 보스니아 및 코소보전쟁이라는 극약 처방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재집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점을 잘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Dusan Janjic, 『Ethnic Conflict Management - The Case of Yugoslavia』, (Longo Editore Ravenna, 1997)

Jim Seroka & Vukasin Pavlovic (ed.), 『The Tragedy of Yugoslavia - The Failure of Democratic Transformation』, (M. E. Sharpe Inc., 1992)

Geoffrey Priedham & Tom Gallagher, 『Experimenting with Democracy - Regime Change in the Balkans -』, (London & N. Y., Routledge Studies of Societies in Transition, 2000)

Patrica Vawter Klien, Arthur W. Helweg, Barbara P. McCrea, 『Struggling with the Communist Legacy - Studies of Yugoslavia, Romania, Poland & Czechoslovakia -』, (East European Monographs, Boulder, Distributed by Columbia Univ. Press, N. Y., 1998)

George Macesich (ed.), 『Yugoslavia in the Age of Democracy - Essays in Economic and Pol. Reform -』, (Praeger : Westport, Connecticut, London, 1992)

Jim Seroka, "The Interdependency of Institutional Revitalization and Intra-party Reform in Yugoslavia", 『Soviet Studies』60, (Jan. 1988)

Jim Seroka, "Economic Stabilization and Communal Politics in Yugoslavia", 『Journal of Communist Studies』5, (2)』, (June, 1989)

Valerie Bunce, "Peaceful versus Violent State Dismemberment : A Comparison of the Soviet Union, Yugoslavia and Czechoslovakia", 『Politics & Society』, (Vol. 27, No. 2, (June, 1999)

## 사회주의와 유럽의 근대와의 결합 시도

최 치 원 (고려대강사, 정치·사회철학)



『객관적 사회이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평등한 사람들의 결사체로 이끌어야 한다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요구는 권력의 독재적 행사의 조건하에서는 실현될 수도 없었고, 해방적이지도 못했다. SED의 정치는 일관된 인권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정당구조와 사회구조들을 만들어 냈다. 이 구조들은 이니셔티브, 혁신 그리고 민주적 정치발전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1953년 6월 17일<sup>1)</sup>은 사회주의 사회의 재건이 독재적 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 하에 일어난 인권침해는 용서될 수 없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회의 민주적, 사회적, 생태학적 그리고 문화적 갱신을 위해, 그리고 인권과 시민권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정강초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 초안에는 [...] 사회주의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다.”

- 1953년 6월 17일 50주년에 대한 민주사회주의당(PDS: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지도부의 2003년 5월 26일 성명서<sup>2)</sup> -

## 문제제기

“정 치학”과 관련해 “진정한 휴머니즘을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민주주의일 것이다<sup>3)</sup>라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주장은 진부한 것인가? 만약 우리가 다음과 같은 푸코(Michel Paul Foucault)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후자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임무는 휴머니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sup>4)</sup> 인식이 “더 이상 미래를 위한 발전이나 진리규명을 할 능력이 없다”<sup>5)</sup>는 것에 주의를 돌린 ‘포스트모던’ 이니 ‘탈근대’ 니 하는 개념이 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린지 이미 오래이다. 무엇보다 1989/90년의 세계사적 전환과 더불어 가속화 된 의식의 변화는 그러한 개념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개념의 인플레이션을 불러내었다. 그럼에도 ‘근대’라는 개념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현재가 이 개념으로 포착될 때, ‘근대화’는 하나의 역사과정,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학문 등의 분야에 있어 하나의 발전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전쟁들, 대학살, 기근과 환경파괴로 특징지어지는 파국의 과정으로도 이해된다. 근대는 ‘극단의 시대’<sup>6)</sup>이다. 근대는 진보와 퇴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진보는 죽은 사상인가?’<sup>7)</sup>라는 회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근대의 핵심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듯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근대가 만들어 낸 부정적 측

1) 봉기는 가속화된 소련식 사회주의화, 즉 ‘사회주의 재건’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동독의 400개를 넘는 지역과 대략 600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당시의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 하의 공산당 지도부는 이 봉기를 ‘파시스트적 쿠데타기도’로 규정한다. 봉기에는 동독전역에서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 당시 동독 주둔 소련군 지휘관들은 217개의 시·군 지역 중에 167개의 곳에 비상상태를 선포한다. 소련군은 동독경찰의 도움을 받아 봉기를 유혈 진압한다(정확한 희생자는 밝혀지지 않음). 서독에서 법을 통해 1953년 8월 4일 ‘독일 통일의 날(Tag der deutschen Einheit)’로 지정된다. 6월 17일의 의의는 사회주의의 미래를 점쳐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었다. 이러한 시금석을 우리는 이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봉기(1956년 10월), 베를린 장벽 건설(1961년 8월 중순), 프라하의 봄(1968년 8월)에서도 볼 수 있었다.

2) Erklärung des Parteivorstandes des PDS zum 50. Jahrestag 17. Juni 1953 (26. Mai 2003), “Sozialismus entsteht in und aus der Gesellschaft” (= [http://sozialisten.de/partei/geschichte/view\\_html?zid=3373&bs=1&n=4](http://sozialisten.de/partei/geschichte/view_html?zid=3373&bs=1&n=4)).

3) 알렉산두루 타나제: 『실천으로서 휴머니즘』, 아담샤프 외, 『현대철학의 제문제』, 김현일 편역, (형성사: 1983), p. 290.

4) 알렉산두루 타나제(1983) p. 285.

5) 로이 보인(Roy Boyne) & 알리 라탄시(Ali Rattansi):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 김보현·신명아 공역, (한신문화사: 1992), p. 14.

6) Eric Hobsbawm: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1997(1994)].

7) 막스 갈로(Max Gallo) 외: 『진보는 죽은 사상인가?』, 홍세화 옮김, (당대: 1997).

면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근대의 최고의 이념은 역사진보의 개념과 그리고 이 개념을 체화하고 실현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이다. 비록 미래에도 노동자들이 자본의 횡포와 신자유주의적 압력에 맞서 투쟁을 하겠지만, 20세기 초반의 혁명적 노동운동을 뒷받침 해준 조직이론과 정치개념(무엇보다 레닌주의)은 소진 되었고, 1917년 ‘10월 혁명’이 보여준 것과 같은 역사적 길은 그것이 아직 인류사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골동품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근대와 사회주의를 결합시켜 이해하는 것은 아직 의미가 있는가? 아직 실행 가능한 그 어떤 사회주의(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프로젝트는 있는가? 유럽, 특히 독일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의식문화 속에서 그에 관한 그 어떤 표상(表象)은 발견되는가?

## 혼재된 역사상: 과거와 현재

19세기 이래 유럽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과 동일시되었던 것은 “사회비판적, 혁명적 혹은 유토피아적 문건들과 프로그램들”<sup>8)</sup>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에 의해 정초된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자연-인간의 생산적 관계 속에서 인간해방과 개성의 실현을(소위 말하는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라는 원칙)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개념이었다. 노동자들 최초의 근대적 정치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차티스트(Chartist)운동이 영국에서 전개되는 1840년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를 단지 하나의 추상적 이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운동과 결합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이것이 ‘공산당선언’<sup>9)</sup>이 나온 동기이다. 그것의 목적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쟁취’에 있었다.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투쟁한 사회주의는 유럽에서 문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정치문화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사회주의는 소위 말하는 ‘현실사회주의’ 혹은 ‘현실로 존재한 사회주의’와 동일시되면서 그리고 바로 이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그 시대성과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

8) Frits Kool & Werner Krause, *Die Frij hen Sozialisten*, (Frankfurt am Main/ Wien/ Zürich: 1967), Vorwort p.7.

9) Karl Marx & Friedrich Engels: *Da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EW Bd. 4, (Berlin: 1917, 5. Aufl., unveränd. Nachdr. der 1. Aufl. 1959).

엔겔스는 1845년 자신의 저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황’의 헌사에다 노동계급의 고난(grievances)에 대해 그리고 노동계급의 “적대자”인 중

**19세기 이래 유럽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과 동  
일시되었던 것은 “사회비판적, 혁명적 혹은 유토피  
아적 문건들과 프로그램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마르크스(Karl Marx)와 엔겔스(Friedrich  
Engels)에 의해 정초된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간계급(middle-classes)과 “인간 살의 간접거래로 얻어지는 이윤”을 말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태어난 영국인들(free-born Britons) 대다수에게, “중간 계급의 잔인할 만큼 이기적인 정책과 일반적 행태”에 대항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나아갈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공은 확실하다”는 것을 호소한다.<sup>10)</sup> ‘자유롭게 태어난 영국인들’은 말하자면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국에서도,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있던 곳 어디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엔겔스가 당대에 관찰했던 프롤레타리아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의 ‘자유롭게 태어난 영국인들’, 즉 법에 보장된 정치적·사회경제적 권리를 누리고 형식적으로는 시민으로 이해될 수 있는 노동자들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엔겔스가 의도한 ‘성공’이 이러한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말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의 몫일 것이다.

홉스바움(Eric Hobsbawm)은 19세기 초반의 노동운동에 있어 “새로운” 현상을 “계급의식”과 “계급이해를 둘러싼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특별한 계급인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의 등장에서 보고 있다.<sup>11)</sup>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며, 최소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존재일 뿐이다. 고전적 의미의 ‘자유롭게 태어난 영국인들’과 이들의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는 없는 것이다.

문화적 신근대(Neomoderne)의 변론에 기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는 1990년대 초반의 페터 알하이트(Peter Alheit)의 사회학 연구서는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응집된 “노동자 계급” 대해 하여튼 뭔가 말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이고,

10) Friedrich Engels: 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Berlin: 1972), pp.8-9.

11) Eric J. Hobsbawm: Europäische Revolutionen, (München: 1978), Aus dem Englischen, p.416.

“혁명적 주체”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sup>12)</sup>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기에 “노동자의 문화와 삶의 양식은 극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체의 모습도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동자 계급에 대해 도대체 아직 말할 수 있는가? <프롤레타리아적>이라는 꼬리표를 얻을 만한 삶의 방식이 아직도 있는가? 노동자 문화개념은 현시대에 아직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격리되어 버린 현상과 관계하고 있는 것인가? 거대한 사회집단들의 주변화와 개인화에 대해 다양한 글들이 써지는 추세가 계급의 해체에 대한 증명은 아닌가? [...] 우리는 최소한 역사의 혁명적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와 이별을 고해야 되지 않을까?”<sup>13)</sup>

현실사회주의붕괴와 소련의 해체이후에 사람들은 사회주의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는 죽은 것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재빠르게 ‘역사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즉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파시즘과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에 승리했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효율성과 복지)와 민주주의(인권의 보호, 시민의 참여, 정치적 공공성)에 대한 그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서구의 승리, 서구 이념의 승리는 무엇보다 서구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속가능한(viable) 체계적 대안들이 총체적으로 소진한데서 명백해진다.” 후쿠야마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단지 상층 정치(high politics)의 수준에 국한 시켜 보지 않는다. 그 현상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주의적 서구문화의 역전 불가능한 확산” 속에서도 보여 진다는 것이다. “[...] 컬러텔레비전 세트는 이제 중국 어디든지 있고, 협동조합 음식점

12) Peter Alheit: *Kultur und Gesellschaft. Plädoyers für eine kulturelle Neomodern*, (Univ. Bremen: 1992), Forschungsreihe des Forschungsschwerpunkts ‘Arbeit und Bildung’ Bd. 18, Vorwort.

13) Peter Alheit(1992), p. 113.

14)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89) (=http://www.jefflittlejohn.com/history/endofhistory.htm). 이탤릭체 강조는 필자의 것. 전 란트(Rand) 연구소 분석가이자 미 국무성 정책수립스태프인 후쿠야마에 의해 쓰여진 (이때는 아직 소연방 붕괴 이전 있었다) 이 논문은 원래 시카고 대학의 존 올린(John M. Olin) 센터의 1989년 강연문이며, 시카고 대학 정치과 교수인 나탄 타르코프(Nathan Tarcov)와 알란 블룸(Allan Bloom)에게 현정된다. 논문에 표현된 의견은 어떤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후쿠야마 자신의 개인적 것이다. 논문은 1992년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란 제목으로 출간된다. 문제는 후쿠야마가 자신의 글에서 미국이 타국에 대한 민족주의적 군사적 침략을 위해 자유주의를 포기 내지는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개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의 역사적 승리로 인해 전쟁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9·11 테러 이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미 제국을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일종의 종교적 도덕에 뒷받침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전쟁의 수단으로 삼는 역설을 보게 된다. ‘역사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을 실현시키려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의식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네오콘(Neo-con)’의 이념적-철학적 기반이 된다. 냉전에서 서구의 승리 후에 ‘역사의 종말’이라는 천년왕국설에 가까운 주장 내지는 권태로운 종말론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과 옷가게는 지난해 모스크바에서 문을 열었고, 베토벤은 일본의 백화점으로 유선으로 송신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록 음악을 프라하(Prague)와 랭군(Rangoon)과 테헤란(Tehran)에서 똑같이 즐기고 있다.”<sup>14)</sup>

프랑크 뎀페(Frank Deppe)에게 이러한 후쿠야마류의 진단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차라리 울적한 분위기라고 할만한 무미건조함(Ernüchterung)”이며<sup>15)</sup>, 울리히 벡(Ulrich Beck)에게는 그것은 승리의 위기(Siegkrise)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한편에서 생산 및 사회화 양식으로서 자본주의의 전세계적인 관철이라는 일종의 승리를 보게 되지만, 그 관철이 생태학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전세계적인 파국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승리는 위기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1989년에 확인된 자본주의의 승리가 사회적 대안에 대한 물음을 새로이 제기 시킨 것이다.”<sup>16)</sup>

그럼에도 새로운 문제제기는 앞서 언급했지만 ‘차라리 울적한 분위기라고 할만한 무미건조함’ 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주의가 그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만큼 더 의미있게 들린다.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은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 테제와의 비판적 대면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적 생활 속에서 항상 수사적 역할을 해온 평등[실현]은, 비록 그것이 사실상 공격으로부터 방어되었다 해도, 그 무렵에 가능한 것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도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건전한 인간상식에서 보면 한때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에 역할을 했던 모든 이념들은 그저 잘해야 죽은 개일뿐이다. [...] 노동자 계급은 과거의 창백한 기억으로 간주되고, 집단소유는 전제(專制)와 비효율성에 대한 보장책으로, 요컨대 실질적 평등은 자유와 생산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sup>17)</sup> 랄프 밀리반트(Ralph Miliband)는 “자본의 해방”에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경을 토로한다. “거대 재벌의 권력과 [...] 재벌의 이익에 반응하는 정부들을 통해 지배 되는 신세계질서는 미래에 오랫동안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질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암울한 퍼스펙티브는 많은 구공산주의 국가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 및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도 해당된다.”<sup>18)</sup>

15) 이하 Frank Deppe: “Hat der Sozialismus noch eine Zukunft?”, in Christ und Sozialist (Heft 2/1998)(=http://www.brsd.de/archiv/CuS\_Archiv/CuS\_2\_1998/Zukunft\_des\_Sozialismus/zukunft\_des\_sozialismus.html) 참조.

16) Joachim Hirsch: Der nationale Wettbewerbsstaat, (Berlin: 1995), p.183, Frank Deppe(1998)에서 인용.

17) Perry Anderson: Zum Ende der Geschichte, (Berlin: 1993), p.143, Frank Deppe(1988)에서 인용.

18) Ralph Miliband: Socialism for a Special Age, (Cambridge: 1994), p.188, Frank Deppe(1988)에서 인용.

## ‘사회주의냐 야만이나, 자본주의냐 야만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은 없다 해도,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는 한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니다. 최소한 홉즈바움 식의 생각, 즉 미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른다 해도,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가 되도록 희망해 보자”는<sup>19)</sup> 주장은 아직 살아있다.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 사회민주주의 방향에서 있는 좌파들은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없이는 도 달할 수 없다’는 말을 도처에서 많이 해왔다.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들도 이루어진다. 그러한 시도들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라고 불리는 역사의 법칙성에 대한 반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법칙성은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주의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뎀페는 예컨대 사회주의가 “계급 없는 사회에서 역사의 종말에 대한 꿈으로 이해 되서도 안 되며, 그리고 하나의 유사(quasi) 자연법칙적 과정, 다시 말해 그 과정의 끝에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sup>20)</sup>

1966년 위르겐 쿡진스키(Jürgen Kuczynski)는 50 쪽이 채 안되는 ‘우리는 왜 자본주의에 반대 하는가’ 라는 소책자를 발간한다. 그에게 자본주의는 “곤궁”, “노동의 고통”, “노예제도”, “무지(Unwissenheit)”, “잔인화(Brutalisierung)” 그리고 “도덕적 퇴행”<sup>21)</sup>, 한마디로 야만인 것이다. 그러나 주 35시간 (물론 이 보다 더 적은 근무시간이 시행되는 곳도 있지만) 근무,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각종의 법령들과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된 오늘날의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를 파악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략 30년 뒤인 1997년 쿡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류 앞에 놓여있는 것은 사회주의냐 아니면 야만이나의 선택”이다. 마르크스가 한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sup>22)</sup>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에 따르면 엥겔스가 한때 “부르주아 사회는

---

19) Hobsbawm[1997(1994)], p.17.

20) Frank Deppe(1988).

21) Jürgen Kuczynski: *Warum sind wir gegen den Kapitalismus?*, [(Berlin: 1974(1966))].

22) Jürgen Kuczynski: *Freunde und gute Bekannte. Gespräche mit Thomas Grimm*, (Berlin: 1997), p.40.

사회주의로의 이행  
이나 아니면 야만으  
로의 복속이냐는 딜  
레마에 처해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sup>23)</sup>  
이처럼 그녀 역시  
“사회주의나 야만이

**덤펜은 사회주의가 “계급 없는 사회에서 역사의 종  
말에 대한 꿈으로 이해 되서도 안 되며, 그리고 하  
나의 유사(quasi) 자연법칙적 과정, 다시 말해 그  
과정의 끝에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이 있  
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나”<sup>24)</sup>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녀가 당시에 바라본,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나타난 야만  
은 오늘날 까지도 변함없이 전쟁과 기근 그리고 대량학살 속에서 나타난다. 그녀의  
‘사회주의나 야만이냐’ 이라는 물음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오늘날에도 사회주의가  
‘야만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계속 주의를 환기시  
키고 있다. 그것은 현실사회주의적 대안의 몰락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려는  
좌파들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sup>25)</sup>

이런 식의 사고에 대한 반론의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민주적 규칙들이  
지켜진다면 중국에는 사회주의가 “거의 자동적으로(fast zwangsläufig)” 만들어  
진다는 식의 이해는 하나의 “조잡한 오류”라는 것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좌파의 오  
산”인 것이다. 그 오산은 무엇보다 사회·복지국가 모델을 상정한 뒤 시장경제적 조  
건들을 사회국가적으로 혹은 복지국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러난  
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나 사회주의자 같은 좌파들은 그 모델을 “전지구적 미  
래에 대한 하나의 현실주의적 비전”으로 생각지만, “낙관주의적” 오산이라는 것이  
다. 그것은 현재의 지배적 자본주의적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한, 자본주의가 갖는 “유연성”과 “적응능  
력”은 잘못 평가된다는 것이다.<sup>26)</sup> 좌파의 생각과 그에 대한 비판 속에는 이처럼 유럽  
적인 사회국가의 건설의 요구와 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간에 나타나는 모순이  
반영되어있다.

쿠어트 쉬엘(Kurt Scheel)은 비판은 보다 근본적인 곳을 건드리고 있다. 그에

23) Rosa Luxemburg: Gesammelte Werke Bd.4, (Berlin: 1974), p.62.

24) Rosa Luxemburg: *Die Krise der Sozialdemokratie* (=http://www.mlwerke.de/lu/luf.htm)  
참조. 1915년 감옥에서 써진 이 글은 다음해 독일에 불법적으로 유포된다.

25) Frank Deppe(1988) 참조.

26) Arno Klöne: “Perspektiven der Linken nach dem Zusammenbruch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in : Europa”, gehalten vor dem Herforder Kreis am 03.05.1991 in Weimar-  
Buchenwald an?ßlich des Seminars (= http://home.t-online.de/home/Wilhelm.Ruehl/  
refkleon/htm).

따르면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냐 야만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야만적인” 것으로 입증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였으며, 서구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7)</sup>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문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 어떤 대안을 생각해온 좌파들에게 수십 년에 걸쳐 역할을 해오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으로 까다로운 자본주의비판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만만한 [자본주의] 속죄양이론을 포기하고, 자본주의가 오히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 아닌지 묻는 데서 [...] 출발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의 엄청난 생산력은 [...] 자본주의의 적대자들로부터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로 인해] 부정의와 불평등이 커진다는 비난이 또한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면, 도대체 비판에 남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sup>28)</sup>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아니면 ‘자본주의냐 야만이냐’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단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그 ‘알’이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들과 특히 파괴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강조될 수 있다. “총체적 복지상태”를 “개인적 자유에 대한 공공독재”로 이해되는<sup>29)</sup> 상황 혹은 “시장과 돈의 전체주의”, 다시 말해 “전체주의적 정부 없는” 전체주의가<sup>30)</sup>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장과 돈의 전체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 내지는 비판은 필요할 것이다. ‘현실사회주의’의 문제들이 사라진 지금, 남은 것은 일종의 현실자본주의의 문제들이다. 특히 환경파괴, 전세계적 빈부대립 그리고 계속해서 황금 알을 낳고 있는 무기산업과 이에 기반한 하이테크 전쟁 등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해결책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문제들이다.

## 맺음말: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의 안착<sup>31)</sup>을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아직 있는가?’<sup>32)</sup>란 99쪽짜리 소책자가 1962년 독일에서 출

27) Kurt Scheel: *Gedanken zur Zeit*, 6. September 2003. *Kapitalismus oder Barbarei? Hinweis auf eine unangenehme Alternative* (=http://www.ndrkultur.de/container/ndr\_style\_file\_default/1,2300,OID152456\_REF166,00.pdf).

28) Kurt Scheel(2003).

29) 스테판 드라이버(Stephen Driver) & 루크 마텔(Luke Martell): 『토니블레어의 집권전략과 새로운 국정관리』, 김정렬 역, (도서출판 창: 2001), p.157.

30) Frank Deppe(1998).

31) Walter Benjamin: “Theses on the Philosophy of History”, *Illuminations. Walter Benjamin: Essays & Reflections*, Hannah Arendt (ed.), (New York: 1969), p.257.

간된다. 제목 자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듯이 당시에는 매우 도발적이었다. 프랑스 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André Gorz)에 의해 1980년에 출간된 ‘프롤레타리아로부터 작별(Adieux au proletariat)’<sup>33)</sup>은 뜻하지 않은 판매부수를 기록한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sup>34)</sup>만큼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한 책은 없을 것이다. ‘위험사회’는 ‘계급사회의 종말’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대략 18년 전 자신의 책의 제목으로 삼은 이 개념 속에는 현재의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낱낱이 그려져 있다. 체르노빌(Tschernobyl)참사, 멕시코 금융위기에서 시작되어 아시아로 퍼져나간 금융위기, 도쿄(Tokyo)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 BSE(광우병) 등에 이르기까지의 ‘위험’은 이제 계급과 무관하게 우리들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위험’이란 개념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세계화’일 것이다. 세계화속에 오늘날의 우리는 포섭되어 있고, 또 그것이 만들어 내는 모든 것들과 함께 오늘날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세계화가 아직 정확히 측정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면, 벡의 생각은 옳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험에 대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그리고 하나의 다른 세계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하나의 세계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과거 같이 무조건적인 사적 소유의 철폐를 주장해온 고전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와 차별화 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태·환경문제<sup>35)</sup>는 고전적 사회주의가 문제화하지 않았던 영역이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관념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이념들, 무엇보다 앞서 언급된 고르와 벡의 이론은 녹색당의 정책에 하나의 이론적-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다. 유럽의 경험은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녹색당,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녹색당과 결합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듯 하다. 악셀 호네프(Axel Honneth)는 2002년 9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확신하기에 녹색당은 현재의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혼돈들

32) Hans Paul Bahrdt: *Gibt es noch ein Proletariat?*, Sammlung res novae 15, (Frankfurt am Main: 1962).

33) André Gorz: *Abschied vom Proletariat: jenseits des Sozialismus*, Aus dem Französischen, (Frankfurt am Main: 1980).

34)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auf Weg in di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1986).

35) 이에 대한 단행본으로는 문순홍: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1992)을 참조 할 것. 문순홍은 이 연구서에서 ‘녹색’ 개념과 ‘녹색정치’ 및 ‘녹색당’ 그리고 녹색과 사회주의의 결합형태로서 ‘생태사회주의’와 ‘생태마르크스주의’에 관해 이론적이고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Perplexionen)에 가장 신속하게 생산적으로 [...] 반응할 수 있는 정당이다. 녹색당은 말하자면 당 내부적 반성(Reflexität)에 고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 내가 연방의위원회 회의에서 강연을 했을 당시에 녹색당에게 당이 계속해나 가야 할 학습 과정으로서 하나의 확장된 정의(Gerechtigkeit)개념을 소개한 것은 전적으로 의미가 있는 듯했다. [...] 나의 생각은 당시에 다음과 같은 데 있었는데, 그것은 녹색당의 정치적 성숙과정을 하나의 배움의 과정, 즉 정의에 대한 우리의 전통 관념을 본질적으로 보다 급진적인 방향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이끄는 과정으로 소개하는 데 있었다. [...] 한마디로 자연환경의 보호, 문화적 소수들의 법적 통합, 민주적 공공성의 보장, 미래 세대들의 편입 등 이 모든 목표들을 녹색당은 정의정치의 총괄개념으로서 [...]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모든 정치의 영역들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리고 미래의 개인에게 민주사회의 온전한 삶(intakes Leben)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sup>36)</sup>

녹색의 사고는 독일에서 녹색당(Die Grünen)을 낳게 하였고, 녹색당은 현재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과 연정에 성공함으로써 현실정치에서도 그 중요성이 입증 되고 있다. 사회정의를 분배정의로만 이해하려는 (고전적인 의미의) 소위 말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려는<sup>37)</sup> 사회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녹색의 사고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녹색의 사고는 물론 보다 좌파에 속하는 공산당의 생각에도 반영되어 있다.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독일 민주사회주의당(PDS: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의 당수였던 게오르크 기지(Georg Gysi)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1년 전인 1999년, 독일의 슈뢰더 수상(Gerhard Schröder)과 영국의 블레어(Tony Blair) 수상의 노선<sup>38)</sup>을 비판하는 한 문건에서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이후에도 사회주의 정책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근대(Moderne)와 사회주의의 결합” 혹은 “사회주의적 근대”인데, 21세기에 있어 그것은 자본이용(Kapitalverwertung)의 우위를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생태학

36) “Der Philosoph Axel Honneth, Professor für Sozialphilosophie und Leiter des Instituts für Sozialforschung in Frankfurt, in der FR/Feuilleton am 21. 09. 2002”, *Initiative für Praxisphilosophie und konkrete Wissenschaft* (Praxisphilosophisches Feuilleton IV/2002) (=http://www.praxisphilosophie.de/feuille04.pdf).

37) 이에 대한 논의는 Mario Patuzzi: Zur Neuinterpretation der sozialen Frage oder: die Programmdiskussion in der SPD (=http://www.jusos-schwaben.de/programmdiskussion.htm) 참조.

38) 최치원: 「유럽의 신보수주의」 그렇다면 샤토브리앙과 프랑스의 미네르바는 이제 어디에?」, 『시대정신』 Vol.2 (2003 겨울) p.74 참조.

적 목표설정”의 우위로 대체시키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제는 시장의 폐지가 아니라, 하나의 다른 시장, 다시 말해 기업가적 이니셔티브의 억압이 아니라, 그 이니셔티브의 사회적 그리고 생태학적 실행을 위한 새로운 조건[창출]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공동의 이익에 배치되는 자본소유의 규정력(Verfügungsmacht)을 어떻게 감쇠(beschnitten)시키냐, 그리고 그럼으로써 생태학적 퇴행(Degradation)과 사회적 해체(Deintegration)의 원인이 되는 그런 규정력을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공공의 소유는 이 경우 새로운 기능을 담당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전근대나 반(反)근대로의 퇴화가 아니라 근대의 새로운 재구축(Umgestaltung)이다.”<sup>39)</sup>

### 참고문헌

- 로이 보인(Roy Boyne) & 알리 라탄시(Ali Rattansi):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 김보현 · 신명아 공역, (한신문화사:1992).
- 막스 갈로(Max Gallo) 외: 『진보는 죽은 사상인가?』, 홍세화 옮김, (당대: 1997).
- 문순홍: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1992).
- 스테판 드라이버(Stephen Driver) & 루크 마텔(Luke Martell): 『토니블레어의 집권전략과 새로운 국정관리』, 김정렬 역, (도서출판 창: 2001).
- 알렉산두루 타나제: 『실천으로서 휴머니즘』, 아담샤프 외, 『현대철학의 제문제』, 김현일 편역, (형성사: 1983).
- 최치원: 『유럽의 신보수주의? 그렇다면 샤토브리앙과 프랑스의 미네르바는 이제 어디에?』, 『시대정신』 Vol.2 (2003 겨울).
- Alheit, Peter: *Kultur und Gesellschaft. Plä doyers für eine kulturelle Neomoderne*, (Univ. Bremen: 1992), Forschungsreihe des Forschungsschwerpunkts ‘Arbeit und Bildung’ Bd. 18.
- Bahrtdt, Hans Paul: *Gibt es noch ein Proletariat?*, Sammlung res novae 15, (Frankfurt am Main: 1962).
- Beck, Ulrich: *Risikogesellschaft. auf Weg in di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1986).
- Benjamin, Walter: “Theses on the Philosophy of History”, *Illuminations. Walter Benjamin: Essays & Reflections*, Hannah

39) Georg Gysi: Gerechtigkeit ist modern. *Eine notwendige Antwort auf Gerhard Schröder und Tony Blair*, herausg. v. d. Bundesstiftung Rosa Luxemburg, August 1999 (<http://www.pds-eimsbuettel.de/docs/gysi12thesen1999.htm>). 이탤릭체 강조는 필자의 것.

- Arendt (ed.), (New York: 1969).
- Deppe, Frank: "Hat der Sozialismus noch eine Zukunft?", in *Christ und Sozialist* (Heft 2/1998) (=http://www.brsd.de/archiv/CuS\_Archiv/ CuS\_2\_1998/Zukunft\_des\_Sozialismus/zukunft\_des\_sozialismus.html).
  - "Der Philosoph Axel Honneth, Professor für Sozialphilosophie und Leiter des Instituts für Sozialforschung in Frankfurt, in der FR/Feuilleton am 21. 09. 2002", *Initiative für Praxisphilosophie und konkrete Wissenschaft* (Praxisphilosophisches Feuilleton IV/2002) (=http://www.praxisphilosophie.de/feuil04.pdf).
  - Engels, Friedrich: *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Berlin: 1972).
  - Erklärung des Parteivorstandes des PDS zum 50. Jahrestag 17. Juni 1953 (26. Mai 2003), "Sozialismus entsteht in und aus der Gesellschaft" (= http://sozialisten.de/partei/geschichte/view\_html? zid=3373&bs=1&n=4).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89) (=http://www.jefflittlejohn.com/history/endofhistory.htm).
  - Gorz, André: *Abschied vom Proletariat: jenseits des Sozialismus*, Aus dem Französischen, (Frankfurt am Main: 1980).
  - Gysi, Georg: *Gerechtigkeit ist modern. Eine notwendige Antwort auf Gerhard Schröder und Tony Blair*, herausg. v. d. Bundesstiftung Rosa Luxemburg, August 1999 (=http://www.pds-eimsbuettel.de/docs/gysil2thesen1999.htm).
  - Hobsbawm, Eric J.: *Europäische Revolutionen*, (München: 1978), Aus dem Englischen.
  - \_\_\_\_\_: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1997(1994)].
  - Klöne, Arno: "Perspektiven der Linken nach dem Zusammenbruch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in Europa", gehalten vor dem Herforder Kreis am 03.05.1991 in Weimar-Buchenwald anlässlich des Seminars (= http://home.t-online.de/home/Wilhelm.Ruehl/refkleon/htm).
  - Kool, Frits & Krause, Werner: *Die Frühen Sozialisten*, (Frankfurt am Main/ Wien/ Zürich: 1967).
  - Kuczynski, Jürgen: *Warum sind wir gegen den Kapitalismus?*, [(Berlin: 1974(1966)].

- \_\_\_\_\_: *Freunde und gute Bekannte. Gespräche mit Thomas Grimm*, (Berlin: 1997).
- Luxemburg, Rosa: *Gesammelte Werke Bd.4*, (Berlin: 1974), p.62.
- \_\_\_\_\_: *Die Krise der Sozialdemokratie* (=http://www.mlwerke.de/lu/luf.htm).
- Marx, Karl & Engels, Friedrich: “Da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EW Bd. 4, (Berlin: 1917, 5. Aufl., unveränd. Nachdr. der 1. Aufl. 1959).
- Patuzzi, Mario: *Zur Neuinterpretation der sozialen Frage oder: die Programmdiskussion in der SPD* (=http://www.jusos-schwaben.de/programmdiskussion.htm).
- Scheel, Kurt: *Gedanken zur Zeit, 6. September 2003. Kapitalismus oder Barbarei? Hinweis auf eine unangenehme Alternative* (=http://www.ndrkultur.de/container/ndr\_style\_file\_default/1,2300,OID152456\_REF166,00.pdf).

도서안내

21세기의 정치상황을 이론과 실제 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

# 현대정치의 이해

격변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면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기본서!!

■ 주요목차

- 1부/ 현대 정치학의 기본
- 2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3부/ 현대의 정치현상

교양사회 조정남 편 / 값 20,000원

특 집

**쿠바**의 사회주의

## 외부충격 무력화 시킨 적응능력

- 1990년대 이후 개혁과 대미(對美)관계

김 두 진 (고려대 연구교수)



### 서론

**패**스터는 쿠바 사회주의의 성격을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쿠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수록 쿠바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쿠바의 미래를 쉽게 예견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쿠바의 정치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Pastor Jr., 1998: 125). 쿠바는 1959년 이래 현재까지 약 4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주의 생존 전략을 추진해 왔다. 현실적으로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동안 소련에 정치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쿠바가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조만간에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카스트로의 쿠바는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해 왔던 대(對) 쿠바 제재조치 및 고립정책

을 극복하면서 살아 남아 왔다. 소련붕괴이후 쿠바의 운명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쿠바 사회주의의 운명에 관해 실제적인 충격을 주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쿠바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 능력을 보여 왔다.

이 논문은 1990년대의 쿠바 사회주의 생존의 문제를 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어떤 의미에서 쿠바 관계에 관한 한, 미국은 현실주의(realism)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오히려 쿠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인 쿠바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국내적 요인 때문에 - 예를 들면 반(反)카스트로 쿠바계 미국인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등의 요인 - 쿠바의 생존을 연장케 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편집성에 사로잡혀있는 대쿠바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오히려 카스트로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미국 우방국가들과 쿠바와의 관계개선을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는 역으로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쿠바와의 관계 증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국 쿠바 사회주의가 체제유지의 취약점을 보완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sup>1)</sup> 미국의 대쿠바정책은 쿠바혁명 이후 무려 4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소련 붕괴이전까지의 쿠바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논하고, 그리고 소련붕괴이후 대외 관계를 통한 사회주의 개혁과 적응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쿠바의 대응 전략을 검토할 것이다.

## 소련붕괴 이전 쿠바 사회주의의 발전

### ‘정치논리’와 대소(對蘇) 관계의 자율성

1985년 쿠바 혁명전의 친미적인 바티스타 정권 당시 국제교역에 있어 쿠바의 대미 의존도는 수출이 71%, 수입이 64%를 차지하고 있었다(Brenner, 1988: 9). 이러한 높은 수준의 강대국 의존도는 카스트로의 쿠바혁명이후에 동일한 비중으로 소련에게로 전이되었다. 가령, 1959-1989년 까지 30년 동안 소련과 동구권으로 구

1) 이 논문은 현실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에 대해서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존사회주의’로서 쿠바의 생존 능력의 성과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점이 많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시론적인 문제 제기는 권혁범(1995)을 참조할 것.

성된 사회주의경제블록 (CMEA)과의 통상비율은 85% (소련 70%, 동구권 15%)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들과의 금융거래는 96%에 달하고 있었다(김달용, 1999: 743).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소련의 카스트로의 쿠바에 대한 일차적인 목표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치 논리의 우위' (primary of politics) 였다 (김두진, 1993: 243). 다시 말하면, 소련의 대(對)쿠바 원조는 정치적 명분이 더 컸다고 본다.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강대국의 대외경제관계는 다분히 '경제성' 보다는 '정치성'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소련의 입장에서 카리브해 지역 뿐만 아니라 중미 지역에서 쿠바의 유대관계 확립은 당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의 미명하에 남미에 대해 패권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중요성에서 매우 사활적인 문제였다 (Best, 1987: 5-6). 한 마디로 소련에게 쿠바의 존재는 미국의 대(對)라틴 아메리카 헤게모니가 확고했던 당시 상황에서 하나의 '횡재'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소련이 제공한 경제원조는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상당한 액수에 달했다.<sup>2)</sup> 이것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쿠바가 소련과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지원하였다. 둘째는 쿠바의 주요 수출품목이며 수입원인 설탕가격에 있어 세계시장 및 기타 지역의 특혜 협정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지원하는 형태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장비의 형태로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쿠바 사회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차관 제공이었고, 이러한 차관에 대해 실제로 상환할 수 없었던 쿠바의 현실을 묵인해 왔다는 점이다(김두진, 1993: 253-254).

그러나 소련이 쿠바정부의 행동을 여러 형태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자원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두 국가의 관계는 결코 후원자-피후원자 (patron-client)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 실제로 쿠바는 혁명전 미국과의 관계와 비교해 볼때, 오히려 훨씬 더 큰 "자율성"을 누렸던 것이다<sup>3)</sup> (Tsokhas, 1980: 320). 쿠바와 소련과의 관계는 소련의 기존의 사회주의 동맹국가와는 차별성을 두는 것이었다. 쿠바의 위상은 소련에 대해 동구의 체코, 폴란드 혹은 형

2) 구체적으로 1954-1986년 사이에 소련의 대공산권 경제 원조 추이를 보면, 1439 억불 중에서 동구사회주의 국가가 50.1%, 북한 1%, 베트남 7.6%, 몽고 8.4% 인데 비해, 쿠바는 471억 5천만불로 무려 31.8%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두진 (1993: 253) 참조.

3) 쿠바가 소련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쿠바 혁명의 성공과정에서 소련이나 여타의 나라의 도움없이, 카스트로가 독자적으로 성취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카스트로의 혁명세력은 혁명이 성공한 이후, 오히려 기존의 쿠바공산당(PSP)를 흡수하였다. 이에 대해 Hennessy (1988: 76) 참조.

가리가 소련에 종속되었던 것과는 달리 훨씬 큰영향력 (leverage)를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쿠바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인 소련에 대해 행사했

**소련이 쿠바정부의 행동을 여러 형태로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두 국가의 관계는 결코 후원자-피후원자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 실제로 쿠바는 혁명전 미국과의 관계와 비교해 볼때, 오히려 훨씬 더 큰 “자율성”을 누렸던 것이다**

던 이러한 영향력의 배경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쿠바가 미국에 근접해서 위치해 있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소련의 헤게모니가 철저히 봉쇄되었던 지역에 쿠바가 소련 영향력 행사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쿠바의 외교행태 및 군사지원을 논할 때, 남미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 내의 공산혁명세력에 대한 쿠바의 지원은 곧잘 소련이 사주하는 ‘대리전’ (proxy war)이라는 논리가 우세하게 받아들여 지기도 했다. 특히 1975년 아프리카의 앙골라 개입과 1977년 에치오피아 사태에 대한 쿠바의 점증하는 개입에 대해 1970년대 중반에 미국내의 지배적인 견해는 대리전 논리였다. 예를 들어 곤잘레스와 같은 분석가는, 쿠바의 행동이 모스크바에 경제적 원조 형태로 빚진 것을 상환하려는 행위로 파악하기도 했다 (González, 1977: 2). 그러나, 앙골라사태 및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대한 쿠바의 군사개입은 소련의 대리전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sup>4)</sup> 단지 쿠바의 세계주의적 행동이 쿠바의 이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모스크바의 이해관계 및 목적에 일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밍게스는 쿠바의 이러한 군사 및 외교적 개입에 대해 “쿠바는 약소국이지만 강대국의 외교정책을 구사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Domínguez, 1978: 83).

## 1990년대 쿠바의 신경제 개혁과 대외개방

쿠바에 대한 소련블록의 경제적 지원은 최소한 1989년까지 지속되었고 연간규

4) 이러한 예를 증명하는 하나의 실례는, 앙골라 사태때 세 개의 분파중에서 친소적인 세력이었던 MPLA 가 소련의 개입을 요구했을 때 소련은 앙골라 사태에 개입하기를 꺼려하였다. 반면에 쿠바는 즉각적으로 개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모는 대체로 40-50억 불에 달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이 대두하면서 대쿠바 지원액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소련체제의 붕괴로 야기된 탈냉전 상황의 급속한 진전은 사회주의 경제블록과의 경제관계의 급속한 감소를 야기시켰다. 이에 쿠바경제는 급속한 침체를 겪게 되었으며, 또한 미국이 쿠바 사회주의 약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시도 하였던 대쿠바 통상금지 조치는 쿠바경제를 극심한 파국의 국면으로 내몰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쿠바의 카스트로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의 채택을 거부하고 계속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할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1990년 탈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의 마이애미 쿠바 망명 단체에서는 카스트로의 쿠바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보았다(김달용, 1999: 734-744). 그럼에도 탈냉전시대의 극도의 위기속에서도 쿠바의 카스트로의 체제는 여전히 건재해 왔다. 한 마디로 쿠바식 사회주의의 개혁이 많은 난관에 봉착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 및 급격한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적응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단기적으로 보아 쿠바 자체의 사회주의 개혁 전략은 일단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쿠바는 주요 경제제도의 개편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쿠바의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를 도모하여 자본주의적 개혁정책도 일부 수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도부터 쿠바는 극심한 경제파탄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폐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서방세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려는 자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종전의 사회주의체제를 변용하여, 자본주의의 시장메카니즘을 수용하는 사회주의적 경제제도로 전환을 시도했다. 자본주의의 '제한적 수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쿠바의 신경제정책은 (1) 관광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및 외화유입(미 달러 포함)의 증대 (2) 계획경제의 개혁과 경제정책의 분권화 (다양화) (3)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등 주요 방향성을 설정하고 1990년대초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카스트로가 혁명을 하기 전만 해도, 쿠바는 카리브해 연안의 휴양지로서 주로 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으나 카스트로가 집권한 이후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무엇보다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쿠바는 관광산업에 더욱 치중한 결과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 사실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 보다 활성화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0년에 들어 추진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쿠바의 노력은 바

〈표-1〉 쿠바의 관광산업 효과와 거시경제지표 : 1989 - 2000

	1989	1992	1995	1998	2000
관광객수(단위: 1000 명)	275	460	745	1416	1774
관광수입(단위: 백만불)	-	550	1100	1759	1948
직접		367	567	1571	1756
간접		183	533	188	192
관광수입 / GDP (%)	-	4	5	7	7
관광수입 / 제품수출 (%)	-	31	73	114	155
고용효과(단위: 1000 명)	84				300
직접	54	-	-	-	100
간접	30				200

\* 출처 : Jensen (2003: 6), "Socialism, Spillovers and Markets in Cuba."

티스타 정권 말기에 추진되기 시작했던 대규모 호텔건설 사업 이후 최초의 관광개발에 관한 관심 표명이었다 (하태현, 1993: 77-78).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외환부족 때문이었다.<sup>5)</sup> 실제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쿠바의 관광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극심한 달러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쿠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관광산업은 경제적으로 재정수입 증대와 고용효과의 창출 및 국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표-1〉에서 쟈슨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쿠바의 관광산업 육성의 결과로 쿠바 관광객수는 2000년에 들어 무려 180만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쿠바 국내에서 무려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관광수입은 제품수출의 비율에 비해 무려 155% 효과를 나타내어서, 1999년 및 2000년도의 경우 전체 GDP 의 7%를 차지하게 되었다.<sup>6)</sup>

둘째로, 1993-94년에 이르러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는 심각한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분권화 정책은 중앙집권화된 개혁경제로부터 보다 다원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한 시장사회주의 (market socialism) 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쿠바의 사회주의 개혁의 진화주의적 (evolutionism) 변신을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의 도입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March-Poquet, 2000: 105-

5) 1976년에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쿠바 국립관광연구소 (Instituto Nacional de Turismo)를 설립하였다. 김연철 (2002: 231) 참조.

6) 학자에 따라 관광산업의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그것은 관광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그만큼 외부로부터 관광산업육성에 필요한 수입 및 원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론 수입총액이 1996년의 경우 37% 까지 차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김연철 (2002: 232) 참조.

110; 김달용 1999). 관광산업의 조직과 관련하여, 1994년에는 관광산업부(MINTUR)를 설립하였다. 관광산업부를 만든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시장사회주의에 더욱 연관된 제도로 파악된다. 이 관광산업부는 초기에 소규모로 시작하여, 담당 관리들이 별로 없었고, 초기에는 쿠바의 최고 결정기구인 경제기획부(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에서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관광산업부가 대부분의 상업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여, 1994-1998년 기간동안에 주요 호텔 체인을 흡수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관광산업화 내의 자치적인 사업내용은 국영사업의 민영화를 수반하지는 못했으나 호텔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운영업체간 경쟁력 강화의 도입이었다. 그 결과 종래 국가기업의 소유권의 개혁이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관광사업체 간의 자유경쟁제도가 시행되도록 하였다. 현재 쿠바의 관광사업은 가격 및 서비스의 질적인 차원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부상하였다(Jesen, 2003: 440-441).

그럼에도 쿠바 의회는 중국식 모델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없었고 여전히 카스트로는 시장지향적 개혁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1993년 하반기에 카스트로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3가지 주요한 시장개혁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쿠바내에서 외화의 소지와 자유로운 유통, 134개의 자영업의 승인 및 생산협동조합 산하의 국영농장개혁이었다. 무엇보다 쿠바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1차 상품 수출 의존도를 탈피하고, 비전통 산업분야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통상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서구국가들과 인접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스페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쿠바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무엇보다 멕시코와의 교역이 증대하는 가운데, 양국간의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건설장비, 식품, 음료, 생명공학, 니켈, 시멘트, 직물, 기계 및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김달용, 1999: 758-760).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쿠바의 해외자본의 유치문제이다. 1990년대부터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과의 교역 관계의 악화로 쿠바 경제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쿠바는 생필품 부족 현상이 극심했다 (Cohen 2004). 무엇보다 쿠바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기 위해 미 달러화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별척조항을 폐지했고, 외화의 자유로운 태환을 보장하였다. 나아가서 미국 마이애미의 쿠바 망명자들의 송금을 허용하였다. 1982년에 도입했던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50조(Decree Law 50)에 49% 한도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현

재 쿠바에는 외국인이 100퍼센트 투자하는 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 6월에는 신외국인 투자법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

쿠바의 존재는 서반구내의 여타의 국가들에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어떠한 공산국가들에 비해 더욱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궁극적인 구호는 “카스트로 없는 쿠바 민주국가”이며 봉쇄정책을 한시라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어, 관세면제 및 세금감면의 혜택도 주어졌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 이외에 금융, 은행, 보험 등의 서비스업의 개방을 통해 상당 부분 자본주의적 성향의 사업을 허용하기 시작했던 점이다. 쿠바정부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60억 달러이며, 농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건설자재,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리고 주요 투자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스페인, 멕시코, 영국 및 독일 등 주요 서방국도 포함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는 1996년 미국의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쿠바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결정은 아니었다<sup>7)</sup> (곽재성, 2002: 10-14). 또한 해외자본의 경우에,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의 잠재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관광산업 공급업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Jensen, 2003: 450).

## 쿠바 사회주의와 대미(對美)관계

### 1990년대 미국의 쿠바 정책의 성격과 배경

1980년대 말 이후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및 쿠바와의 관계 개선의 명분은 쿠바내의 “민주화”의 문제이었다. 1959년 쿠바혁명의 성공이후 미국-쿠바간 갈등의 요체는 국제관계와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의 해방운동 지원을 포함한 쿠바의 공격적인 개입과 같은 특이한 대외정책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안보위협’ 이었다 (Robinson, 1995: 643-644).

미국의 입장에서 미주대륙내의 쿠바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배타독점적인 지배지역인 서반구 내에 공산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케네디 이후 레이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입장은 미주지역내에

7) 1996년 3월 미국은 쿠바자유민주연대법으로 불리우는 헬름스-버튼법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1959년 쿠바혁명이후 쿠바가 국유한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재산을 사용하는 외국기업의 임직원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해 미국 입국 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쿠바와의 교역당사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기로 명시한 것이다.

공산세력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하에서는 북미지역을 겨냥할 수 있게 쿠바가 소련에게 교두보를 제공하게 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포함하여 급기야는 멕시코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두려움을 미국은 늘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냉전하에서 쿠바의 존재는 서반구내의 여타의 국가들에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어떠한 공산국가들에 비해 더욱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궁극적인 구호는 “카스트로 없는 쿠바 민주국가”이며 이를 고수하려는 봉쇄정책을 한시라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김명애, 2003: 190-191).

탈냉전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까지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전통적인 쿠바 외교정책의 기본틀에서 변화된 것이 없었다. 이전의 소련블록의 공산국가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미국조차도, 쿠바정책에 관한 한 여전히 냉전시대의 정책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냉전 이후 미국은 카스트로의 쿠바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화정책을 펼칠수가 없었다. 카스트로가 존재하는 한 쿠바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쿠바혁명 이후 미국의 쿠바정책의 궁극적 실패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이 쿠바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취할 경우 카스트로에게는 그 동안 취했던 온갖 대미 대결정책이 정당화 된다는 맥락에서 완승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쿠바정책의 핵심은 카스트로가 존재하는 한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항상 미국을 괴롭히는 쿠바정책의 딜레마였다. 따라서 냉전 이후의 미국의 쿠바 정책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반쿠바적인 강경노선을 고수하는 성향으로 더욱 굳어져 버린 것이다 (김명애, 2003: 191). 결과적으로 1992년의 ‘쿠바민주법’ (Cuban Democracy Act) 과 1996년의 ‘쿠바 자유와 민주연대법’ 은 이런 외교적 딜레마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강경노선의 쿠바정책의 등장 배경에는 쿠바가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미국의 낙관적 신념이 실망스럽게도 무산되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초 부시 행정부는 유럽공산주의의 종언의 경험에 비추어 ‘보다 자본주의적인 국제환경에서’ 쿠바의 정권이 자체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Alfonso, 2002: 74; Maguercia, 2002). 그러나 쿠바는 소련블록의 와해라는 엄청난 외부적 충격에 직면하여 쿠바 자체의 사회주의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또 사회주의 약소국가로서 뛰어난 ‘변형능력’ (transformative capacity)을 발휘함으로써 미국의 쿠바 붕괴에 관한 낙관적인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쿠바 사회주의가 다시 건재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다시 강경노선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sup>8)</sup>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하는 사실은, 미국의 쿠바정책은 한 마디로 쿠바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작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쿠바정책은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반카스트로 쿠바인들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쿠바정책에 있어서 불변의, 또 부동의 변수처럼 기능하고 있다.<sup>9)</sup> 쿠바계 미국인들은 선거 때 마다 국내 정치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쿠바 망명객들은 플로리다와 뉴저지에서 하나의 정치적 투표 블록을 형성하여 의회와 대통령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이처럼 국내의 강력한 반쿠바 세력들의 정치적 지지표의 향방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는 외형적으로 쿠바에 대해 강경노선을 나타내는 법안제정을 하게 될 때, 이를 과감히 무시해 가면서 온건정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쿠바정책에 관하여 냉엄하고 엄격한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의 외교정책 노선에 휩쓸려 들어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탈냉전의 국제 환경은 워싱턴과 아바나의 양국관계에 관해서 오히려 모순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쿠바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이데올로기 대결전은 가열화되었다. 또한 미국은 시장경제모델 이외에 사회주의 모델을 결코 대안적인 경제체제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는 비현실적인 대결정책의 고수로 당분간은 불가능할 지도 모를 쿠바의 사회주의의 종언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쿠바를 겨냥한 미국의 몇 가지 강경정책중 두 가지 조치는 1992년의 '미국민주법' 과 1996년의 헬름스-버튼법 (혹은 쿠바자유와 민주연대법) 이었다.<sup>10)</sup> 헬름스-버튼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쿠바에 대한 외국 투자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쿠바의 대외통상 관계에도 손상을 입히려는 것이었다. 주요 골자는 쿠바 정부에게 재산을 몰수당했던 사람들이 그 재산을 인수한 다른 회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걸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sup>11)</sup> 쿠바 미그기가 1996년 쿠바계 미국인의 민간기를 격추시킨 사건 이후인 1996년 3월12일 클린

8) 변형능력(transformative capacity) 이란 바이스 (Weiss)가 제시한 개념이다. 세계화와 같이 외부의 거대한 변화 내지 충격에 대한 국가의 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탈냉전의 충격에 대한 사회주의 생존전략을 위한 개념으로서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 자세한 것은 Weiss (1998) 참조.

9)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쿠바 정책은 마이애미에서 만들어진다" 는 말이 있다.

10) 1994년 봄 여름 동안 쿠바 난민들이 플로리다 주로 들어오면서, '구조를 위한 형제단' (Brothers to the Rescue)이라는 쿠바계 미국인 단체가 쿠바 정부를 비난하며 쿠바 영해를 들어가기도 하였다. 1996년 이 단체에 속한 비행기 3대가 쿠바 국제 수역에 다다르고 그 중 한 대가 쿠바 영공을 침입했을 때, 쿠바 공군은 비무장한 민간항공기임에도 불구하고 2대를 격추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

턴 대통령은 결국 플로리다주 예비 선거일에 헬름스-버튼법에 서명하였다.<sup>12)</sup> 이 법안의 특이성은 과거 무역봉쇄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정부 소관의 문제이어서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해 온 데 비해,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무역봉쇄의 문제가 이제 의회가 관장하는 법안의 문제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쿠바정책은 선거정치에 휩쓸려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대통령간에 외교정책을 둘러싼 힘겨루기 내지 갈등 표현의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하였다. 최소한 2차대전 이후 20여년 가량은 미국외교정책에 관한한 “제왕적인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였던 점에 비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sup>13)</sup> (Havey and Vanderbush, 1999: 387-388). 이 법의 성격은 쿠바에 대한 외국투자를 금지시키는 충격을 낳기 때문에 쿠바의 자율권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여러 형태로 쿠바에 관여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을 자극하고 반발을 낳게 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먼로 독트린의 원칙을 쿠바 뿐만 아니라 여타의 서구세계에 확고히 재인식시키려는 조치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냉전 이후 미국의 쿠바정책 성격은 외견상으로 “패권적 제국주의로의 환원”이었다 (김명애, 2003: 196). 그러나 한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미국이 일방적인 강경노선을 취한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쿠바를 지원하기도 하는 양면정책 (two track policy)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 미국의 쿠바정책의 기초는 서방국가들을 상당히 자극할 만큼 강경 일변도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곽재성, 2002: 21-23).

미국 강경노선 가운데서 쿠바는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꾸준히 쿠바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갔다. 특히 미국을 긴장하게 만든 사건으로는 2000년 12월에 이르러, 러시아의 푸틴이 쿠바를 방문한 일이었다. 이 방문은 몇 가지 양국의 통상 및 외교 관계와 관련된 협정에 관한 조인을 포함하여 양국간에 과거의 우방국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처럼 비쳐졌다. 푸틴은 쿠바에게 과거에 소련에게 아직 갚지 않은 110억불 내지 200억불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쿠바에 5천만 달러의 추가적인 차관 제공을 할 것을 약속하여 관계 돈독의 조짐을 보였던 것이다 (Rosell, 2001: 259-260).

미국 정부는 2004년 6월 30일에 신 대쿠바 제재 조치를 발효했다. 주요 제재

11) 일명 재산소송 조항 Title III 이라고 명명되었다.

12) 이 법안은 미국의 경제적 봉쇄를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 및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물러났을 때에만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새로운 정권의 성격까지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3) 베트남전의 종전이 미국의 외교정책부문에 의회가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Havey and Vanderbush (1999: 388).

사항으로 쿠바 현금 송금의 경우 연간 1,200 달러의 송금대 상자의 범위를 '쿠바 내 가족' 으로부터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직계 가족으로 한정

**쿠바 사회주의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체제내의 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의 비현실주의적 정책의 한계 때문에 당분간은 체제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하였다. 또한 쿠바 방문 횟수를 연간 1회에서 3년에 한번으로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쿠바 방문시 물품 구입을 100 달러까지 할 수 있으나, 이 물품을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쿠바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다시 강화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쿠바 사회주의 종식에 실효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KOTRA, 2004).

이와같이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쿠바 외교정책은 국내의 반카스트로 강경론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책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더욱 격렬한 대립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기대했던 카스트로 정권의 몰락 혹은 약화라는 기대 효과 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쿠바의 카스트로의 입지를 연장시켜 주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쿠바는 1990년대를 통해 현재까지 불리한 국제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카스트로 정부의 존립 이유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사회주의 체제로서 지속적인 변형능력을 보여 왔다.

## 결론과 전망

냉전하에서 쿠바는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주는 대신, 반대 급부로 경제적 자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탈냉전이후에는 미국이라는 유일무이한 강대국이 쿠바에 대해 여러 유형의 강도높은 경제적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의 '존재 이유' 를 마련해 왔다. 소련블록의 붕괴 이후 쿠바 사회주의의 존립의 문제는 상당 부분 미국의 외교적 정책에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카스트로의 쿠바에 대해 체제 와해를 가져올 만큼 충격을 주는데 실패하였다. 탈냉전 이후 쿠바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개혁과 대외 개방,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유인을 끌어들이는 국가의 '변형능력' 을 보여 왔다.

미국은 쿠바 정책에 있어서 냉엄한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 편집성을 드러냈다. 미국의 쿠바 정책은 외교정책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다분히 국내정치의 반영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즉 쿠바라는 외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상당 부분 미국의 국내정치의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쿠바정책은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한 반카스트로 쿠바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연유되었다. 이런 특성은 미국 국내의 선거정치에 연관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냉엄한 현실주의 노선을 취하게 하는데 부단히 방해적인 불변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적으로 쿠바를 제재하기 위해 의회가 주도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서구의 우방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이어져, 역설적으로 이들 국가로 하여금 쿠바와의 관계 증진을 촉진케 하였다. 이것은 쿠바의 카스트로의 정치적 입지를 점차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강경노선은 쿠바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 내지 약화라는 미국의 기대를 부응시키기 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쿠바의 카스트로의 입지와 정권 연장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쿠바 정책은 냉전하에서 뿐만 아니라, 탈냉전 이후에도 별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쿠바 사회주의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체제내의 약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의 비현실주의적 정책의 한계 때문에 당분간은 체제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곽재성. 2002, “1990년대 이후 쿠바의 개혁과 대외개방,” 『라틴아메리카 연구』 Vol. 15, no. 2
- 권혁범. 1995, “사회주의의 역사적 제약과 사회주의의 위기,” 『통일문제연구』 7권 2 호.
- 김달용. 1999, “쿠바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1990년대 전략적 특성,” 『서어서문연구』 Vol. 14.
- 김두진. 1993, “카스트로와 쿠바 사회주의의 위기,” 서진영 편 『사회주의의 위기와 생존전략』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명애. 2003, “1990년대 미국의 쿠바정책의 성격과 배경,” 『미국사연구』 Vol. 18.
- 김연철. 2002, “북한의 경제개혁 전략: 쿠바 사례의 적용 가능성,” 『아세아

연구』 제 107 호.

- 하태현. 1993, 『쿠바의 경제현황과 한-쿠바 협력 가능성』 (서울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Alfonso, Haroldo Dilla. 2002, "Cuba : The Changing Scenarios of Governability," *Boundary 2*, 29:3.
- Best, Edward. 1987, *US Policy and Regional Security in Central America* (Guildford and King's Lynn : Biddles Ltd.).
- Brenner, Philip. 1988, *From Confrontation to Negotiation* (Boulder and London: Westview).
- Chanan, Michael. 2001, "Cuba and Civil Society, or Why Cuban Intellectuals Are Taking about Gramsci," *Views from South*, Vol.2, no. 2.
- Cohen, Emily. 2004, "The New Green Movement in Cuba," *Peace Review, March*.
- Domínguez, Jorge. 1978, "Cub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57 (Fall).
- González, Edward. 1977, "Complexities of Cub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2 (November-December).
- Hennessey, Alistair. 1988, "Cuba: a client state," in Peter Calvert ed., *The Central American Security System : North-South or East-We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nsen, Camila. 2003. "Socialism, Spillovers and Markets in Cuba,"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5, no. 3.
- March-Poquet, M. José M. 2000, "What Type of Transition is Cuba Undergoing?"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2. no. 1
- Muguercia, Magaly, 2002, "The Body and Its Politics in Cuba of the Nineties," *boundary 2*, 29:3.
- Pastor Jr., Manuel. 1998, "Cuba : The Blocked Transition," *MOCT-MOST*, Vol. 8.
- Peteras, James and Morley, Morris. 1996, "Clinton's Cuba Policy : two steps backward, on step forward," *Third World Quarterly*, Vol. 17, no. 2.
- Robinson, William I. 1995. "Pushing polyarchy : the US-Cuba case and the Third World," *Third World Quarterly*, Vol. 16, no. 4.
- Rosel, Andrew José. 2001, "The Future of U.S.-Cuba Relations, a Policy Shift from the Helms-Burton Act," *Law and Business Review of Americas*, Winter/Spring.

Vanderbush, Walt and Haney, Patrick J. 2002, "Policy toward Cuba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4. no. 3.

Weiss, Linda. 1998, *The Myth of the Powerless State : Governing the Economy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and Itacha : Cornell University Press).

KOTRA. 2004, [http://www.kotra.or.kr/main/trade/economy/view.jsp?inpt\\_no=116157...](http://www.kotra.or.kr/main/trade/economy/view.jsp?inpt_no=116157...)

(검색일 2004. 7. 20)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주요 목차>**

**제 1 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
4. 내셔널리즘
5. 국민국가론

**제 2 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로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샐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 국가부문과 사적부문의 균형발전 모색

- 국영기업개혁을 중심으로

이 강 우 (우송대 교수)



### 1. 서 론

1986년 공산당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대외개방을 의미하는 도이머이를 선언한 후, 90년대 들어 베트남은 연8%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안정적인 개방개혁을 이루어 왔다. 98년부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로 인해 99년 경제성장률이 4%대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2000년에 6.8%, 2002년에는 7%대를 회복하였다. 특히, 2001년 12월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장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오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목표로 내-외국인투자법, 기업법, 국영기업법 등의 수정, 보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내-외국인 이중가격제의 단계적 폐지 등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과거, 베트남

남은 열강의 식민지배와 장기간의 전쟁으로 근대화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1975년 통일 이후에는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하에서 전근대적인 농업사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때문에 현재 베트남의 개방개혁은 사회주의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후진농업사회로부터 선진산업사회로의 경제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가 동시에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를 선언하여 시장체제를 도입한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다른 체제전환국들과는 달리 국영기업의 GDP 비중이 상승하는 등, 여전히 국영부문을 우위로 하는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의 국영기업도 그 경제적 효율이 사기업 보다 높은 예가 없듯, 베트남도 국영기업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주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대 베트남 투자금액에 있어 세계 4위, 무역규모 면에서 5위국이며, 특히 2003년에는 투자부문에서 1위로 급부상하는 등, 양국의 실질적인 교류가 매우 급격히 증진되는 추세에 있다. 더구나, 북한이 최근 잇달아 경제개혁조치의 움직임을 보이고, 남북한간 상호이해가 절박한 시점에서, 북한과 역사,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지닌 베트남의 경제개혁과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여기서는, 과거 사회주의경제모형인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체제가 어떠한 구조 속에서 존재하였는지, 또한 경제체제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회주의베트남경제의 핵심인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베트남공산당은 오랜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끊고 베트남 민족에게 독립과 통일을 가져다 준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국영기업을 비롯한 전 분야의 도이머이가 모두 공산당이 제시하는 노선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국영기업개혁에 대한 공산당의 인식, 정책을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과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성립과 운용 그리고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영기업의 부실, 저 효율성에 대해 서술하고 Ⅲ장에서는 도이머이 시대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혁신과 그에 따른 국영기업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와 국영기업의 부실화

베트남은, 약 1세기에 걸친 프랑스, 일본의 식민지배와 이후 계속된 1,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시장기제나 그에 따른 경영활동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 또한, 1945년 사회주의 정권의 성립과 함께, 1975년 남북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베트남은 거대 제국주의 미국을 물리쳤다는 자신감속에서, 사회주의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로부터 정치적 고립과 경제봉쇄라는 복합적인 환경 속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30년대 소련의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이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것을 목도한 베트남공산당은, 국가의 생산재와 군수물자의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증대시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공업우선발전노선을 선택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당시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는, 자본이 부족한 농업국이 단기간 내에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을 채택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체제였다.

베트남정부는 이자지출과 수입설비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 이자율 및 저 환율정책을 채택하였으며, 동시에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임금, 원자재, 에너지, 운수 부문 등에 대해 저가정책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저가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대량의 이윤을 창출하여 재투자를 위한 자금을 강제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정책이 가능하도록 식품, 주택, 의료 및 의복을 포함한 생활필수품 전반에 저물가정책을 확대, 실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농업 중심의 전근대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농업에 대한 직접세 이외에, 농산물 수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세 효과를 거둠으로써 가격인여를 창출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저 이자율, 저임금, 저 원자재 및 생필품 등 저가정책이 중공업우선 개발전략의 거시정책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강제적인 저물가 거시정책은 여신, 외환, 원자재 및 생필품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러한 왜곡된 거시환경 속에서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중공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자금, 외환, 노동력, 원자재 및 생필품을 분배하기 위한 계획과 행정적인 통제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 정부의 계획과 통제는 점차 은행, 대외무역 그리고 물자의 배분체계에 대한 독점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베트남공산당은 중공업우선주의정책을 통한 공업기반의 확충이 농업지원체제의 확립과 경공업의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농민과 도시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축적과 공급위주의 공업화 노선은 농업과 소비재공업 부문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노정하였고, 또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자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높은 공업성장률을 시현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왜곡된 거시환경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통제 시스템은, 30여

년 간의 전시체제 속에서 국방부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사회주의식 소유관계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한 국영기업의 관리체계에 철저히 적용되었다.

국가는 행정적 명령을 통해 국영기업을 직접 관리하였다. 국영기업은 생산계획에 있어 국가에 의해 상세하고도 철저히 통제되어 상부기관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단위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였다. 생산조직이나 계획상의 모든 변화는 정부주관부처에 보고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하였다. 정부 의결 244-CP/HDBT (1976-12-20)에 따르면, 매년 국가가 국영기업에 부과했던 9개 명령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도이머이를 선언하여 시장체제를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다른 체제전환국들과는 달리 국영기업의 GDP 비중이 상승하는 등, 여전히 국영부문을 우위로 하는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 역시 이어지고 있다.**

- 수출을 포함한 총 생산물 가치
- 수출을 포함하여 품질 규정을 통과한 주요 생산물의 수량
- 주요 과학기술지표
- 현물로 계산된 노동생산성
- 총 급여
- 이윤과 예산납부금액
- 국가의 기초투자액, 주요공정 내역, 가동 시간과 용량
- 국가가 지급한 주요 물자와 설비, 주요 생산물에 대한 감가상각률
- 생산비(이 명령은 추후 추가됨)<sup>1)</sup>

이와 같이, 국가의 행정적 지시에 의한 직접적인 관리체계는 국영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국가가 결정하는 철저한 관치경제체제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독립채산제는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행정관료적 성격을 띤 주관부처들의 중복, 과잉으로 비대해진 국가관리기구, 생산, 경영활동 등 현실에

1) Pham Thi Nga, 1997, tr. 63.

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체제 속에서 입안된 계획들은 현실성을 결여하여 실수요와 유리된 경우가 많았다. 기업 역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아닌, 만성적인 공급부족과 독점적 지위 하에서 국가에 의해 지정된 고객을 위해 생산하는 환경에서는 굳이 시장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국가는 국영기업에 배급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원자재, 설비 등 모든 요소들을 국가가 지급하고, 기업 역시 그에 상응하는 생산물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기업은 국가로부터 모든 경비를 수령하였고, 이윤이 발생하면 국가가 징수하고 적자 시에도 역시 국가가 보전하였다. 이처럼 생산, 경영활동이 기업의 수입과 무관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능동성을 상실하고 기술개발을 외면하였다.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상품의 질이나 생산비용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달된 생산계획의 달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 시기에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생산할 것인가를 가격신호로 결정하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생산비용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의 주관적인 지시로 결정되었다. 사부문의 경제활동은, 경쟁자체가 배제되어 매우 제한적이었고, 국영기업 역시 순수한 협력 정신과 사회주의식 생산 운동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러한 관리체계하에서, 국영기업의 부실은 당연한 결과였다. 기업으로서 이윤을 목표로 하지 못한다면 생산, 경영활동에 있어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대다수 국영기업은 적자경영 속에서 투입 요소들의 가격이 실질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분식회계와 국가 보조금을 통해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 전체 산업시설에 있어 적지 않은 부분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공업분야에 있어 40%에 이르는 국영기업의 설비가 가동 중단되어 있었다.

1976-1980년 동안, 대형 프로젝트의 신규 건설 투자가 집중되어 국영기업 내 고정자산이 2배로 증가했으나 국영기업의 위상은 그에 상응하여 증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였다. 1976년 국영경제의 비중이 신규 고정자산의 33.1%, 사회 총투자의 37.1%, 공업총생산가치의 68.8%를 차지한 반면, 1980년에는 동일한 순으로 44.5%, 45.1%와 60.2%에 그쳤다.<sup>2)</sup>

2) Nguyen Thi Thanh Ha, 1997, tr. 90.

결국, 이러한 국영기업의 부실은 막대한 예산적자로 이어졌고 거대 부채와 인플레이션<sup>3)</sup> 그리고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베트남공산당은 정치적 정통성에까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개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영경제 및 베트남 경제 전분야의 발전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3. 도이머이 시대의 경제체제개혁

#### 경제체제개혁과 국영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은 기존의 강제적 자본축적방식과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에 근본적인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과거 축적위주, 소비자 부채의 공업화 전략으로부터 수요가 경제성장의 기본 요소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자본의 강제적 축적 원으로서 기능해오면서 집단농장 하에서 극도로 피폐해졌던 농업부문을 활성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공산당은, 1980년 중앙당 서기 국지시 100을 공포하여, 농업활동에 있어 농민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잉여농산물도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산물 수매 가격을 인상하는 등 농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구매력확보를 도모하였다. 이제 개별농민이 농업생산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경작하는 개인농 체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농업부문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이 공업부문의 성장을 위한 자본 축적원으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부문은 국영기업 자체 내에서 생산, 경영효율의 향상을 통한 새로운 축적의 원천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배급위주의 관리체계, 생산요소 지급과 생산물 납부 관계를 철저히 혁신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가격자율화는 소비재, 가공공업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이들 부문으로의 투자유인이 증대되었고, 결국 개인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등이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베트남경제체제가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게

3) 1980년대 말, 인플레이션은 최고 774.7%에 달했다.

되었다.

1986년 12월, 6차 전국대표자 대회<sup>4)</sup>에서 베트남공산당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부터 국가관리하에 시장경제가 작

**생산력의 발전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온전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베트남공산당으로서 시장경제와 상품, 화폐의 수급관계를 이용하는 다 부문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동하는 다 부문 상품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경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이머이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분야의 민주화가 진행되어, 고도의 계획경제관리체제에서 국가의 법률과 거시정책에 의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도한 국영, 집단부문의 독점으로부터 다 부문 경제로의 전환; 현물지급을 위주로 한 배급경제로부터 상품의 가격체제가 작동하는 독립채산제로의 전환; 대내지향적인 폐쇄경제에서 대외지향적인 개방경제로, 대외관계의 다변화, 다양화가 진행되었다. 생산력의 발전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는 온전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베트남공산당으로서 시장경제와 상품, 화폐의 수급관계를 이용하는 다 부문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구 경제모형에서는 사회주의경제는 국영기업이 근간이 되는 국영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건설이란 곧 국영기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동일시 되었다. 그러나 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다 부문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국영기업은 과거와 같이 경제 전분야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여러 경제부문 중 하나의 위치에 만족해야 했다. 다 부문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전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부문들의 조화롭고 종합적인 성장,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처럼 자본축적메커니즘과 국영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따라, 베트남 국영기업도 과거와 같이 정부의 생산명령만을 집행하는 국가행정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다 부문 상품경제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재정과 생산, 경영자율권을 갖는 독립된 경제적 실체로 인정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에 대한 관리체계 역시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4) 베트남공산당은 5년에 한번씩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지난 5년을 평가하고 향후 5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매년 2차례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면 정부가 의정서나 지시, 결정 등의 문서로 이를 집행하고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산당은 국영기업에 “주도적 역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방향을 시사하였다. 8기 당 중앙 위원회 4차 회의에서 공산당은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sup>5)</sup>고 선언하여, 각 경제부문이 법 앞에 평등한 다 부문경제를 채택하였지만 각 부문이 동일한 역할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새로운 경제체제가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지향할 수 있도록 국영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이 규정한 국영기업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영기업의 주도적 역할은 시장경제에서 그 경쟁력과 효율을 제고하는 데서 나타나야 한다. 기업은 공익기업이든지 수익형 기업이든지 간에 독립채산을 기반으로 수익창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는 기업에 재정, 인사, 경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시장 경쟁 환경에 노출시켜 경영효율의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과거 독점적 지위 속에서의 주도적 역할과는 다르게 도이며이 시대에서는 국영기업이 많은 수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경쟁력 있는 소수의 국영기업이 주요핵심산업분야에서의 그 지위를 굳건히 할 때 사회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영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현 단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건은 국가가 직접 주요 경제분야를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미래에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타 경제부문 역시 동반 성장하여 사 부문이 주요 산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부문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구조를 전환하여 자본을 회수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그러나 사 부문이 아직은 참여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이렇듯, 국가는 설립시의 목표를 완수한 국영기업의 소유구조를 과감히 전환하고 국가만이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신속히 개발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의 경제관리 방식도 국영기업을 통한 직접방식에서 재정, 금융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 국영기업개혁

국영기업개혁은 다음의 5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영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거시경제환

5) Dang Cong san Viet Nam, 1998, tr. 11.

〈표-1〉 금리와 인플레이션 현황

	1986	1987	1988	1989	1990
인플레이션	487	316	410	35	67
명목금리	22	22	37	33	33
실질금리	-465	-294	-373	-2	-34

※ 자료: Vo Dai Luoc(1997), p.94

경 조성을 의미하는 국영기업관리체계의 혁신이다. 국가의 기업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행정주관부처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이 기획, 재정, 시장, 조직기구 등에 자율권을 갖고 시장체제에 따른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

둘째, 신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전시키고 장기간 경영이 부실하고 국가가 직접 소유할 필요가 없는 기업은 합병, 해체, 파산 등을 통해 구조 조정한다.<sup>6)</sup>

셋째, 주요산업분야에서는 대규모의 총 공사를 재편성하여 발전시킨다. 현재 총 공사는 국가의 거시적 경제관리와 조정의 주요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유희자본을 동원하고 생산의 새로운 인텐시브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가 100%지분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기업부터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 1) 국영기업관리체계 혁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영기업은 국가의 배급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구가하였다. 매년 국가는 국영경제부문의 기본건설투자에 수 조 동을 지출하였다. 1990년 1월 1일자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영경제 고정자본의 71.0%를 국가예산이 담당하고 있었다. 자본 회수는 일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납부에 한정되었고 그나마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미비한 것이었다. 은행 대출도 대부분 국영기업에 집중되어, 1990년 말까지, 전 산업의 고정자본대출이 2,530억 동이었으며 이 중 2,150억 동이 국영기업에, 유동자본 4조 2,100억 동 중 3조 7,360억 동이 국영기업에 집중되었다.<sup>7)</sup> 또한 이러한 금융지원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매우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가 훨씬 더 많은 자금을 국

6) 구조조정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구조조정은, 계속해서 국영기업으로 유지할 기업과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할 기업으로 분류하는 국영기업체계의 재편성을 의미하며, 광의의 구조조정은 분류, 재편성 이후 후속조치로서의 총 공사 설립, 주식회사 전환, 양도, 매각, 위탁경영, 리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영기업 개혁 정책을 의미한다.

7) Vo Dai Luoc, 1997, tr. 93.

영기업에 지원한 것이었다.(표-1 참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통화량 증발은 80년대 세자릿 수에 이르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기업 관리체계 개혁의 첫 번째 정책은 국가의 기업에 대한 배급을 중단하는 한편, 국영기업이 스스로 시장체제에 맞는 독립채산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987년 11월 14일, 정부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배제하고 국영기업의 생산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결정 217/HDQT를 발표했다. 결정 217에 의해 도이며이 이전 국영기업에 부과되던 9개 명령은 1-3개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명령 체계의 축소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있어 시장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업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동시에, 그 자율권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베트남의 금융구조는 단일은행체제로서 중앙은행이 국가예산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즉, 중앙은행은 국가수입으로서 국영기업의 이전금을 예치 받고, 지출로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역시 국영기업에 대출하였다. 금융이 재정에 귀속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권이 자금 수급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고 가격도 자원 배분의 신호로서 기능하지 않았다.

1987년 7월 13일, 정부 지시 218/CT는 기존의 단일금융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지시 218에 따라, 금융구조가 이원화되어 중앙은행은 통화량안정 등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예금출납, 대출 등의 상업은행 기능은 분리되었다. 1989년 4월에는 지시 39/HDBT에 따라,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고율의 은행이자 적용되어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9년 말까지 전력, 수도, 교통, 통신, 철강, 시멘트 등 특정 품목 이외에는 모두 가격자유화가 시행되어, 시장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 조성이 일단락 되었다.

이와 더불어, 7차 전국대표자대회는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경영자율권은 법률로 보장되며, 전 인민소유, 집단소유, 개인소유 등의 세 가지 기본 소유 유형으로부터 다양한 경영조직으로 구성되는 경제부문들이 형성된다.”<sup>8)</sup>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생산,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 질서와 법률을 유지하고 개혁정책을

8) Dang Cong san Viet Nam, 1991b, tr. 12.

일관되게 시행한다”<sup>9)</sup>고 명시하였다. 1992년의 신 헌법도 법치에 의한 경제관리를 천명하여, 각 경제부문에 속하는 생산, 경영 조직체가 법 앞에 평등하며 각 기업이 국내외 경제조직이나 개인과 법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1995년 4월 20일, 국영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영기업 개혁에 법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국영기업법과 그 시행세칙은 국가와 기업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영기업 관리체계가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법률에 근거한 거시적 통제로 이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영기업법은 수익 형 기업과 공익기업을 분류하고 기업의 자율권과 국가에 대한 의무, 기업의 권한과 국가관리기관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국영기업법 공포 이후부터, 국영기업 내에 자산관리권이 재정부로 일원화 되었으며, 특정한 정부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대규모의 총 공사 설립<sup>10)</sup> 역시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 주관부처 제도<sup>11)</sup>를 폐지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이었다.

1994년 7월 5일에는, 노동법이 반포되어 노동고용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원 채용 시 종신고용에서 계약제로 이전, 계약 만료나 실직 시에 기업과 노동자의 상호 의무와 권리, 집단노동협약제도, 최소 임금제, 급여제도, 산업재해, 의료보험, 작업장의 안전, 위생 등에 대한 각종 의정서를 공포하였다.

기업에 대한 재정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4월 20일 의정서 27/ 1999/ND-CP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본 지급 형태에서 위탁 형식으로, 각 기업별로 자본금을 정했던 형태에서 자본금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전환이 되었다.

기업은 자본의 유지, 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비국영부문에 대한 투자 권한을 비롯

9) Ibid, p. 25.

10) 자본의 집중도와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 주관부처제도와 중앙, 지방간 기업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경제부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 3월 7일 정부수상은 거대 규모의 기업 집단 시범 설립에 관한 결정 91/TTg를 발표하였다. 정부 수상실 직속의 대규모 총 공사 설립은 국가기관의 중복, 과잉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로, 기존의 주관부처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기업 내에 관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소유주인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관치위원회는 기업의 중장기 계획을 결정하고 사장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며 기업 설립을 결정한 정부부처에 사장 및 임원의 임면, 상벌 등을 제정할 수 있다. 관치위원회는 기존의 주관부처 제도에 비해 소유와 경영을 보다 명확히 분리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한 단계 개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관치위원회 구성원들은, 일반기업의 이사회와는 달리, 기업 지분의 소유주가 아닌, 소유주인 국가에 의해 고용된 피고용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과 권한에 한계가 있다.

11) 국영기업은 그 설립을 결정한 정부 부처에 의해 합병, 해체, 소유구조와 조직의 개편 등이 결정되고, 이 외에 타 정부기관의 중복 규제를 받으면서 기업능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정부는 기업 내 국가 자산을, 노동-보훈부는 노동과 임금, 정부물가위원회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한 자금의 사용권과 자산구조변경 권한, 또한, 기업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채권, 주식 발행과 대출, 대부 등 자금동원권한을 위임 받았다. 또한, 기업은 원활한 자본 동원 등 보다 효과적인 경영을 위하여 기업 내 자산을 저당, 리스,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다른 한편, 오랫동안 보편화됐던 기업의 회계분식을 막기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재무제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였다. 기업재무제표의 공개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게 해주는 필수 요소로서 자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기도 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부실 기업은 국가예산으로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손실을 부담해야 했다. 기업의 소득 분배 역시 국가, 기업, 직원 등 3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기업활동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 2) 국영기업 구조조정

국영기업의 자율권 강화와 시장환경조성 등의 단계적인 개혁을 통해, 국영기업은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영손실로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오랜 전쟁과 중앙집권적 배급제도하에서 급증하는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하여 국영기업을 설립할 것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불과 4년 만에 국영기업 수가 2배로 증가하여 1989년 말 12,084개에 이르렀고 그 중 60%가 지방정부의 관할에 있었다.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은 자본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융자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또한, 기업은 각 부서와 지사에 생산경영과 사업계약체결 등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국가로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관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베트남공산당과 정부는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치 않은 기업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국가는 국영기업의 경영자율권 강화에 머물지 않고 저 효율, 부실 기업, 또는 국가가 계속해서 소유, 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한 국영기업 구조조정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국영기업 관리체계의 개혁은 국영기업 전체의 재편성이라는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결정315/HDQT(1990년 9월 1일)과 의정서 388/HDBT(1991년 11월 20일)을 발표하여, 각 기업이 일정한 조건의 재등록 절차를 거쳐 재설립 되도록 하였고, 이것은 장기 부실기업의 자동 퇴출과 동시에 이전 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했던 국영기업의 양적 감소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환경 적응에 성공한 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그 존재가 합법화 되는 한편, 시장에 의해 사실상 퇴출된, 그러나 명목상으로 존재했던 다수의 기업이 제도적으로 해체되었다.

특히, 의정서 388은 법정자본, 기업활동분야, 최소규모, 시장여건, 상품판매 등 국영기업 설립과 관련된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정부 문건이었다. 의정서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기업들은 자신의 임무와 기능에 따른 각각의 활동 내용을 재검토하였으며, 이것은 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에 있어 자율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효과적인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기업의 재정상태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고정자산, 유동자본, 경영상의 손익, 채고, 채권, 채무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영기업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리체계에 맞는 생산, 경영 방안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국가관리기관 들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기업들의 숫자와 그 생산, 경영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결정 315와 의정서 388을 통해 3,000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 약 2,000개 기업이 해체되어 국영기업 수는 1994년 중반 총 6,264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의정서 388에 따라 각 기업이 재 설립된 이후, 중앙으로부터 지방 성, 시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 부처가 지역별, 분야별로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5년 8월 25일 정부수상은 신속한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지시 500/TTg를 공포하였다. 이 지시는 국영기업이 국영기업법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행정 주관부처제도를 폐지하고 그와 더불어 동일한 분야와 지역에 과다한 국영기업이 또한 다수 주관부처의 중복 관리 하에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97년 공산당 8기 중앙위원회 4차 회의 의결은 “국영기업은 공익기업과 수익형 기업; 100% 국가소유 기업, 지배지분 소유기업, 지분 소유기업... 등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의결에 따라, 1998년 4월 21일 정부수상은 지시 20/1998/CT-TTg를 발표하였다. 지시 20의 핵심은 최근 3년간의 경영상태에 근거하여 기업을 평가

하고 그에 따라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각 기업은 첫째, 국가가 100% 자본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공업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

**시장경쟁을 거치지 않은, 행정 명령으로 결합된 총 공사는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업연합체의 성격을 띠게 되어 부실경영의 온상으로 변질되기에 이르렀으며 도이머이 시대에 들어 이러한 총 공사의 재편과 개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국영기업법에 따라 활동을 유지할 기업, 둘째,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기업으로, 소유구조의 전환을 요하는 기업, 셋째, 장기간의 부실경영으로 국가소유가 부적합하여 주식회사화, 리스, 매각, 위탁경영, 합병, 인수, 파산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정리할 기업 등, 3개 군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군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차 대상이 되었다.

1999년 9월 10일 정부는 소규모 국영기업의 양도, 매각, 위탁경영, 리스 등에 관한 의정서 103/1999/ND-CP를 발표하였다. 의정서는 기업 내의 노동자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기업 내 노동자단체에 기업을 양도하는 방안, 기업 내 노동자개인이나 단체 혹은 (외국투자기업을 제외한) 타 경제부문 기업이나 개인에 매각, 위탁경영, 리스하는 방안 등 소규모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4대 해법을 제시하였다. 2001년 1월 31일 까지, 105개 기업에 양도, 매각, 위탁경영, 리스 조치가 시행되었고, 이중 양도 37%, 매각 45.7%, 위탁경영 15.2%, 리스 2%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구조조정과정을 통해, 국영기업의 숫자는 1990년 12,000여 개에서 2000년 중반 5,280개로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공익기업은 732개, 수익형 기업은 4,548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국영기업은 양적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그 중 48%는 보다 효율적인, 대규모 기업으로 합병되었고 나머지 52% (주로 지방 성, 군 관할 기업들)는 해체되었다.

### 3) 총 공사제도

베트남에서는 1970년 대 초부터, 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 따라, 불필요한 경쟁을 제한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영기업연합 형태의 총 공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쟁을 거치지 않은, 행정상의 명령으로 결합된 총 공사는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업연합체의 성격을 띠게 되어 부실경영의 온상으로 변질되기에 이르렀으며 도이머이 시대에 들어 이러한 총 공사

의 재편과 개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시장경제의 생산, 경영 활동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총 공사와 기업연합을 재편한다”는 7차 전국대표자대회 의결을 구체화하기 위해, 1994년 3월 7일 정부수상은 결정 90/TTg를 공포하여 의정서 388 이후 조정이 되지 않은 국영기업 들을 계속해서 재등록 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기존의 총 공사와 기업연합을 새롭게 재편하였다. 재등록이 어려운 기업들은 합병, 인수 또는 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본의 집중을 도와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 주관부처제도와 중앙, 지방간 기업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경제부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 3월 7일 정부수상은 거대 규모의 기업집단 시범 설립에 관한 결정 91/TTg를 발표하였다.

1995년 국영기업법이 새로운 총 공사 재편을 언급한 이 후, 1995년 6월 27일 총 공사 활동조직 조례에 대한 정부 의정서 39/CP, 1996년 10월 3일 독립채산경영의 재정관리규제에 대한 의정서 59/CP, 1996년 8월 28일 총 공사 재정규제에 대한 재정부의 결정 838/TC/QD/TCND, 1997년 3월 4일 기업 내 관치위원회와 감사반의 활동에 대한 정부수상의 지시 135/TTg 등 다량의 문건이 공포되었다.

2001년 6월말 현재, 핵심산업분야의 616개 기업으로 구성된 17개 총 공사<sup>12)</sup>은 전체국영기업 자본의 63.5%인 80조 동, 노동력의 35% 규모로, 전력량의 94%, 석탄 97%, 철강 64%, 시멘트 59%, 종이 50%를 생산하고 있다.

#### 4) 주식회사전환정책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기업 경영자율권 강화, 조직개편, 구조조정, 총 공사 설립 등과 같은 개혁 조치는 국영기업의 경영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국영기업의 생산, 경영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그 숫자도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주인 없는 기업”의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과거 중앙집권적 배급제도가 남긴 심각한 폐해 중 하나는 “공동의 것”은 곧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라는 의식으로써 심각한 주인의식 결여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결국 무책임과 나태, 낭비로 이어져 국영기업의 경영 효과를 개선하려는 국가와 기업의 노력이 근본적인 장애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환기의 베트남경

12) 결정 90/TTg와 91/TTg에 의해 설립된 총 공사를 각각 총 공사90, 총 공사91이라고 부른다.

제에 있어 가장 절실한 요구중의 하나는 굳건한 국가재정의 확보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대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다변화는 필연적인 요구라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 되었다. 경제개혁의 성과 역시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소유 이외에 개인이나 혼합소유 형태의 다양한 소유구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폭넓게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소유구조의 다변화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생산, 경영능력의 개선, 경영자와 노동자의 창조력과 책임의식 강화 등 시장규율이 보다 충실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통해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조치가 점차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0년 5월 10일 정부 결정 143/HDBT는 일부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정책은 공산당 7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sup>13)</sup> 1992년 6월 8일 정부수상이 일부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시범 실시에 관한 지시 202/CT를 공포하였다. 7기 중앙위원회 임기 중 개최된 전국대표자대회는 “기업내의 근로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일정비율의 주식을 판매한다.”<sup>14)</sup> “시범적으로 기업외부의 단체나 개인에게 일부 국영기업의 주식을 판매한다.”<sup>15)</sup>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후 정부는, 1996년 5월 7일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에 대한 의정서 28/CP, 1998년 6월 29일 의정서 44/1998/ND-CP를 발표하여, 기존의 의정서들이 지녔던 한계점을 극복하여 주식화 기업과 그 노동자에 대한 우대사항 확대, 주식화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주식회사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유연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1년 5월 현재, 총 국영기업 수의 11%인 631개 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 4. 결 론

베트남공산당이 의도한 국영기업 개혁의 주된 해법은 민영화라기 보다는 경쟁적

13) 7차 전국대표자대회 문건은 “국영기업은 100% 국가소유의 형태 또는 국가가 지배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국영부문에서 주식회사 형태를 점차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14) Dang Cong san Viet Nam, 1994, tr. 37.

15) Ibid, p. 38.

시장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단행해 그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

**국영기업의 경제적 효율의 한계 속에서, 국영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 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사부문을 활성화하여 과거 국가부문이 단독으로 부담하던 역할을 조화롭게 공유하려 한다.**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산당은 사부문이 보다 효율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활동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하였으나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국영기업이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모두 사부문에 의해 대체되어야만 한다는 급진적인 입장을 갖지는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먼저 국영기업의 경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기업이 생산, 구매 그리고 판매 등에 있어 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하였고 이윤의 많은 부분을 사내 유보하여 근로자의 복지, 보너스 그리고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정, 금융, 노동부문의 개혁을 단행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체계가 작동하는 거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활동을 보다 친 시장적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국영기업의 분류, 재배치를 통해 불필요한 기업을 정리하는 한편, 총 공사를 새롭게 재편하여 거대 규모의 국영기업들이 주요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그 주변부로서 사부문이 활동하는, 국가부문과 사부문이 상호 경쟁적이거나 대체적이 아닌 보완적인 관계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다 부문 시장경제하에서 국영기업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sup>16)</sup> 또한 도이머이가 경제분야에서 사회 전 영역으로 파급되면서 베트남이 여전히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개념 역시 과거 이념을 중시하던 데에서 이제는 문명화되고 평등한 사회, 부유한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현실적인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문을 보면, 국가부문(국가기관과 국영기업)에 속하는 노동인력은 전 노동력의 7.46% (1995년) 와 8.8% (1997년)에 불과한데 사회복지정책은 사 부문에서 보다 국가부문에서 더 잘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부문의 노동인력도 국영부문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하에서 국

16) Tong cuc thong ke, 2003, 2003년 초 5개월간 공업생산량은 작년 대비 국영기업이 11.9%, 비 국영기업 18.6%, 외국투자기업이 17.4% 증가하였다.

영부문이 사부문보다 경제적 효율이 높은 예가 없다. 때문에 국영기업 자체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국가는 국영기업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체 사회, 전체 경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산당은 국영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주요 산업분야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 두지 않고,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기업의 경제적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체 경제, 사회가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타 부문 역시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2000년 12월 말 현재, 베트남에는 43조 동의 자본규모로 6만 여 개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개인회사가 등록되어 약 백 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백만 호에 이르는 소규모 개별경제 역시 6백 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도 등록자본 386억USD규모로 3,265개 사업에 투자하여 비 국영부문과 더불어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하고 풍부한 베트남 경제력을 감안할 때, 국영부문의 당면한 역할은 전체 사회,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속에서 타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국영부문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기업의 평균자본금이 1994년 33억 동에서 2000년 210억 동으로 7배 증가하였으며, GDP 비중 역시 36.5% (1991년)에서 42% (2000년)으로 증가했다. 또한 수출의 50%, 국가예산 수입의 40%, 외국인직접투자사업의 98%를 차지하면서 고용창출과 노동자의 소득문제 해결, 소외 계층과 지역 지원 등의 사회정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산당 9차 전국대표자대회는 “다 부문경제개발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다... 그 중, 국영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가부문과 집체 부문이 국민경제의 굳건한 기반을 이룬다.”<sup>17)</sup>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볼 때, 베트남경제개혁과정은 다 부문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영기업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베트남공산당의 개혁노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멀지 않은 장래에 국영기업의 주변부를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의 주체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영기업의 축소, 폐기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은 “국영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은 비객관적인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국영기업의 역할을 폄하하고, 효율을 제고하려는 개혁과업을 방해할 뿐이다”<sup>18)</sup>

17) Dang Cong san Viet Nam, 2001, tr. 95.

라고 선언하여 국영기업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과거 배급경제하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이 노동자의 급여 외에, 의료, 주택, 자녀교육, 노후생활, 장례식까지 모두 담당하였다. 그러나 도이머이 시대에는 국영기업이 경영자율권을 가지고 노동자의 복지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국가의 지원은 중단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마저 노동자의 복지를 외면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실수요에 근거한 노동인력의 선발과 해고 권한을 부여 받은 국영기업이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베트남 국영기업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sup>19)</sup>

그리하여, 국영기업개혁과정은 경제적인 효율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초기 개혁의 내용(관리체계 혁신, 구조조정, 총 공사 설립...)과 후기(주식회사 전환, 양도, 매각...)를 비교해 보면 베트남공산당과 정부가 국영기업의 소유구조 전환 정책이 베트남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소유구조를 전환한 기업과 그 주식을 구매한 노동자에게 세제와 금융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개혁을 신속히 추진함<sup>20)</sup>과 동시에 변화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공산당의 의도로 볼 수 있다.

국영기업개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베트남의 경제개혁 목표는, 경제 자체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그를 통한 사회안정에 있고, 실제로 국영기업의 경제적 효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국영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 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사 부문을 활성화하여 과거 국가부문이 단독으로 부담하던 역할을 조화롭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베트남경제개혁과정은 국가부문의 유지와 사부문의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18) Nong Duc Manh 2001, tr. 7.

19) 실제로, 80년 대 9%에 이르던 국영기업의 고용비중이 90년 대에 5%대로 낮아졌다가 근래에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 개혁의 속도는, 특히 소유구조 전환에서 매우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지시 20은 1998년 말까지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별로 소속 국영기업을 3개 군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1999년 말까지 12개 부처와 37개 지방만이 수상실의 비준을 받았으며 2001년 초 현재 국영기업을 보유한 31개 부처 중 주식회사 전환을 시행한 부처는 7개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1998년 주식회사 전환 계획의 40%, 1999년 62.5%, 2000년 41.5%를 달성했다. 과거 배급경제하에서 국영부문은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소유구조전환 정책에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권 울, 2000, 베트남 국영기업의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 1권.
- 박형중, 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해남.
- 이근, 한동훈, 2002, 중국의 기업과 경제, 박영사.
- Dang Cong san Viet Nam, 1987a,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VI<공산당 6차 전국대표자대회 문건>. Ha Noi, Nxb Su that.
- Dang Cong san Viet Nam, 1987b, Van kien Hoi nghi lan thu ba Ban Chap hanh Trung uong Dang (khoa VI)<6기 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 문건>. Ha Noi, Nxb Su that.
- Dang Cong san Viet Nam, 1991a,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VII<7차 전국대표자대회 문건>. Ha Noi, Nxb Su that.
- Dang Cong san Viet Nam, 1991b,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VII: Chien luoc on dinh va phat trien kinh te-xa hoi den nam 2000<7차 전국대표자대회 문건: 2000년까지 사회-경제 안정, 개발 전략>. Ha Noi, Nxb Su that.
- Dang Cong san Viet Nam, 1994, Van kien Hoi nghi Dai bieu toan quoc giua nhiem ky khoa VII<7기 임기 중 전국대표자회의 문건>. Ha Noi.
- Dang Cong san Viet Nam, 1996,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VIII<8차 전국대표자대회 문건>. Ha Noi, Nxb Su that.
- Dang Cong san Viet Nam, 1998, Van kien Hoi nghi lan thu tu Ban Chap hanh Trung uong (khoa VIII)<8기 당중앙위원회 4차 회의 문건>.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Dang Cong san Viet Nam, 2001,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IX<9차 전국대표자대회 문건>.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Lee Kang Woo, 2003, Qua trinh doi moi doanh nghiep nha nuoc Viet Nam <베트남국영기업개혁과정>. Ha Noi, Nxb Dai hoc Quoc gia Ha Noi.
- Nguyen Thi Nhu Ha, 2001, Nang cao hieu qua cai cach doanh nghiep nha nuoc<국영기업개혁의 효율 제고>. Tap chi Ly luan Chinh tri so 12.
- Nguyen Thi Thanh Ha, 1997, Vai tro cua khu vuc doanh nghiep nha nuoc trong nen kinh te nhieu thanh phan<다부문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역할>. Ha Noi, Nxb Khoa hoc Xa hoi.
- Nong Duc Manh, 2001, Viec sap xep doi moi cac DNNN phai huong toi hieu qua cao de kinh te nha nuoc giu vung vai tro chu dao trong

nen kinh te nhieu thanh phan<효과적인 국영기업개혁을 통해, 다부문경제에서 국가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Bao Nhan dan 23-8

Pham Thi Nga, 1997. Vai tro quan ly kinh te cua Nha nuoc doi voi khu vuc doanh nghiep nha nuoc trong nen kinh te thi truong<시장경제하의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 Ha Noi, Nxb Khoa hoc Xa hoi.

Tong cuc thong ke. 2003. <http://www.smenet.com.vn/><인터넷 베트남 중소기업정보>.

Vo Dai Luoc, 1997. Doi moi doanh nghiep nha nuoc o Viet Nam<베트남국영기업개혁>. Ha Noi, Nxb Khoa hoc Xa hoi.

Vu Dinh Bach, 2001. Doi moi tang cuong thanh phan kinh te nha nuoc<국영부문의 개혁>.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도서안내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제를 통해 규명한 현대의 정치현상

## 현대정치의 이념구조

■ 주요목차

- 현대의 정치이념
- 소련의 정치이념
- 중국의 정치이념
- 개도국의 정치이념

조정남 저 / 값 15,000원

 교양사회



## 노조운동 재편에 따른 동반침체

권 순 미 (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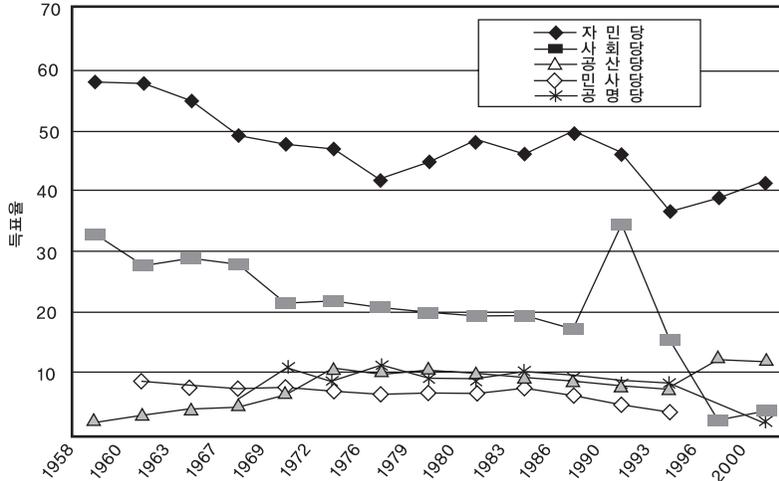


### 머리말

사회주의가 일본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용되고 변화해 왔는지는 일본 사회당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서구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를 모토로 하는 시민혁명의 역사와 토양 위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되었지만, 이러한 시민혁명의 전통이 부재했던 일본에서는 다이쇼(大正)민주주의 시기에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수입되었다. 그러나 전전(戰前)의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대중운동 속에서 충분히 그 이론을 검증 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념과 정치운동으로서 사회주의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은 2차대전 종결 후 미군정의 탈 군국주의화와 민주화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이 때부터 선거영역과 대중투쟁 영역에서 일본사회를 사회주의체제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사회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그러므로 전후 일본사회당의 흥망성쇠야말로 일본 사회주의의 흐름과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1960년대 초반 하더라도 자민당의 안정적인 집권을 위협하며 단독집권 가능성

〈그림-1〉 정당별 중의원선거 득표율(1958~2000)



※ 주: 1996년 1월19일부터 사회당의 당명은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으로 개칭되었으나 여기서는 사회당으로 명기함. 1996년부터의 정당별 득표율은 소선거구에서의 득표 결과임.

까지 점쳐졌던 사회당은,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96년 중의원선거를 기점으로 현실정치에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 중의원선거를 제외하면<sup>1)</sup> 사회당의 장기침체는 196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왔다. 1993년 선거에서는 ‘55년 체제’ 성립 이래 가장 낮은 15.4%의 득표율(의석 율 13.7%)을 기록하더니, 급기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하에서 실시된 1996, 2000년 중의원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역사적인 대참패를 경험한다. 일본의 총보수화, 군국화, 신자유주의 개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혁(保革)대결정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55년 체제의 붕괴’는 보수 자민당의 실패가 아니라 혁신진영을 대표해 왔던 사회당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권순미 2002; 최장집 2003).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사회당의 강령 변화를 중심으로 전후 일본 사회주의의 이념적 특징을 살펴본다. 일본의 주류 좌파진영은 어떠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했으며, 시기별로 그것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서구의 좌파세력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이 표방한 사회주의의 이념과 정책은 과연 어떤

1) 사회당이 이 선거에서 34.4%의 득표율(의석률은 26.6%)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세 신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 농업보조금 삭감 및 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로 농민들이 대거 자민당을 이탈한 결과이다.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일본 사회당의 지지기반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사회당이 제 1야당으로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 특히 일본노동조합총평의 회(총평)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서이다. 총평은 사회당 당원, 의원후보, 재정 면에서 최대의 충원지였으며, 사회당의 모든 선거활동과 일상활동도 총평의 조직력에 크게 의존했다. 그런 만큼 노조운동 내에서 차지하는 총평의 위상은 사회당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먼저 사회당-총평의 조직적 연계가 갖는 특징을 분석한 다음, 1960년대부터 진행된 노조운동의 재편과정이 총평, 나아가 사회당의 쇠퇴와 몰락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일본 사회당의 이념 및 그 특징

사회당은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사회주의, 그리고 국제적 평화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1945년 11월 2일 창당되었다. 사회당의 중심인물들은 전전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사회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공산당을 제외한 전전의 여러 무산정당들을 통합하고자 했고, 천황제의 존속을 인정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 창당 때부터 좌파와 우파 사이의 이념적 대립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사회당은 분열의 씨앗을 늘 안고 있는 불안한 좌우파 동거정당에 다름 아니었다.

사회당 우파가 서구형 사민주의 노선을 따르는 국민정당으로 당의 성격을 규정한 데 비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전전의 노농파(勞農派)계의 좌파는 일본을 미국의 독점자본주의에 예속된 종속 자본주의로 이해하고 사회주의 계급정당 노선을 추구하였다. 당강령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이 처음으로 본격화된 1949년 제4차 당대회에서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부분적으로 절충되어 ‘계급적 대중정당’이라는 용어로 마무리된다(曾我祐次 1989). 이는 1955년 통일강령<sup>2)</sup>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지만 계급성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정당적 성격을 중시할 것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당내 격돌은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표-1〉에서 보는 사회당의 강령 변화 과정은 당내 파벌간 역학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과의 관계의 산물이자 또한 과거 투쟁의 성공과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 1964년의 강령적 문서 ‘일본에 있어서 사회주의로 나아갈 길’(日本における社會主

2)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에 대한 대응 차이로 각각 좌파사회당과 우파사회당으로 분열한 후 1955년에 사회당으로 재통합할 때 채택된 강령을 말한다. 대체로 통일강령은 사민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표-1〉 일본사회당의 강령 변화

구분	길(1964.12)	신선언(1986.1)
사회주의상 (像)	·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근절. ·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 중공업 공영(公營), 농업, 중소 영세상공업의 협동조합 경영, 기타 자본주의적 경영의 이용. · 프롤레타리아 독재 거부.	· 인간해방을 위한 점진적 과정. · 현실에서 출발하는 개혁의 과정.
일본사회에 대한 인식	· 고도로 발전한 독점금융자본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 · 사회주의 혁명은 필연적.
당의 성격	· 계급적 대중정당. ·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한 근로계급 · 계층의 결합체.	·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한 근로계층의 이익대표. ·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으로 평화혁명 지도.
혁명론 · 정권구상	·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형성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실현. · 사회주의혁명과 민족독립의 결합. · 폭력혁명을 기도하는 일본공산당의 전략과는 이질적.	· 의회 내 · 외부에서 민주적 다수파 획득. · 의회주의와 대중투쟁의 결합으로 평화혁명. · 과도적 정권으로 사회당 단독정권이 목표이나 다른 혁신세력과 연합 가능.
현존 사회주의 평가	(구체적 언급 없음.)	· 의회 내 · 외부에서 민주적 다수파 획득. · 의회주의와 대중투쟁의 결합
		· 사회당이 바라는 사회주의와는 이질적. · 중앙집권계획경제, 국가와 당의 일체화로 경제둔화,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

※ 출처: 日本社會黨中央本部機關紙局(1978); 日本社會黨四十周年記念出版刊行委員會編(1985); 日本社會黨50年史編輯委員會編(1996)에서 재구성.

義への道, 이하 '길')은 당내 헤게모니를 좌파세력이 장악<sup>3)</sup>한 가운데 1960년대 초에 대두된 '구조개혁론'<sup>4)</sup>에 대한 투쟁을 계기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사회당 지도부는 현실주의 노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당내 균열이 더욱 깊어져 당이 분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지도부는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되도록 피하고자 했고, 가능한 높은 원칙과 이상을 내걸어서 당내 단결을 유지하려고 했다.<sup>5)</sup> 특히 안보투쟁 이후

3) 가타야마 내각 붕괴 이후 진행되기 시작한 좌파우위는 우파의 민사당 결성(1960년1월24일) 직전인 1955~60년에 중의원과 참의원, 당 중앙본부 차원에서 모두 확립되어 있었다(的場敏博 1991).

4) 에다 사부로(江田三朗)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론자들은 전통적인 맑스주의 혁명론에 반기를 들고 지금까지의 사회주의론은 공황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대기론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배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개량투쟁을 축적시켜 사회주의를 향한 진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좌파로부터는 '개량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회당 우파세력이 서구 사민주의를 내걸고 민사당으로 분열된 것은 사회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민사당은 결성과 더불어 첫 선거에서 8.8%의 득표력을 과시했다. 거대 집권정당인 자민당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상의 오른편에 위치해 있던 민사당과도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회당 지도부는 원칙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당내 단결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득표력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당은 선거경쟁에 나서기 이전에 먼저 당내 단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길’은 사민주의적 통일강령과는 달리 계급주의적 색채를 훨씬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의 소득배가정책에 따라 고도 성장기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막 발돋움하기 직전이었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 비율에서도 1,2차 산업에 비해 3차 산업 노동자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가장 다수를 차지할 때였다.<sup>6)</sup> 그러나 사회당에게 있어 이케다 수상은 소득배가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끌려는 전술인 동시에 안보투쟁에서 보여준 국민의 힘에 대한 양보”(日本社會黨政策審議會編 1990, 187)로 비추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길’은 일본 자본주의의 변형보다는 공핍, 소득 격차, 사회적·경제적 이중구조를 강조하며, ‘복지국가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안보투쟁이 그토록 강한 대중적 호응을 받지 못했더라면, 사회당은 좀 더 현실주의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 무게를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60년 안보투쟁이 사회당 지도부조차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양된 가운데 기시(岸信介) 내각이 사임하게 되자 사회당은 이에 고무되었다. 1960년대 내내 사회당의 활동목표는 1970년에 예정된 안보조약 재개정을 저지하는 것에 집중되었고, 일반국민의 사회경제적 제 권리를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의회다수파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자연히 소홀해졌다.<sup>7)</sup>

그렇다면, 1986년 ‘신 선언’을 채택하기 이전까지 일본사회당의 이념과 정책은 서구 주요 좌파정당에 비해 어떤 특징적 차이를 보이는가? 첫째, 무정부주의자나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녹색당의 경우를 제외한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은 공히 경제

5) 2002년 4월 17일, 이토 리쿠(伊藤陸雄)씨와의 인터뷰에 따른 것임. 이토 리쿠는 1935년생으로 29년간 사회당 서기국에 근무하면서 정책심의회, 기관지국, 노동국, 교육선전국, 총무국,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6) 1965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1차산업 취업자가 23.5%(1,113만), 2차산업 취업자가 31.9%(1,507만), 3차산업 취업자 비율은 44.6%(2,109만)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자료는 總務廳統計局(1966), 『勞動力調査年報』에 근거.

7) 2002년 4월 17일, 이토 리쿠(伊藤陸雄)씨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성장을 정치적·사회적 진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았다. 강령에서 주요 산업의 국유화 조항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영국 노동당조차 당이 발간한 모든 정책문건에서 사적 시장경제의 우위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했으며, 당 지도부 대부분은 자신들을 수정주의자로 간주했다(고세훈, 1999, 271-2). 그러나 일본사회당은 경제정책에서 성장에 대한 관점을 결여하고 있었다. 경제성장을 미국에 종속된 독점자본주의의 강화로 이해하였으며, 反독점투쟁, 反합리화투쟁, 反생산성향상투쟁 등 대안 없는 반대와 투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둘째, 일본사회당은 경제성장은 물론 자본주의체제 하의 복지국가론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길'은 서구의 복지체제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가로막고 현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근로자계층의 혁명적 에너지를 후퇴시키는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논의되는 '복지국가론'에 대해서도 이것이 독점세력의 개헌전략의 일익을 담당하며 공정복지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반동적 내셔널리즘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혁명을 통해 복지국가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日本社會黨中央本部機關紙局 1981).

셋째,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은 강한 친서방 경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NATO 가입에 대해 찬성을 보냈다. 그러나 사회당은 중국이나 소련 형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정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련, 북한을 비롯한 공산진영의 제 정당과의 연대와 교류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일본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안보조약 체결 당사국으로서의 미국은 사회당의 호헌·평화주의를 위협하는 주범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심지어 1966~78년의 당내 개혁운동 즉, 反사회주의협회·反蘇투쟁이 있기까지 10여 년 간 사회당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도 사실상 단교상태였다. 대신 중국·소련·북한·베트남·동구 공산당과의 '우당(友黨)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그 이유는 '프랑크푸르트선언'<sup>8)</sup>에 이어 '오슬로선언'<sup>9)</sup>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하고, 전체주의적 지배 방식을 강도 높게 비

8) 프랑크푸르트 선언(Frankfurt Declaration)은 1951년 7월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강령이다.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라는 제목으로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 독재라는 역사적 체험에 기초하여 민주적 사회주의의 진로를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장·완전고용·생활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계획화를 진척시켜야 한다는 것과 좌우의 모든 형태의 독재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가 불가결하다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9) 1962년 6월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제2선언으로 불리며, 이 선언의 전문(前文)은 ① 정치적 민주주의, ② 경제적 민주주의, ③ 사회적 민주주의, ④ 국제적 민주주의의 4장으로 되어 있다.

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上住充弘 1992).

사회당은 1986년에 가서야 '신 선언'을 통해 '국민의 당'임을 선포하고 서구

**사회주의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은 2차대전 종결 후 미군정의 탈 군국주의화와 민주화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이 때부터 선거영역과 대중투쟁 영역에서 일본사회를 사회주의체제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사회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형 사민주의 정당으로 노선을 전환한다. 이는 두 가지 계기에 의해서이다. 하나는 구조 개혁론의 주창자이자 당 서기장을 역임(60.3~62.1)하기도 했던 에다 사부로 의 탈당(1977)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당시 좌파의 싱크탱크이자 유력 파벌로 부상한 '사회주의 협회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비등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1975년에 공공부문 노조가 사활을 걸고 전개한 8일간의 총파업투쟁이 패배<sup>10)</sup>하게 되자 총평 내 계급주의 노선이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선 전환을 모색하는 동안 사회당은 공명당과 민사당에 접근하여 연립정부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했지만,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이견 및 공산당을 연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발생한 이견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만다.

## 사회당-총평의 관계: 총평에 종속된 사회당

노동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이래 유럽 국가에서 좌파정당은 정치투쟁을, 노조는 경제투쟁을 수행하는 형태로 기능적 노동 분업이 이루어져 왔다. 좌파정당과 노동조합과의 결속 유형은 각 국의 고유한 역사와 정치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좌파정당이 여러 이익집단 가운데 특별히 노조와 더욱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회의(이하, TUC)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인적·재정적·조직적으로 다른 어느 정당보다 노조와 강한 결속관계를 유지해 왔다. 조합 후원 의원(union sponsored MPs)은 통상 노동당 의원의 약 50%를 차지하며, 노조는 1995년 현재 당원의 95% 이상, 당 재정의 5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사민당도 오랫동안 노조와 집합적 멤버

10) 파업권 쟁취를 목표로 한 이 공동투쟁은 당시 오일쇼크로 인해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던 다수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당했을 뿐 아니라 마스크로부터도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십 관계를 형성해 왔다.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복지정책은 대부분 노동조합연맹(이하, LO)의 정책팀에서 발의되어, 사민당 정부에 의해 입안되었다. LO를 중심으로 한 고도로 일관된 이념과 정책집단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존재, 그리고 LO와 사민당과의 조직적·기능적 연계가 스웨덴 복지체제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세훈 1997).

영국 노동당과 스웨덴 사민당이 노조와 강한 구조적 결속관계를 맺어왔다 하더라도, 이들은 특정 노조의 특수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일반 국민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결코 둔감하지는 않았다. LO는 영국의 TUC와는 달리, 의원후보 및 당 재정뿐만 아니라 사민당 정부의 정책조차도 정당 리더의 배타적 영역으로 남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렌-마이드너(Rehn-Meidner) 모델로 대표되는 LO의 정책적 주도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민당이 LO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LO가 발안한 사민당의 정책들이 특정 산업, 특정 노동자계급의 이해만을 협소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민당의 정책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종속시켜 이 양자 사이의 대립을 회피할 수 있었던 사민당의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Pontusson 1990).

노조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 일본사회당-총평의 관계는 스웨덴 사민당-LO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다. 스웨덴 사민당과 달리, 일본사회당은 사회경제적 이슈를 정치활동의 중심에 놓지 않았으며, 조직노동 일반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노조관계에서 사회당은 공공부문 중심의 급진적인 총평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당은 의원후보, 당 재정, 선거활동과 일상 활동을 배타적으로 총평에 의존했다. 총평의 핵심이 관공노(官公勞)였기 때문에 사회당 당원 구성 역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공노가 민간부문 노조들의 약 3배에 달했다. 따라서 당내 정치에서 정책방향과 인사문제를 둘러싼 이들의 영향력은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일본의 노조운동은 이념적 통일성이 매우 약했다. 특이한 것은 이념적 균열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로질러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조운동 내 균열의 기원은 미군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정기 노동정책은 조직노동의 서로 상이한 정치적 선호 형성에 자극제가 되었다. 민간부문 노동자의 급진화는 기업 내에서 자본가들의 손에 우선적으로 맡겨졌던 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는 미군정과 국가에 의해 직접 통제되었다. 공공부문에 대한 위로부터의 강압적 태도는

〈표-2〉 직업별 사회당 당원수(1981년 6월 현재)

출신조직		당원수	
노동조합	관공노	全農林	1,285
		全林野	1,225
		全專賣	525
		國勞	5,516
		動勞	1,223
		都市交	3,365
		電通	5,161
		全遞	6,735
		國公	131
		全駐勞	93
		政勞協	122
		自治勞	7,602
		全水道	616
		日教組	2,645
	계	36,244(62.0%)	
민간노	계	12,767(21.8%)	
총 당원수		58,455	

※ 출처: 大原社會問題研究所 編(1983), p. 424에서 재인용

1948년 맥아더 서한에 기초한 정령(政令) 201호에 의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함으로써 극에 달하게 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조차 정부의 인사위원회나 지방정부가 장악하게 되자, 총평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던 관공노의 정치적 정향은 집권정당에 대한 비우호적·대결적 태도로 굳어졌다(樋渡展洋 1991; 新川敏光 1999). 그 대신 이들은 사회당과 공동운명체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다.

사회당의 근시안적 선거 전략은 총평에 대한 배타적 종속성을 더욱 강화했다. 대안정당이 되기 위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장의 선거경쟁에서 개헌 저지선인 1/3석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당의 근시안적 태도와 조급함은 총평에 끌려 다니는 사회당의 모습을 체질화시켰다. 총평에 대한 조직적 종속관계는 사회당의 유연한 리더십 형성을 방해했다. 사회당 좌파와 연계되어 있던 총평은 사민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당내 구조개혁파를 개량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등 당의 이념적 협소성을 부추겼다.

사회당의 이념적·조직적 배타성은 두 가지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당내 온건파와 민간부문 노조들이 제기한 복지정책 등 정책·제도개선투쟁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 영역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자민당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당-총평블록의 급진노선에 반발하는 당내 우파의 탈당과 민사당의 결성(1960년), 그리고 민간노조들을 중심으로 한 동맹(全日本會黨組合總同盟, 1964년 결성)과 IMF-JC(全日本金屬産業労働組合協會, 1964년 결성)의 독자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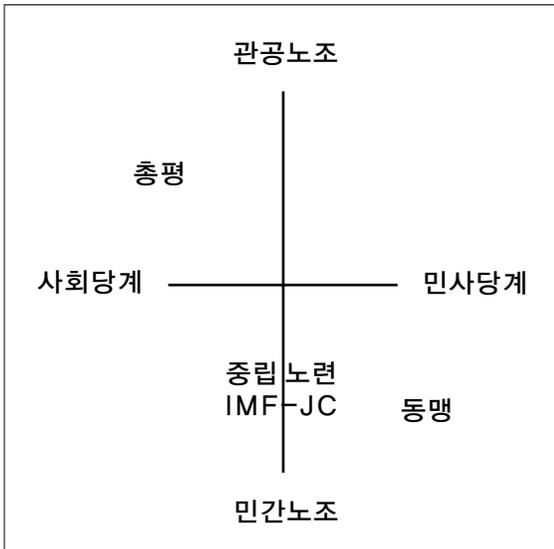
전국 조직화를 들 수 있다. 정당체제의 다당화와 더불어 노조운동의 다원화가 동시에 출현함으로써 사회당-총평블록의 지지시장은 사민주의 세력들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따라 총평 조합원들의 정당 지지도가 차이를 보이며 민간노조 조합원들의 사회당 지지율은 관공노조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사회당은 총평의 조직력·이념적 응집력 약화에 동반침체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노조운동의 재편과 일본사회당의 몰락

민간노조들은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데올로기 정치’(ideological politics)가 아닌 ‘이익정치’(interest politics)를 강조하였으며, 보다 현실적인 야당의 발전 및 이러한 관점에 선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Shinoda 1997, 195). 이들에 의해 주도된 노동전선통일운동은 그 성과로써 1989년에 약 800만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국적 노조조직 ‘연합’(日本労働組合總連合會)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그림-2〉 일본 전국노조센터의 편성 구조



〈그림-2〉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9년 연합으로 총평이 흡수되기까지 전국 노조운동의 편성 구조를 보여준다. 노조운동은 정치적 정향을 기준으로 사회당계와 민사당계 노조로 분열되어 있었고, 산업부문을 또 다른 축으로 하여 관공노조와 민간노조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IMF-JC는 새로운 전국적 노조조직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IMF-JC 소속 각 노조들은 총평, 동맹, 중립 노련(中립労働組合連絡會議)에도 중복 가

〈표-3〉 노조 조직별 조합원 가입 비율(단위:%)

	전체조합원수	총평	동맹	중립노련	IMF-JC
1955	6285878	49.2	9.9*	-	-
1965	10146872	41.9	16.4	9.7	8.6
1975	12590400	36.3	18	10.9	15.4
1985	12417527	35.2	17.4	12.5	16.5

※ 주: \*은 동맹의 전신인 전노회의(全日本労働組合會議)의 조합원 가입 비율임.  
출처: 労働省 編 각년.

〈표-4〉 총평 조합원의 정당지지 태도: 1976년(단위:%)

	자민당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공산당	지지정당 없음
총평 전체	6.2	42.0	1.4	3.5	1.3	45.6
관공노조	2.0	53.2	0.8	3.6	0.5	39.9
민간노조	11.0	29.2	2.1	3.4	2.2	52.0

※ 출처: 升味準之輔 1985, p. 616.

입해 있었지만 일본의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금속산업 민간대기업 노조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전략적 위치에 더하여 공공부문이 누릴 수 없었던 파업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IMF-JC는 1960년대부터 해마다 일본의 춘투를 주도한다.

정치적 계급주의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기반해 있던 총평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급격히 흔들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70년대 1차 오일쇼크 상황에서 노조운동 내 산업부문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충돌하면서 빚어졌다. 무엇보다 실업을 두려워했던 민간부문 노조들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민당 정부와의 협조행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위기감을 배경으로 자민당-재계-민간노조들 사이에는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이 이루어졌다. 197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무려 24.5%로 폭등한 가운데, 공기업이 29.2%, 민간대기업들이 32.9%의 임금인상을 실시하자, 물가안정과 임금인상 억제를 최대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었던 자민당 정부는 ‘대화와 타협정치’를 내걸고,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 자신은 물론, 부총리, 노동대신 등을 앞세워 1975년 춘투에 앞서 전국 민간대기업 노조 대표단들과 수 차례의 회담을 갖는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75년 3월까지 15% 이내로, 75년 말까지는 한자리수로 끌어내리고, 기업은 고용안정에 노력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기업 노조들로부터 임금인상 및 파업 자제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勞働省 1975, 92-95). 민간기업 노조들의 이러한 협조행동과는 달리, 실업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공공부문 노조들은 임금극대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경제위기감이 고조되던 시점에 파업권 쟁취를 위한 8일간의 공동파업에 돌입함으로써 다른 노조나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1976년 이래 일본에서 파업 없는 춘투가 대세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공공부문의 급진주의로부터 민간부문의 온건한 실리주의 노선으로 노동운동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총평의 조직력은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체 조합원을 100으로 놓았을 때, 1955~65년 사이, 총평에 가입한 조합원 비율은 49.2%에서 41.9%로 떨어지며, 이 수치는 다시 75년에 36.3%로 하락한다. 반면 1965~75년 동안 동맹, 중립노련, IMF-JC소속 조합원 수는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IMF-JC로 결집된 민간 대기업 노조들의 조직율은 8.6%에서 15.4%로 늘어나 10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직력 약화보다 총평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든 것은 조합원들의 이념적 통일성 약화였다. 총평은 창립 이래 매 선거시기마다 공식적으로 사회당 지지를 표명해 왔지만, 이러한 대외적인 수사와는 달리 1976년에 실시된 <표-4>의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 총평 소속 조합원들의 다수는 무당파적 성향을 보였다. <표-4>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공공부문 소속과 민간부문 소속에 따라 총평 조합원들의 정당지지 태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민간노조 조합원들의 사회당 지지율은 29.2%로, 그것은 관공노조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사회당은 총평의 조직력·이념적 응집력 약화에 따라 동반침체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95년 참의원선거에 이어 1996년 중의원선거에서 사회당(사민당)의 역사적 참패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 직면하여 55년 체제 하에서 사회당을 떠받쳐 왔던 두 개의 중심축이 와해된 결과이다. 그 하나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사회당 위원장이 수상에 취임한 후 호헌평화주의 정책 축을 포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합에 흡수된 구 총평계 노조들마저 실리주의 노선을 추구하며 기존 정당에 대한 관계를 재설정할 것을 말한다.

자민-사회-사키가케 연립정권에 참여한 사회당은 그 동안 자민당과 가장 큰 정

책적·이념적 대립쟁점이었던 미일안보체제의 수용, 자위대의 합헌성 인정, 일본국가(君が代)와 국기(日の丸)의 용인 등 기존 정책노선을 크게 수정

**일본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 사망선고는 역설적으로 노조의 종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시점에서 찾아온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당이 너무나 오랫동안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둔감했던 과거활동의 전략적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였다. 이는 55년 체제 하에서 형성된 보수와 혁신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축이 소멸하였음을 의미한다(이갑윤, 1996, 112). 자민당이나 다른 야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정책영역을 개발하지 못한 채 호헌평화주의 정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한 결과, 사회당은 자신의 최대 경쟁 상대였던 자민당과 연합하여 약 1년6개월간 권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자민당에 대한 견제정당으로서 사회당의 존립가치마저 상실케 만들었다. 사회당(사민당)의 급작스런 몰락은 1996년 중의원선거에서 가장 극적인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이 선거에서 사민당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선거구를 합쳐 총 15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1996년 선거를 앞두고 기존에 사회당을 지지해 왔던 구 총평 계 노조들의 대대적인 사민당 이탈은 사회당의 결정적 패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연합 내 주요 산별노조들의 정당 지지 태도는 1990년대 정계개편과 맞물려 유동적으로 변화한다.<sup>11)</sup> 연합 내에서 구 동맹계가 '우애회의'(友愛會議)를 조직하여 민사당의 정치활동을 지원하였다면, 구 총평 계는 '총평센터'(總評センター)를 통해 사회당을 지지하였다.<sup>12)</sup> 그러나 이 시기 총평 계 노조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따라 사회당과 일체감을 갖는 존재가 아니었을 뿐더러, 각 단위노조들의 정당지지 태도를 통제할만한 권위를 상실한 상태였다. 이들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연립정권에 대한 태도 및 향후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분열해 있었다. 구 총평계 내에서도 전(全)일본자치단체노조와 일본교직원조합은 사민·자유주의 세력 결집에 의한 '제3세력'(第三極) 형성을 지지한 반면, 전국체신노조와 전국전기통신노조는 호소카와 연립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11) 1990년대 정계개편 과정에서 연합내 단위노조들의 정당지지 태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五十嵐仁(1998)과 이기완(2001)을 참고할 것.

12) 1994년, 민사당이 신진당으로 합류함에 따라, '우애회의'는 신진당 지지를 표명하며, 그 명칭을 '우애회'로 변경하였다. 한편, 한시적 기구로 설치되었던 '총평센터'가 1993년 3월에 해산하자, '사회당(이후 사민당)과 연대하는 노조회의'가 그 기능을 이어갔으며, 1996년 중의원 선거참패 이후 '사민당과 연대하는 노조회의'는 96년 12월에 해산하고, 다시 민주당 중심의 정치세력 총결집을 목표로 하는 '민주·리버럴 노조회의'로 재출발하게 된다(五十嵐仁 1998, 305-310).

조직노동 내부의 대립과 분열양상은 호소카와 연립정권 붕괴와 무라야마 연립정권의 성립을 계기로 정점에 달한다. 1996년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연합이 자민당의 과반수 의석 저지를 위해 전(全)야당과의 정책협조를 정치방침으로 정한 가운데, 구총평 계 노조들조차 지지정당을 자신의 실리적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일본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 사망선고는 역설적으로 노조의 종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시점에서 찾아온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사회당이 너무나 오랫동안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둔감했던 과거활동의 전략적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고세훈. 1997. “서구 복지체계의 변화와 정당-노조관계.” 강명세 · 최장집 편. 『유럽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서울: 법문사, 125-195.
- 권순미. 2002. 「일본사회당 실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갑윤. 1996. “일본 정당제의 변화: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지역연구』 5권 4호, 111-130.
- 이기완. 2001. “노동정치의 변용과 일본사회당: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정책노선과 사회당의 쇠퇴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10호, 35-51.
- 최장집. 2003. “노동 없는 민주주의: 일본사회당 실패에 관한 한 해석.” 『변동기의 한일정치 비교』 서울: 아연출판부, 257-314.

- 勞働省編. 『資料勞働運動史』東京: 勞働行政研究所. 各년.
- 大原社?問題研究所 編. 1983. 『日本勞働年鑑』. 東京: 勞働旬報社.
- 三宅一郎. 1985. 『政黨支持の分析』. 東京: 創文社.
- 上住充弘. 1992. 『日本社會黨興亡史』. 東京: 自由社.
- 小林良彰. 1997. 『日本人の投票行動と政治意識』. 東京: 木鐸社
- 升味準之輔. 1985. 『現代政治—1955年以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新川敏光. 1999. 『戰後日本政治と社會民主主義—社會黨總評ブロックの興亡』. 京都: 法律文化社.
- 五十嵐仁. 1998. 『政黨政治と勞働組合運動—戰後日本の到達点と21世紀への課題』. 東京: 御茶ノ水書房
- 日本社會黨50年史編纂委員會編. 1996. 『日本社會黨史』. 東京: 社會民主黨全國連合.
- 日本社會黨50年史編纂委員會編. 1996. 『日日本社會黨史』. 社會民主黨全國連合.
- 日本社會黨四十周年記念出版刊行委員會編. 1985. 『資料日本社會黨四十年史』. 日本社會黨中央本部.

- 日本社會黨政策審議會編. 1990. 『日本社會黨政策資料集成』. 日本社會黨中央本部機關紙局.
- 日本社會黨中央本部機關紙局. 1981. 『日本社會黨綱領文獻集』.
- 的場敏博. 1991. 『戰後前半期の社會黨一指導者の經歷を手掛かりに』. 日本政治學會編, 『戰後國家の形成と經濟發展—占領以後』. 岩波書店刊, 75-95.
- 朝日新聞社世論調査室編. 1976. 『日本人の政治意識』. 東京: 朝日新聞社.
- 曾我祐次. 1989. 『社會黨路線論爭小史—結黨から‘新宣言’までの系譜』. 『エコノミスト』(10月23日), 138-144.
- 總務廳統計局. 1966. 『勞動力調査年報』
- 樋渡展洋. 1991. 『戰後日本の市場と政治』.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Shinoda, T. 1997. “Rengo and policy participation: Japanese-style neo-corporatism?.” Sako Mar and Hiroki Sato, eds. Japanese Labour and Management in Transition: Diversity, flexibility and particip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을 통해 본  
일본정치의 실제 규명

## 일본의 민족문제

### ■ 주요 목차 ·

일본의 민족상황  
일본민족의 형성  
일본민족론의 전개  
재일외국인 정책  
재외일본인 정책  
일본의 민족적 과제  
부록 / 일본인해외이주년표



|||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 포커스

■ Q&A ; 이라크의 주권

## 논 단

■ 변화하는 임무, 변모하는 미군  
재외미군전력, 기지 재조정 의 이해와 폐해  
■ 중국의 정치개혁은 진전되고 있는가

## Archive

■ 陳水扁 대만총통 취임연설



## Q & A 이라크의 주권

정리 : 최 철 호(교양사회 대표)



### Q 이라크의 잠정정부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나?

**A** 부시대통령은 2004년 5월말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라크잠정정부는 ‘완전한 주권을 가진 이라크민중들의 정부가 될 것’ 이라고 지적, 그 임무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26개 지방단위의 행정을 관리, 2005년 1월까지 실시될 예정의 국정선거에 대비, 언제나 치안유지 임무를 계속할 수 있는 이라크 치안부대를 훈련할 미국에 협력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주권이 잠정정부에게 인정될 것인가 아닌가는 의심스럽다. 미국 외국문제평의회의 리 페인슈타인은 주권이양에 대해서도, “능력, 정통성면에서의 제약이 있는 점정정권에 잠정점령당국(CPA)이 권한을 이양할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 Q 주권이란 무엇인가?

**A** 주권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법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존재치 않는다. 컬럼비아대학의 국제법 전문가인 호세 알바레스는 주권은 자주정치적으로 정의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법률사전에서는 “독립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절대적인 지고의 권한”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특히 이 사전에서는 주권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세금을 과세하고, 징수하며,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연결, 재외국과의 동맹관계, 통상관계를 체결하는 것 등, 국내통치에 관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권한”이라고 부기하고 있다. 전 뉴욕대학의 노아 펠드만 교수는 근대적인 주권개념에는 국제정치상의 주권, 법적주권, 그리고 사실상의 주권이라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Q** 이라크의 잠정정부의 주권의 폭은 어느 정도인가?

**A** 부시대통령의 연설이나 미국과 영국의 UN안보리 결의안초고에 의하면, 잠정정부는 국내정치상의 주권, 법적주권은 가지나, 사실상의 주권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라크의 잠정정부는 다른 제국과의 외교관계를 체결, 바그다드에 외국의 대사를 접견하고, 정통적인 정부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잠정정부의 사실상의 주권은 이라크에 13만 8천명의 미군이 주류하고, 또 이라크 측이 충분한 방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커다란 손상될 수밖에 없다. 또 잠정의회의 선거가 예정되고 있는 2005년 1월까지의 이라크정부는 새롭게 법률을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합의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 **Q** 부시대통령의 주권이양 후의 이라크에 관한 계획은?

**A** 대통령은 2004년 5월의 연설에서, 이라크인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해 5단계계획을 발표했다. 성명의 내용은 부시정권 고관과 브라히미 UN사무총장 특별고문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5단계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UN이 선택한 주권을 이라크정부에 권한을 이양한다. 이라크의 종교,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한 전국레벨의 이라크인평의회를 창설한다. 이라크 평의회는 자문능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 안전과 치안의 확립을 위해 협력한다. 치안상의 책임을 언제 이라크 측에 이양할 것인가, 미국이 언제 철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한은 미정이다.

\* 이라크의 인프라재건사업의 계속. 이미 미국은 1백 84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투입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6월 31일 이후도 관리할 것이다. 석유수출에서 얻은 자금은 잠정정부가 관리하게 될 것이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UN이 설립하는 국제위원회의 관리아래 둘 것이다.

\* UN의 새로운 결의나 새로운 구상을 통해, 이라크에의 국제적 지원에 지지를 촉구한다.

\* 자유스러운 국정선거의 실시를 향해 노력한다. 275명으로 구성되는 잠정의회를 위한 최초의 선거는 2005년 1월말에 실시될 예정. 그 후, 이라크인이 신헌법을 제정한다. 정식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는 2005년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Q** UN은 어떻게 잠정정부의 멤버를 선발했는가?

**A** 부라히미는 이라크의 정치지도자, 민간지도자, 종교지도자, 이라크 통치평의회의 멤버, 그 밖의 이라크인과 만나, 각료후보자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는 CPA의 폴 브레마 행정관, 콘도리사 라이스 미국 대통령보좌관의 측근인 로버트 브라크웰과도 협의 6월 1일에 각료리스트를 발표했다.

### **Q** 이라크정부의 주요 포스트 사이에서 권력은 어떻게 나뉘지고 있는가?

**A** 시아파의 이아드아라피가 수상직을 담당, 대통령에 수니파의 가지야왈 두 사람의 부통령직에는 시아파의 이부라힘 자파리, 쿠르드인 로제 누리 자위스가 지명되었다.

### **Q** 6월30일 이후의 미국의 역할은?

**A** 미국은 6월 30일 이후도 이라크에서 커다란 존재감을 지속할 것이다. 워싱턴은 1천명 규모의 스텝들을 포용하는 대규모적인 아메리카대사관을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CPA의 본부가 있는 바그다드의 중심부가 그 예정지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인과 그 밖의 이라크 정부에의 외국인 고문 약 2백 명은 앞으로도 계속 고문으로서 활동할 것이다. 13만5천명 규모의 미군이 계속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외국에서 침입해 오고 있는 외국인 테러리스트, 현지의 무장반란세력의 진압에 대처하고 있다.

미 중동군의 아비사이드사령관은 이라크에서의 소란이 격화될듯하면, 병력의 증파도 검토될 것이라고 미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Q 6월 30일 이후, 이라크에서 소란은 격화해 갈 것인가?**

**A** 앞으로 소란이 격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군관계자도 있다. 아비사이드장군은 미 의회에서의 증언으로, 소란이 보다 격화할 것이라고 예측, 부시대통령도, 소란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Q 이라크의 치안부대는 언제 나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인가?**

**A** 아비사이드장군은, 미국이 훈련하고 있는 이라크치안부대가 제대로 기능할 시기에 대해서, 2005년 4월까지는 걸릴 것이라고 미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현재 20만 명의 이라크인이 미군주도의 연합군과 함께 치안임무에 임하고 있으나, 그의 대다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04년 7월 1일로 이라크에서의 치안임무를 미군이 이라크의 치안부대로 옮겨, 손을 놓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올다 샤프 미 통합참모본부 전략입안 정책부장은 말하고 있다.

**Q 6월 30일 이후 잠정정부의 권한 면에서의 제약은 무엇인가?**

**A** 전문가들에 의하면, 잠정정부는 이라크군의 완전한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안보리의 결의가 없으면, 미군이나 외국부대를 국외로 퇴출할 수 없다.

**Q 6월 30일 이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

**A** CPA와 이라크통치평의회가 승인한 이라크 기본법은 그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6월 30일 이후도 유효하다고 하는 입장을 미국정부는 가지고 있으나, 잠정정부는 법률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후 선거에서 수립된 정부는 헌법수정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 변화하는 임무, 변모하는 미군

도널드 럼스펠드

(Donald Rumsfeld, 미국 국방부장관)

### 19세기와 21세기의 만남

2001년 크리스마스 직전, 나는 아프카니스탄과 그 주변국들을 방문, 그때 현지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도 방문했다. 내가 만난 병사들의 대다수는 마자리사프 공략에 (북부동맹과 함께) 참가했던 특수부대의 특출한 병사들이었다.



아프카니스탄에 발을 들어놓은 이후, 미군 특수부대는 현지에서의 곤란한 작전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에서, 그들은 군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 지뢰지대에 가까이 있는 급경사의 산악도로를, 야밤에 분장을 하고, 운반용 로바를 이용하여 말들에 의지하면서 조심조심 이동했다. “생명을 좌우하는 말 고비를 일주일간 내내 움켜쥔 채로 보냈다” 낭떨어지르 이어지는 산악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병사들의 대부분은, 그때까지 말 근처에도 가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반 달리반 세력과 협력, 함께 훈련을 거듭함에 따라, 미국 병사들은 새로운 동맹세력에서 아프카니스탄이라는 토지에서의 전투의 현

실을 배워, 일방에서는 그들에게 병기, 식량을 쥐, 전술을 가르치고, 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병사들은 마자리샤르프의 공략작전을 폈다.

작전당일, 특수부대의 하나는, 적의 배후에 몸을 숨기고, 공중폭격을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폭발음이 각 부대의 일제 행동개시의 신호가 되었다. 그 시각이 되자, 특수부대 병사들은 공격목표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 스스로의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나머지 2분, 30초, 15초”.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나타난 수많은 정밀 유도병기가 달리반이나 알 카이다의 군사거점에 비 오듯 작열하면서 격렬한 폭발음이 진동했다.

반 달리반 세력과의 연대도 잘 이뤄졌다. 폭발에 의한 연기 가운데에서, 말을 탄 수 백 명의 아프칸 병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폭탄과 편이 휘날리는 가운데, 적을 추적해갔다. 로켓트 추진형 수류탄을 가진 병사는 소수였으며, 그 가운데서는 탄약을 열 발 정도밖에 소지하지 않은 병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프칸 병사들은 미병과 함께, 적의 전차, 추격포, 대포, 저격병에 의한 공격 앞에 용감하게 싸웠다. 이것이 21세기 최초의 미국 기병대에 의한 공격이었던 것이다. 어떤 미국병사는 전투가 완료되었을 때 아프칸 병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가까이 온 어떤 아프칸 병사는 한쪽 바지를 들어올렸다. “부상당한 부분을 들어내 보이기 위해서 일 것이다 ‘고 그 미 병은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아프칸 병사는 그의 한쪽 발이 의족인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 아프칸 병사는 한쪽 발로 말에 올라타,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마자리샤르프의 공략에 성공, 달리반 정권을 파상적으로 타격하여 붕괴시킨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미국의 해군, 공군, 해병대의 병사들이 조작했던 최신예 정밀유도병기를 가진 미국의 특수전력과 한쪽 발로 말에 의지하면서도 용맹하게 싸운 아프칸 병사의 용

기가 결합된 결과였다.

이 날, 아프카니스탄 평원에서 19세기와 21세기가 만나, 결국 위험하고 적의에 찬 적대세력을 타도하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위대한 성과였다.

### 아직 보이지 않은 적에 대항하기에는...

조지 W. 부시대통령이 거의 4반세기 만에 나를 펜타곤(미국 국무성)에 다시 불러, 새로운 전략을 입안하도록 요청했을 때, 대통령은 내가 이미 시대에 뒤쳐진 올드 타이머(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도 우리들이 21세기의 지금 기병대를 부활하게 될 줄이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본질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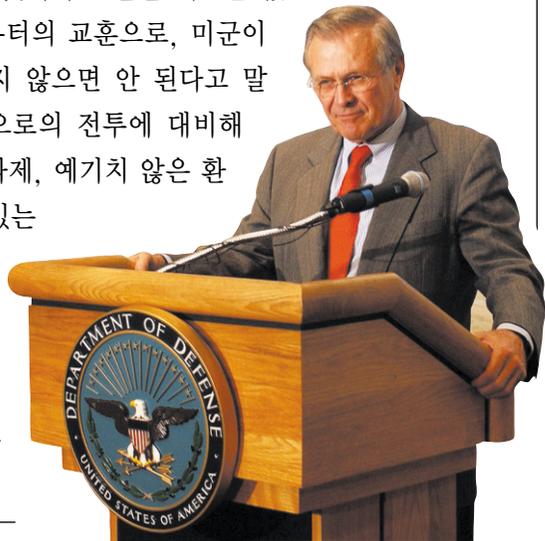
2002년 현재, 우리들은 21세기 최초의 전쟁에 임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기병대가 부활하고,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군사영역에서의 기술혁명(RMA)이, 단순한 신형 하이테크무기를 증강하는 것으로만 달성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신형 하이테크무기의 증강이 RMA의 중요한 일부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RMA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싸움의 형태이기도 했다.

제2차대전기의 독일이 고안한 '전격전'은 전투상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 전술 면에서의 변화는 독일 군 전체의 겨우 10-15%를 동원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당시의 독일은 앞으로의 전쟁이 대규모 군대에 의한 장기적인 참호전이 아니라, 수준 높은 군인들로 구성된, 신속한 전투능력을 가진 소규모의 군대가, 공군의 지원을 받아 기동력을 발휘할 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독일군은 속력을 내는 전차와 그것에 이은 보병부대, 대포, 급강하 폭격기를 하나의 세트로 하여, 적의 전선의 일부에 집결시키는 ‘전격전’의 개념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압도적인 전과를 만들어 냈다.

‘전격전’이 혁명적으로 지금까지에 없었던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 군이 새로운 군사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다. 신기술과 기존의 기술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잘 조합시켰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마자리사리프의 전투는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었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전투에서도, (레이저 유도병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 (전자계통에서의 근대화는 행해지고 있으나, 이미 개발에서 40년이 지난 B52 폭격기와 같은) 상당히 노후화된 무기, 특히 (총을 가진 병사들이 말을 탄 것과 같은) 가장 초보적인 전투 스타일이,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로 엮어져, 그 결과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는 것에 성공했다.

물론,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전투와 같은 전술과 군사능력의 조합이, 앞으로의 전토모델에 될 것이라고 말할 의도는 없으며, 아프카니스탄 전투로부터의 교훈으로, 미군이 말의 안장을 수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투에 대비해 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과제, 예기치 않은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전력과 군사능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교훈으로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놀라움과 불확실성에 가득 찬 세계에서 우리들이 생활



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적응능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결하다.

냉전기에 우리들이 직면한 위협은 예측가능한 것이었다. 적대 세력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 적대세력의 행동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과 능력을 구축했다. 핵 병기고를 구축, 초음속전투기와 함께 제트시대에 돌입했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만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나 장거리 폭격기도 개발했다. 소련의 전차가 독일의 북부평원을 넘어 침공해도, 즉석에서 반격, 국경의 저쪽으로 내몰아칠 수 있는 것 같이 워싱턴은 유럽에 대규모적인 미국부대를 전방에 배치했다. 특히 봉쇄정책을 취해, 소련의 괴뢰정권을 불안정화시키기 위해 현지의 반정부세력에 군사원조를 제공, 군사고문을 파견함과 동시에, 소련의 확대주의에 위협받고 있는 우호국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 우리들은 전술, 전략, 군사능력을 교묘하게 조합하여, 평화를 지키고, 자유를 옹호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냉전이 종결되고, 소련도 소멸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친숙해온 안전보장환경도 없어졌다. 2001년9월11일에 우리들이 생각하던 대로, 신세기에서의 군사적 과제, 20세기의 직면한 위협과 다른, 간단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테러리스트가 민간 항공기를 하이잭크 하여 가미가제 미사일로 둔갑, 펜타곤과 세계무역센터에 돌진, 수천 명의 희생을 강요시켰다. 겨우 반년 전까지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는 새로운 적에게 우리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적이, 사정거리와 파괴능력 면에서 점점 강화하고 있는 병기에의 접근을 증가시킴에 따라, 그들에 의한 반격의 파괴력은 9월11일에 우리들이 경험한 것 보다는 확실히 큰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기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곤란이 수반한다. 그것은 어디의 누군지 알 수 없는, 보지도 못한 세력에 의한 불확실하고 예기치 못한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와 같기도 생각되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기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군사사상의 굴레를 파괴하고 새로운 군사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대비하면 걱정 없다

9월11일의 테러공격 훨씬 이전부터, 펜타곤의 문관, 군인들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군사수법을 이미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1년도 카드레니알 방위 리부에서, 우리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신 안전 보장환경에 대해서 검토를 거듭, 신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은 내렸다.

이번 우리들은 두 가지의 전역에서 동시에 대규모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을 상정한(동시2정면=2MTW)전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동시에 2정면전략의 경우, 적대하는 두 나라에 동시에 침공하여, 상대국의 수도를 점령, 적대적인 정권을 교대시키기 위한 두 가지의 대규모적인 점령군을 필요로 했다. 이 전략 아프로치는 냉전종결 직후는 잘 기능했으나, 현상에서 이 전략을 답습하면, 특정의 두 가지의 분쟁에 과도히 대비, 예기치 못한 긴급사태나 21세기형의 전략과제에 의 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

장래에 대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본토방위에 대한 위협에 대해 항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가까운 장래에 전투능력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두 가지의 점령군

을 유지해 가는 대신, 4가지의 중요한 전역에서의 억지체제를 유지할 것을 중시, 이것을 동시에 두 가지의 전역에서 적을 단기간에 타도할 능력으로 지탱, 그러한 한편, 하나의 침략국에 대한 대규모적인 반격을 행해, 수도를 제압하고, 정권을 교대시킬 전력을 남겨둔다고 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결정했다. 미국 대통령이 두 가지의 전역에서 적대하고 있는 2개국의 정권의 어느 쪽을 교대시킬 것인가를 상대가 아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어느 쪽인가의 성역에서 억지가 붕괴되지도 않는다. 또 두 개의 점령군의 하나를 해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없애는 것으로, 장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이미 직면하고 있을지 모르는 보다 긴급도가 낮은 예측불허의 사태에 필요한, 새로운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들은 미국의 방위입안을 이 50년에 걸쳐 지배해온 ‘위협’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에서 거리를 뒀,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채용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어프로치에서는 어떤 나라, 어느 지역이 우리들을 위협하는 가하는 입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어떻게 하여 우리들이 위협되고 있는가, 그것을 억지하고, 그러한 위협에서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가 중시된다.

이것은 일반 사회의 방범조치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언제, 자택에 도둑이 들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도둑이 집에 잠입해 들어올 것인가를 예상할 수는 있다. 도둑은 자물쇠를 부술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람들은 현관문의 튼튼한 자물쇠를 설치한다. 창으로 침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보장치도 필요케 된다. 가옥에 침입하기 전에, 도둑의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다. 때문에 경찰에 근처를 순찰하게 하고, 악한들이 주택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커다란 경비견을 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것과 같은 이유가, 본토방위에도 해당된다. 특정국과 싸우기 위한 군사력을 정비하는 대신, 우리들은 먼저, 자기들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프리드릭 대왕이 “전쟁의 일반원칙에 대해”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자기가 적이었다면 어떤 공략 작전을 펼 것인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하면, 거기서 상정된 위협을 억지, 타도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육해공에서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이상, 잠재적 적대세력이 이 분야에서 정면에서 우리들에게 대항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페르샤만 전쟁의 경험에서, 미군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미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육해공군을 정비하려 하지 않고, 우리들의 약점에 주목, 거기에 파고들려하고 있다. 즉 ‘비대칭전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해 온다.

잠재적 적대세력은 개방적 사회를 가진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해서 취약한 것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위성 등의) 미국의 우주공간에서의 자산이나(컴퓨터를 매개로한)정보 네트워크가 약점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그들은 원거리에서 미군을 파견할 해외작전능력이,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현지에서의 해외기지에 의존하고 있음도, 그리고 탄도미사일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위체제가 완성되어 있지 않음도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잠재적 적대세력은 대량파괴병기와 미사일의 개발에 열중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들의 일은 이러한 다양한 대미공격의 방법들을 가능한 한 봉쇄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비할 필요는 있으나, 우주 공간에서의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순항미사일, 핵무기, 화학 무기, 생물무기에 의한 공격에의 대책도 강구치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미국이 우위에 서 있는 부문, 예컨대 먼 외국에의 해외전개능력, 정밀유도병기, 우주전쟁, 정보전쟁, 바다에서의 전쟁능력을 더욱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

### 새로운 과제를 위한 6가지의 전략

우리들은 뉴욕, 워싱턴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나기 전부터, 21세기의 평화와 자유를 지킬 것을 이미 결의하고 있었다. 이 목적으로부터도, 펜타곤은 다음에 지적하는 6가지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과제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미국 본토와 해외의 미군기지의 방위. 둘째, 먼 거리의 전역에 병력을 전개, 영향력을 유지할 것. 셋째, 해외에서의 적대행위의 '성역'을 없애는 것. 아무리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표고가 높은 산에 숨어있어도, 아무리 깊은 동굴이나 지형이 험한 지역에 은신해 있어도, 혹은 아무리 속도가 빠른 차로 도망치더라도, 우리들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틀림없이 상대에게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우리들의 정보네트워크를 견지할 것. 그리고 여섯째, 우주공간에의 자유스러운 접근을 유지, 우주에서의 우리들의 활동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수호하는 것이다.

9월 11일과 그 후 아프카니스탄에서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방위태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6가지의 과제에 대처해가기 위해, 우리들은 2003년 회계연도의 해당예산을 증액했다. 새로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과제에 대한 프로그램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 금후 5년 내에, 우리들은



미국본토방위, 해외기지방위를 위한 예산을 157%, 원거리의 적대하는 지역에의 해외전개능력의 예산을 21% 인상함과 동시에, 정보기술의 강화예산을 125%, 미국의 우주공간에서의 능력강화예산을 145% 인상할 예정이다.

동시에 우리들은 DD21구축함, 해군지역미사일 방위, 18육군 레가시 프로그램, 피스키퍼 미사일 등, 신 방위전략이나 전투 스타일과 일체성을 갖지 않는 많은 시스템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들은 F14전투기, 베트남전쟁기의 1천기의 헬리콥터 등, 노후화하고, 유지비용이 드는 병기를 장비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혹은 10년이라는 기냥에 미군을 일변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치도 않다. 군대를 변모시키는 것은 개시와 종료 가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늘 변화하는 현재진행형의 프로세스이며,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변혁프로세스는 완료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21세기에서 우리들의 과제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들의 도시, 우호국, 동맹국, 해외전개군, 그리고 우주에서의 자산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지키고,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원거리 지역의 전력을 전개할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 거리 전역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공, 해군과 함께, 적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긴급전개형의 일원화된 통합군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에 추가하여, 정보능력, 장거리에서의 정밀공격능력, 특히 육지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해양에서의 공격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목적은 단순히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아, 그들이 기존병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지할 뿐 아니라, 위험한 병기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 해군이 압도적인 힘을 가짐으로서, 다른 제국은 미국과의 경쟁할 수 있는 해군력의 정비를 시도한다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 할 뿐으로, 도저히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그 결과 그러한 시도를 단념했다. 동일하게, 우리들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적대국이 그것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단념하도록, 새로운 군사자산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효과적이 미사일방위시스템이 구축되면, 다른 나라들은 탄두미사일에 의한 공격에서는, 미국과 동맹제국의 도시에 대한 핵의 공갈 책을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 개발을 단념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우주시스템을 강화, 이것을 방위할 수단을 정비하면, 우리들의 위성 네트워크를 공격할 소형 '킬러 위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나라도 없어질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의 칼데스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달리반이나 알 카이다에 대해 최근 사용된 신형 지표 관통

형 무기나 (충격파와 열풍을 사용한) ‘사모바릭 폭탄’ 도, 테러리스트가 숨기거나, 테러 국가가 스스로의 대량파기무기 개발능력을 은폐하기 위한 지하군사시설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능력을 정비하는 것에 더해, 미군을 변모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전력과 군사능력의 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펜타곤은 이 작업을 ‘저농도, 고수요’ (low density/high demand)의 자산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들의 우선순위의 부여방법은 잘못된 것이며,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조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다. 예컨대,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전투경험은 무인비행기가 얼마나 유익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그 약점과 보유기수의 적음도 우리들에게 절감시켜주었다. 펜타곤은 정찰, 감시, 지휘통제용의 비행기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방공방위에도 문제가 있고, 대 생화학무기 부대, 특수작전부대가 충분하지 않음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은 지금까지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군사 투자 면에서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때, 먼저 유인군사능력과 무인군사능력, 장거리시스템과 단거리시스템, 스텔스 시스템과 비 스텔스 시스템, 공격용무기와 방위 센서, 약한 시스템과 강한 시스템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과제에 대응하기에는 정보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관건인 것을 인식해야하며, 우리들은 정보화시대에 전개에 따라, 그것의 은혜를 백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재외 미군병력, 기지재조정의 이점과 폐해

- 가맹국과의 진지한 협의에 심혈을 기울여라

카드 M. 켄벨 (미국전략문제연구소 부회장)  
세레스티 존슨 워드 (전략문제국제연구 국제안전보장프로그램 펠로)

### 변화하는 위협과 전력재편

현재 펜타곤은 외국의 미군 전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대폭적인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모두가 모든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되는 미국 전방기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더그랄스 파이스 국방성 정책담당차관은 재외미군의 전력재편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가 가까이에서 미군부대의 철수, 독일에서의 대규모적인 전력철수 등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입안자들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점기지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하고 있다. 특히 기지를 두고, 기지를 받아들이는 국가와 어떤 협정을 맺고, 부대나 전함의 배치를 어떻게

하며, 활동전역을 어디로 정하는가, 이들 모든 것이 재조정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력재편프로젝트는 베트남전쟁 후, 혹은 냉전 종결 후의 전력재편을 상회하는, 이 반세기 간 가장 커다란 미국의 대외 군사자세의 변화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재편이 필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전방주둔군의 구성으로서는, 진화하는 미국의 안전보장과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워싱턴의 고위관료들은 설명하고 있다. “위협이 대두하고 그러한 지역 가까이로 전력을 이동시켜야 하며, 위협지역에의 접근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미군의 유연성과 기동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합의하려는 국가에 주류부대를 주둔시킬 필요도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다분히,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독일, 일본의 오키나와, 한국의 서울에서의 대규모적인 미국의 존재가 현지사회에서 불려일으키고 있는 마찰을 축소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전략입안자의 생각대로 계획이 진전되면, 미군 병사와 군사자산은 안심, 안전하고 쾌적한 후방기지 시설에서, 잠재적 위협지역으로 신속하게 전개 가능한 전선기지로 이동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이점도 있다면, 문제도 있다. 다분히 새로운 전력재편은 그 나름대로의 전략적, 군사적인 논리에 유도되고 있으나, 한편에서, 상당한 인적, 재정적, 외교적 경비를 수반하게 되기도 한다.

## 바잘 기지

미군의 규모가 큰 만큼, 기지를 움직이면, 현지의 민중, 경제,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 군사태세로의 전환이 불려일으키는 문제가 그것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편 계획을 각 방면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펜타곤의 계획은, 정치, 외교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듯 하다.

미국의 외국에서의 전력배치는 언제나, 보다 최근 전쟁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전력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전력재편은 최근의 전쟁 종결시점에서의 전략배치상황을 기반으로 조립되고 있다.

예컨대, 제2차대전이 종결된 당시의 미군은, 주축국과의 전투를 위해 세계 각지에 기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지의 대다수가, 그 후 소련 포위망을 구축 ‘봉쇄전략’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초의 미군의 전력배치는 냉전기의 우선순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클린턴정권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인 ‘민주주의 공간에의 관여, 확대전략’을 위해 전용되었다. 소비에트의 야심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에 비치되어온 총 20만 명의 미군은, 지역적인 안전과 국제안전보장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그대로 이용되게 되었다.

9.11이후, 펜타곤은 새로운 전략목표를 정했다. 테러와 싸우고, 대량파괴병기(WMD)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신 시대에서의 미군의 임무로 여겨졌다. 펜타곤은 이 전략목표에 따라 전력재편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획되고 있는 전력재편의 일부는, 전혀 새로운 전략개념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 제임스 존슨 장군은 수면위로 떠오른 일련의 ‘수선화의 잎’과 같은 기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선화 잎’이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일선에서 행동을 일으키는 소규모의 부대가 주류하는 일련의 군사시설이다. (그들은 이러한 시설을 ‘조용한 기지’라고 부르고 있다. 오직 보급물자와 장비만 보급하면, 이들 기지를 대규모적인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해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증강 가능한 작은 기지를, 독일의 림스타인, 일본의 요코즈카 등의 충실한 인프라를 가진 대규모적인 거점기지과 링크시킨다. 이것이 존슨의 구상이다. 다양한 제국과의 기지 접근권을 둘러싼 교섭이 행해지면 그러나 ‘바잘 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보다 대규모적인 장비를 육지나 해상에 사전 배치할 계획도 있다. 이 점에서

도 신속한 기지건설부대의 조직화가 중시되고 있다.

## 아시아, 유럽에서의 전력재편

펜타곤은 아시아, 유럽, 중동, 페르시아 만 제국에의 전력, 기지재편제안을 정리해 가고 있다. 이미 한국과의 사이에는 주둔기지의 통폐합에 대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제2보병사단과 그 밖의 지원부대는 언젠가는 DMZ가까이에서 철수, 남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또 위기가 일어날 경우에 신속하게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펜타곤은 한국 남부에서 공, 해군용 장비의 사전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주요한 공, 해군기지는 거점기지로서 온존시키게 될 것이나, 해병대의 일부에 대해서는 오키나와로부터 철수되거나, 인구가 적은 오키나와 북부로 이동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미국의 공, 해군의 존재는 금후 강화되어 갈 것이다. 이미 워싱턴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에, 기지 접근권을 강화하거나 합동연습 등에 대한 협의를 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전력은 괌도나 디에코가루시아 섬에 폭격기나 순항미사일을 장비한 공격용 잠수함을 전방 배치함으로써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향후 베트남에서의 해군시설을 확보할 것을 검토하고 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도 착실하게 개선해가고 있으며, 군부간의 협의도 진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과 남아시아제국의 군사협조는 강화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기지, 군사시설, 연습지에의 접근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워싱턴이 아시아에서 상정하고 있는 미 전력재편이 단계적인 것임에 대해서, 유럽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담하고 극적인 재편이 계획되고 있다. 이라크에 파견된 미 육군 제1장갑사단이, 주류기지인 독일에는 귀환치 않고, 미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널리 보도되고 있다.

그 밖의 주독미군부대도, NATO의 새로운 멤버인 동유럽 제국의 기지로 향하게 될 것이리라. 예컨대 폴란드는 대규모적인 연습 용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면, 미군의 존재가 민간인의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일도, 주독미군을 곤란하게 만든 엄격한 국내규제에 얽매이지도 않을 것이다. 또 잠재적인 위협지역인 코카사스, 중앙아시아, 중동에 가까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흑해의 항만과 공군기지의 사용을 인정한다고 이미 워싱턴에 통보하고 있다.

유럽연합군사령관의 담당지역은 유럽을 넘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아프리카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 수개월간에만 보더라도, 펜타곤은 대 테러계획을 위한 현지 군을 훈련키 위해 1천8백 명의 미국관계자를 소말리아 등으로 보내고 있다. 금후 아프리카 서부제국에도 군사고문을 파견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은 어떻게 될 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틀림없이 철수, 사우디의 프린스 살탄 공군기지의 기능은 카달 기지로 이동될 것이다. 그 밖의 중동지역에서의 전력재편은 전후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가 어떻게 추진되는 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언제나 대규모적인 군사자세의 변화가 구체화될 것이다.

또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중앙아시아의 미군기지는 그대로, 대 테러전쟁의 수행, 그리고 적어도 대두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 왜 전력재편이 필요한가

이러한 전력재편은 엄격한 전략분석과 정치목적에 따른 것이다. 펜타곤의 고위관리들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은 파탄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국가나 이슬람과격파를 포용하고 있는 지역, 마약밀수 그 밖의 질서혼란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긴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남아프리카 (알젠틴, 브라질, 파라과이의 국경지대)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발칸, 코카사스, 중동을 거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불안정한 활모양의 지역이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군사사제의 변화의 대부분은 2002년에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 펜타곤이 2001년에 발표한 가드레리아(4년에 1번)의 방위 리브,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고관의 연설이나 발언에 의해, 이미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이들 문서는 '예기치 못하는 장소를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전력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의 고관들이 과거부터의 동맹제국을 신뢰해서 좋을지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그들이 전력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워싱턴의 고관들의 대부분은 베를린과 서울은 전략적으로 표류하고, 불안정하다고 보고, 미국과의 노선상의 불일치에 더해, 독일과 한국은 현지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행동을 속박할 수 있는 규제나 제약을 도입하는 것은 아닌가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워싱턴은 주요한 전략지역에의 자유스러운 접근이 곤란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작전 전개를 위한 거점의 다각화와 확대를 원하게 되었다.

그 밖의 동기도 움직이고 있다. 미군의 전략을 변모시키려 결의하고 있는 도널드 램스펠드 미국방장관의 의향이, 이번의 전력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전력재편의 목적은 육군의 전략구조를 발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 현 정권이 발족해서 오래지 않은 시점부터 정부 고관들은 적어도 육군 10개 사단 가운데 하나를 없애려고 검토하고 있었다. 실제, 그 후 3년간, 미국을 보다 기동성이 풍부하고 발 빠르고 유연한 존재로 하려는 정부고관들의 좋은 표적은 육군이였다. 군사정책을 둘러싼 진보파 가운데는, "21세기형의 위협에서 볼 때, (육군의)장갑사단 등은(시대 뒤쳐진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글로벌한 규모에서의 미군의 전력재편에 의해 보다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이 현재 독일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부대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미 군부에서는 거의 확실하다.

(Foreign Affairs 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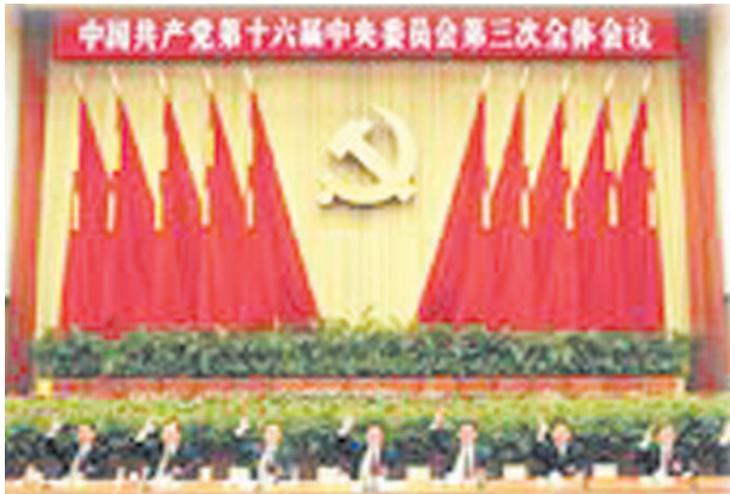


## 중국의 정치개혁은 진전되고 있는가

- 변모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리자벤 에코노미

(Elizabeth Economy, 미국 외교문제평의회 아시아연구 디렉터)



### 미국의 힘으로 가능한 것

최근 3년간, 미-중 관계를 둘러싼 미국 내의 논의는 가열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확실히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빌 글린턴과 같이 대중 강경책을 내걸고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간 부시 대통령은 그 후 클린턴과 같이 대중 우호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개입정책을 취했어야 할 이유를 클린턴정권이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대해서, 부시정권의 노선변경은 전술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테러라고 하는 위협과 위기에 직면한 워싱턴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편이적으로 체결하는 것의 이점을 현실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절실한 대응을 요구한 대테러전쟁의 제1국면은 종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인 워싱턴의 강경파가 대두, 그들의 주장하는 방향으로의 대중노선으로 되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대중 무역적자나 중국의 인권문제를 문제시할 세력이 강경파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대통령선거에서 좋은 쟁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1천2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인권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과 홍콩에 대한 북경의 강경노선도 문제다. 당연히 중국에의 개입노선에 반대할 세력들에 있어서는 2004년 스스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 봉쇄노선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커다란 잘못이 있다.

〈중국에 개입하면, 그에 따라 중국은 근대화와 사회변혁을 만들어내, 국내외적인 행동도 조용해 질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외국과 접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 중국에게도 중산계급이 탄생, 그들이 중심이 돼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개입정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준 중국이 부유하게 되었으나, 경제개혁이 자율적, 직접적으로 정치개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분히 경제의 자유화는 재산권의 확보, 정보에의 자유스러운 접근, 정치적발언권의 확대 등, 새로운 요구를 내건 중산계급을 낳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들은 발본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할 정도로 단결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변화는 시장경제에의 이행에 파생하여 생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시대논단**

중국 지도자들은 이 수 십년간, 스스로의 리더십의 정통성을 고양시켜 가는 데는 경제적 성공을 계속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은 시장 경제를 투명한 환경 속에 제대로 기능시켜, 경제개혁의 여파로서의 생긴 사회문제에 대응해 가는 것에 불가결한 정치개혁, 제도개혁에는 눈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패가 횡령하고, 중국의 사회보장체제는 극적으로 형해화하고, 사람들은 현상에의 불만을 만들어 내, 지배정당으로서의 중국공산당의 정통성도 손상되었다.

현재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체제를 존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등소평이 1세대 전에 경제부문에 행하려했던 개혁노선을 정치영역에서 채용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방에의 권력이양을 진전, 특별구에서의 실험을 인정, 외부세계의 개방화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수상은 새로운 정치프로세스와 제도를 확립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려 하고, 내외의 전문가를 이 변혁 프로세스에 참가시킴과 동시에,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치 않는 가를 파악키 위해 지방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이러한 시도를 과거 민중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저널리스트, 변호사, 자산가, 환경 보호론자, 지식을 포함, 광범위한 사회층이 지금은 보다 본격적인 개혁의 실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산당내에서는 개혁에 대한 강한 저항도 나타난다. 이러한 세력은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 개혁파의 당내세력에서 마저도, 현 지도층은 그다지 성급하고 너무나 대담한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가 불안정화하거나, 보수파의 반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권위주의체제를 ‘단계적이고 조용하게’ 변혁해 가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에서도,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명백하다.

그렇게 개입노선을 앞으로도 유지, 중국의 경제, 정치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정책에서 중국의 변화를 좌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 변화의 조류

중국지도자들에 있어 지금의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이 수 십년간에 걸쳐, 경제성장 마저 실현하면, 민중들에게 의료나 사회보장을 제공, 기본적인 인권이나 환경을 수호한다고 하는 책무로부터 자기들은 해방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정부의 부패나 범죄가 확산되어, 사회보장시스템이 형해화되어 갔다. 이렇게 하여 민중들은 정부를 믿지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지금은 공산당의 정통성 그것이 위협되고 있다. 정부의 부패는 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중국사회과학원이 1만5천명의 도시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개혁에서 보다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공산당이나 정부 관료 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지방주민의 80%, 그리고 도시주민의 75%가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는 부패 한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위법한 행동을 단속해야 하나, 지방의 공무원들은 오히려 수뢰 그 밖의 자금에 행정운영을 의존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어떤 관료에 의하면, 마약거래, 매춘 등의 범죄조직으로



부터의 수뢰가 지방정부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국유기업을 은퇴한 사람들이나 해고된 사람들 중에는, 정부부패를 규탄하는 수 천 명 규모의 데모가 매달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데모참가자는 본래는 자기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연금, 사회보장, 의료보험의 예산을 정부가 편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에서 가출, 자기들의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영향력을 강화, 확대하는 중산계급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언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중산계급은 자기들이 새롭게 손에 넣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구조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가 소유자 조합 등의 민간조직을 만들어,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려 정치가에 입후보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은 민간자산이 국가자산을 12억 달러 상회한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중산계급의 소리를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의 상급간부의 30가 정치개혁만이 지도층의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지금까지도 순탄치 않다. 개혁에 지체가 일어난 경우도 있으며, 노선이 변경되거나, 반동을 초래한 일도 있다. 이미 북경은 중요한 개혁에 일부 착수하고 있으나, 이 밖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수준의 구상정도이거나, 소규모적인 실험정도에 그치고 있을 경우가 많다. 한번 표명된 개혁계획이 후에 철회된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03년, 심천특구의 정부는 대담하게도 공산당에 의한 정부의 관리체제를 그만둘 것을 제안했으나, 주요한 추진자였던 인물이 인근의 성장으로 전출하자, 이 제안은 취하되고 말았다.

실현까지는 수년이나 걸리는 개혁안도 적지 않다. 재산권의 보장을 헌법에 명기



하려 하는 제안이 최초로 나온 것은 1999년이었으나, 당시는 공산당의 반발에 의해 거절당해, 보다 좋은 정치 환경이 된 2004년 3월이 되어서야 겨우 실현됐다. 그러나 무엇이건 전진이 보일 때에는 상황이 후퇴하는 것도 다반사가 되고 있다. 그 후 인터넷에의 자유스러운 접속이 규제되고, 종교적인 반체제파가 체포됐으며, 지방선거의 부정행위, 공갈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 쇄신을 시도하는 공산당

그러나 정치개혁은 결의에 차게 진행되고 있다. 정통성을 강화하지 않는 한, 정부 그리고 체제의 존속이 위협하게 되는 것을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따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수상은 민중들이 정치프로세스에의 관심을 보다 높이려고, 정부의 정치수법의 투명화를 높이고, 공산당의 기반을 넓히려 하고 있으며, 선거제도의 개정도 일부에서 시험적으로 행하고 있다.

예컨대, 후진따오는 2003년 10월에 공산당 상무위원회의 정치요강을 처음으로 출판할 것을 인정, 당 간부의 임무에 관한 보고서에 중앙위원회가 심의하는 것도 인정했다. 지방정부도 시민들에게 성 인민대표대회에의 참가를 요구, 의사록의 보다 많은 것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등으로, 독자적인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 廣州市는 인사이드에서 도시계획, 대규모개발계획에 이르는 행정활동의 정보공개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의견이나 불만을 시장에게 직접 보내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廣州市는 미국의 정보공개법과 비슷한, 특정의 정부기록에 관한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정부문서의 정보공개를 중앙정부 수준에서 행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공산당은 기업가나 성공하고 있는 기업가 등에 입당을 권유, 당원구성의 다양화를 기도하여 지지기반을 확대시킬 것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헌법수정도 이러한 비즈니스 층의 중요성을 인식, 당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 의도였다. 민간기업가의 20-30%가 지금은 공산당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들이 당의 내부에 있음으로서, 재산권의 보호, 국유기업의 개혁, 당에 의한 정부의 관리 등의 미묘한 문제의 논쟁의 방향성이 변화하는 것도 기대된다. 공산당의 비즈니스 층으로 省人代,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대의원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시민의 불만을 취합 시민발의형의 개혁안을 만들려고, 전문가나 전 관료들을 모아 사적인 싱크탱크를 만들고 있는 기업가들도 있다. 예컨대 반도체기업 SMIC사를 거느리고 있는 리처드 첸은 상해에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를 설립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나 금후, 정치개혁의 중심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의사표명을 가능할 수 있게'라고 하는 약속을 후진따오가 금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적어도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징조는 있다. 이미 촌락레벨에서 이 십년간에 걸쳐 직접선거가 행해지고 있으며, 다른 지방행정 레벨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대의제민주주의의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강소성 폐이장에서는 경미한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 자리에 무려 70명이나되는 지방공무원이 입후보,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의 논쟁이 일어났다. 최종적으로는 지방인민대표대회가 누구를 재판관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나, 후보자를 3명으로 축소할 때까지 여론조사를 이용한 민중참가형의 선출과정도 도입되기도 했다.

지방에서의 선거 입후보를 비공산당원에 개방한다면 정치참가로 향한 시민의 활



력을 증폭시키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 가운데는, 포스타나 팜프렛을 만들어 연설을 하기도, 웹 사이트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을 전개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대다수는 정치에의 시민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지식인이나 자산가들이다. 북경에 사는 어떤 후보자는 유럽의 저널리스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선거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선거에 참가함으로써,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감옥에 들어가거나, 문제를 만나지 않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있다.〉 독립파 후보 가운데 지방인민대표대회 의원에 선발된 것은 아주 소수였으나 그들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선거 캠페인은 광범한 사회를 자극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텔레비전에서나 본 적이 있는 유럽세계에서와 같은 선거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이뤄진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 법제도의 개혁

중국정부는 법제도 개혁을 모택동 사후 30년에 걸쳐 시도했으나 본격적인 법제도개혁을 추진한 것은 경제성장, 시장경제에의 이행,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의 재편이었다. 중국은 이러한 개방적인 환경 속에, 잘 고안된 법률, 잘 훈련된 변호사와 재판관을 양측으로 하는 투명도 높은 규제환경의 정비를 향한 시도를 개시, 이미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78년 당시, 중국에는 2천명 밖에 변호사가 없었으나 지금은 그 수는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것도 현재 230개의 법률대학원이 8만 명의 미래의 법률가들을 훈련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이나 퇴역군인이 재판관을 맡고 있는


**시대논단**

것은 과거의 일로, 지금은 중국 재판관의 70%를 넘는 사람들이 법률을 정식으로 배우고 있다. 사실, 최고재판소에는 하버드나 예일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재판관이 두 명 있다. 전인대의 법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소위원회는 현재 외국의 법률을 연구,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미묘한 법개혁의 기초에 뛰어 들고 있다.

법제도개혁에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다. 그것은 (법률에 이해) 증 수뢰 등의 부패를 취조, 사회혼란을 진정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당지도층의 정통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후진따오도,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2003년 가을의 연설에서 “중국사회에서의 정의와 공평을 확립키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사회에는 지금 정부소송의 수도, 정부가 재판에서 패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90년 초,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 소송 중에서 민간이 승소한 것은 전체의 40%정도였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75%에 달하고 있다. 민간의 법률사무소가 맹렬하게 세력을 증가, 환경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도 있으며, 계절노동자의 보호, 곤궁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도 있다.

지방에서는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들이 민중에 약탈적인 공무원들로부터 어떻게 하여 자신들을 지킬 것인가를 민중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전통적으로 무력했던 민중들도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 최근에도 북경의 재판소는 어떤 건설회사에 5백 명의 계절노동자에의 체불임금 60만8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재판장은 재판 후, “재판소는 시민의 법적권리를 지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금은 보다 본질적이고 혁명적인 법제도개혁의 제3국면에 들어가고 있으며, 어느 것이나 개인의 권리의 범위, 공산당과 헌법의 관계 등,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온 '전제'의 상당부분이 조정될 것이다.

후진따오와 원자바오는 최근에도 “공산당은 헌법이나 법의 지배아래 있는가, 아니면 그 위에 위치하는 궁극의 권한인가”라는 오래된 쟁점에 대해 언급, “공산당도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지배아래, 공산당이 정부나 기타 사회집단과 같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특권을 잃고 말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논쟁이 가열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후진따오와 원자바오는 법 개혁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확대시켜, 상황을 크게 진전시켰다. 2004년3월, 공산당은 헌법을 수정, 재산권을 보장, 인권을 존중, 보장하는 것의 서약을 명문화했다. 인권활동가의 류자오바는 새로운 인권조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언젠가는 중국도, 인권을 필수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의 일부로 밖에 보지 않았던 종래의 입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도, 인권을 〈중국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일련의 보편적인 가치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사형제도, 강제노동문제에의 법적대응도 현재 조정되고 있다.

## 미디어와 인터넷의 역할

정부에 의한 반 부패, 오직 캠페인, 그리고 (정보공개나 설명책임을 행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하는 시도에 미디어는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 미디어는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잘 커버하게 되었다. 일간신문만 2천개나 있으며, 9백 개의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이 9천만 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도 미디어는 정부에 설명책임을 하도록 연구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 신형 폐렴



SARS의 만연을 당국이 은폐하려 한 것에 대해서 조사보도를 하고, 정부에 의한 환경정화, 반부패, 오직 캠페인의 실패는 추급, 법률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이나 기업가들을 규탄하고 있다. 2004년4월초, 심천정부는 저널리스트가 정부를 의심, 타당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기하는 조례마저 도입했다.

정치적 논쟁을 둘러싸고 인터넷이 더욱 커다란 역할을 행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인터넷의 융성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있다. 1999년 당시, 인터넷 유저는 4백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2003년에는 그 수는 3천3백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실에는 예측을 대폭 상회, 2003년도의 인터넷 이용자는 7천9백5십 만 명에 달해, 그것도 그 가운데 2천만 명이 신규이용자들이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의 거의 64%가 뉴스를 온라인에서 읽고, 젊은 이용자의 40%, 성인 이용자의 24%가 외국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열람하고 있다.

중국에서 구축되어 있는 웹 사이트의 수는 35만을 넘어, 그 중에는 정치적으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웹도 있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 에이즈 캠페인 활동가 윈 얀하이(윈안하이)가 조직하는 민간조직 아이시의 웹 사이트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을 고발, 또 [www.nongyou.org](http://www.nongyou.org)는 농촌부의 여성의 자살율이 높은 것에 인식을 촉구, 농민들에의 세율의 높음을 비판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전인대의 대의원들마저, 교통, 저작권침해, 쓰레기 문제, 교육문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시민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디어나 인터넷은 법제도의 개혁이나 인권문제에의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는데도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언론의 자유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한 대학생 류 디가



체포되었으나, 그 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 여학생을 요구하면서 인터넷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 검찰 측은 결국 기소를 하지 않고, 그녀를 석방했다. 지식인들이 후퇴를 강요당한 국면도 있었다. 2003년 여름, 북경은 공공연히 급진적인 개혁노선을 제안할 지식인들을 탄압하기 시작, 여학생을 해방한 후에도, 인터넷에서 반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인물을 새롭게 체포했다. 그러나 7개월 후에는 지식인들은 정부에 대해서, 반파괴활동법을 개정, 헌법의 범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 폭을 한층 명확하게 정하도록 요구하기 태세를 병경해 갔다.

미디어는 언론의 자유의 확대 이전에, 정부비판을 강요했으나, 동시에 시민들에게 신중함에 노력, 자중하도록 요구했다. 예컨대, 살인 그 밖의 잔학행위 죄로 2003년12월에 사형에 처해진 류 용구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갱스터의 재판에 대해서도 미디어는 놀라울 정도 객관적인 보도에 힘썼다. 하급재판소에 의해 사형을 선고당한 류 였으나, 그 후 요령성의 고등재판소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수뢰죄와 사회 소란죄를 그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4개월 후에 최고재판소가 고등재판소의 판단을 물리치고, 사형을 선고 했을 때, 미디어는 시민들에 대해서, 재심에서의 수뢰죄, 그리고 류가 경찰에 수뢰를 강요 당했다고 하는 반론에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졸속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 중국적 시민사회에로

시장경제에로 향해감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금까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없애가지 시작했다. 북경은 (교육, 주거, 의료 등을 한꺼번에 인수해 왔다) 국유기업, 집단농장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에 대신하도록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비정부조직(NGO), 교회, 여성단체가 이 부문에서 활동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시민이나 민간의 단체가 리사이클을 시작하는 여성의 구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빈곤자나 고령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교회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NGO도 사회문제의 계몽에 나서며, 에이즈, 환경문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개인 활동가들이, 시민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돕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자원자집단, 종교단체, 노동조합, NGO가 정부구조의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중국의 시민사회의 기능은 이정도로 크게 다르다. 중국에서는 NGO는 정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내용과 참가자에 대해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을 초월한 횡단적인 정치활동의 싹을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NGO가 성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두 가지의 지부를 개설한 라이온스 클럽은 성을 뛰어넘은 활동이 인정되고 있는 예외적인 집단의 하나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 되고, 정부의 허가를 얻고 있는 종교만이며, 싱크 탱크라고 하더라도, 연구소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판단에 의해 순식간에 폐쇄되기도, 활동이 규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폭은 분명 확대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국제문제의 전문가인 안소니 사이크에 의하면, 현재,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의료, 환경보호, 교육문제에 뛰어들고 있는 중국의 민간단체, 비영리단체의 수는 70만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가 내걸고 있는 사회적 아젠다는 점점 확대조짐을 보이며, 그 목적과 전술은 보다 대담해 지고 있다.



이 십년간 중국의 환경운동의 진전도는 중국의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를 아는데 있어서도, 또 금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위해서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90년대 중반은 환경 NGO는, 환경문제의 사회적 계몽과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아젠다로 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이들 조직을 정치적으로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공산당의 고관들에게 리포트를 제출하기도, 제언을 하기도 하면서, 북경의 대기의 질이나 지방에서의 리사이클 계획 등에 대해서 차례로 정책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후, 환경운동의 주류파는 ‘정부는 환경문제에 진지하게 뛰어들 생각이 있는가’ 하고 공공연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린피스 마저도 북경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미디어, 과학자의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여 대규모적인 환경오염문제를 조사, 고발하기 시작, 그들은 ‘정부는 착실하게 최후까지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게 되었다. 지금의 NGO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기업이나 부패하고 있는 당국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까지도 일으키게 하며, 재판에서 승리를 해가고 있다.

2003년 10월에는 특히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 사천성의 공무원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강의 지류의 하나인 岷江 에서의 댐 건설계획을 백지로 돌린다고 발표했다. 이것에 앞서, 미디어는 댐을 건설하면, 세계최고의 관계시설 두산안이 붕괴위기에 빠져있다고 대대적으로 댐건설반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공을 받아, 환경보호단체는 더욱 아젠다를 확대,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육영역에서, 정치문제의 로비까지 활동을 적극 화해 갔다.

환경보호운동의 지도자인 단 잔그나 다이 킹, 그리고 그들은 지탱하는 젊은 층근들은 ‘민주화 없이, 환경보호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단체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자세가 중국에서의 다른 민주화운동을 자극해 갈지도



모른다. 의료, 교육, 노동자의 보호 등의 아젠다를 내건 개혁파의 정치세력이, 환경 보호운동의 행동수법을 모델로 채용,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개혁의 향방

중국의 지도자들은 개혁을 금후도 계속할 것을 결의한 듯하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개혁전략을 취할 것인지는 지금도 확실히 하지 않다. 후진따오와 원자바오마저도, 개혁의 금후에 대해서는 신중한 언급으로 시종하고 있다. 후진따오는 작년 11월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육성, 인권을 보호하고, 중국의 법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중국의 일당지배체제를 개혁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민중의 대부분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현명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지식인들도, 어떤 개혁노선이 적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정치 분석가인 뉴 쥬닝구는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과 경제적 자유가 높아지면, 정치개혁의 길은 반드시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경대학 조교수로 정부고문을 하고 있는 팡 웨이도 정부에의 공산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언론, 집회, 보도의 자유를 보다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팡은 중국은 아직 복수정당제에 이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며, '명확하고 안정된 사회계급이 존재하지 않은 채, 민주화를 강행하면, 유럽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정치가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다 급진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헌법학자 카오 슈안은 정기적인 자유선거, 미국과 같은 억제와 균형시스템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슈안마저도 신중한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는 단일지배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의 이름을 중국사회당으로 변경해, 국가와 당과의 분리를 도모, 민간에서의 정부기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프로세스는 어디까지나 단계적인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민주화를 향해 채택할 수 있는 모델도 존재하지 않는다. 홍콩과 대만이 좋은 모델과 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양 지역의 정치는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뛰어난 지침이라고 할 수 없다. 2003년에 홍콩시민은 두 번에 걸쳐 자치권의 확립을 요구, 정부전복활동의 금지조항의 기본법에의 도입에 반대하여 대규모 데모를 했다. 대만에서도, 진수이삐엔은 의회에 압력을 가해 헌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실현시켰다.

## 대 중국 관여노선을 유지하자

북경은 워싱턴이 요구해온 변화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으나, 행해야 할 일은 아직도 수 없이 남아있다. 중국이 복수정당제에 근거한 완전한 민주제도로 이행하기 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좌절될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개입노선은 도움이 된다. 단지 미국이 개입정책에는 한국, 대만, 타이에 경제개발과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준 실적이 있으나, 그것에는 십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워싱턴은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강력하게 관여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도 개입정책은 기능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필



요하다. 대통령선거라고 해서, 정책결정자는 개입정책이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떴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자각하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워싱턴은 중국의 개혁노선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혹은 변화하지 않는가, 그리고 금후 어떤 변모를 수행해 갈 가능성이 높은가에 따라,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개혁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잘 이해하면, 워싱턴이 중국의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단락적인 견해를 가지고서는 기회를 허송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형법 제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워싱턴의 시도를 예로 생각해 보자. 강제노동의 열악한 환경, 감옥에서의 고문, 사형율의 높이 등의 중국에서의 인권상황을 시정하려고, 워싱턴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고문에 관한 UN의 특별조사관, 자의적인 구속에 관한 UN의 작업팀,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에 의한 국제적 조사를 받도록 북경에 압력을 가해 왔다. 충분히 조사가 실시되면, 중국에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낮고, 섬세한 외교교섭을 일방에서 전개하지 않는 한, 역효과가 될 위험성도 있다. 그것보다도, 중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포함한 다른 어프로치를 하는 쪽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먼저 강제노동문제의 개선을 의논하고, 2002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사형집행의 조정을 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인 법률전문가를 교섭에 참가시키면, 중국도 자기들의 수법을 개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북경도, 더러는 국제사회가 바람직한 전면적이고 조직적이었던 개혁을 제도화 해 갈지 모른다.

다시 반복하나, 개입정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워싱턴은 중국의 개혁의 진전에



관한 보고와 분석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국무성은 중국의 인권상황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상세한 연차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에는 도대체 무엇이 인권상의 문제인 것인가에 대해서 특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측면을 둘러싼 중국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고, 3년에서 5년을 시간대로, 반체제파의 취급, 법제도, 인터넷을 이용 상황, 개혁을 둘러싼 국내논쟁의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테마로 상황리포트를 정리하면, 대체로 만족할 것이다. 미국의회의 중국위원회는 중국 HIV 에이즈대책, 환경보호정책, 종교의 자유, 세계무역기구(WTO)의 룰의 준수상황에 관한 전문가의 의회증언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은 세계경제에 재편되고 있는 중국은 다음으로 외국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며, 국제사회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치정보의 공개와 설명책임의 이행, 법제도 개혁,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국내집단의 이익에도 배려하게 되었다. 중국이 신형간염 SARS의 유행에 관한 은폐공작을 그만두고, 정보공개를 한 것은, 국제적인 향의가 있어서 뿐 아니라, 국내의 의료관계자, 미디어, 중국정부의 고관들이 보다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에이즈 만연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인정치 않았던 중국정부가, 여기에 와서 태도를 바뀌던 것도 국제 커뮤니티가 사실의 공포에 나서도록 작용했을 뿐 아니라, 국내의 NGO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배려할 지역 국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국제 커뮤니티의 의향을 수렴, 중국은 앞으로도 국내정치외교의 주도수정을 시도해 갈 것이다. 국제경제에의 통합이 이미 중국의 정치적 자유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가일층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은 해야 할 개입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 陳水扁 중화민국 제11대 총통 취임연설

- 대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2004년 5월 20일

우방원수 여러분, 각 사절 및 대표단 여러분, 내빈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국내외의 여러분들이 중화민국 제11대 총통, 부총통의 취임식에 참가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대만의 민주주의 전진의 성취이며, 2천3백만 국민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 희망찬 국가적 재전에서, 나는 장엄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과 뇌리 속에 부상하는 것은 화려한 축사가 아니라, 더 한층의 책임과 겸허 그리고 반성입니다.

### 대만민주화의 성과

20세기 최후의 해에 대만은 처음으로 정대교체를 이뤄내, 민주주의발전의 새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신 구세기의 교체에 수반하여, 우리들은 착실하게 민주주의 도정을 걸어왔습니다. 금세기의 첫 출발의 어려운 시기에는, 새로움과 낯음, 취약함과 견고함, 위기와 전기가 공존해 있었습니다.

華人社會 및 그 밖의 신흥민주국가에 있어, 대만의 민주화는 시련의 길이였으며, 또 모범적인 길이기도 했습니다. 서방측 제국의 민주정치는 오랜 세월의 세례를 받아 오늘날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젊은 민주국가로서, 좌절과 시련을 견뎌온 대만의 경험은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생겨난 유토피아가 아니고, 또 직행열차도 아니며, 하나하나를 경작함으로써 한걸음 한걸음 전진의 족적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사실을 대만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융합을 향해

첫 번째의 파도인 민주화의 과정은, 계엄령해제에서 시작, 국회의 전면개선, 총통의 직접선거까지, 주권재민 및 대만의 주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두 번째 파도인 민주화추진의 초점은 공민사회의 구축 및 국가공동체의 재편성입니다.

사회 의식의 형성에서 국가공공정책에의 참여까지, 국민투표의 실시를 포함, 그들 공민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더욱 성숙한, 이성적인 책임 있는 민주주의 근간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공민사회의 구축을 통해, 공동참여에 의해 전원으로 이 토지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공통의 관념을 창조함으로써, 비로소 에스닉 그



롭, 혈연, 언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국가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만사회는 확실히 아이덴티티와 에스닉의 어려운 과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것을 분식할 필요도 없으며, 또 그것을 좌시할 수도 없습니다. 집권자로서, 나 자신과 민주진보당을 포함, 솔선하여 반성하고, 솔직하게 용화를 찾아나설 의욕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들 선조는 해협을 건너 대만에 착륙, 안심하고 살아갈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착륙한 시간의 전후에 관계없이, 어디서부터 왔던지 간에, 또 말의 서로 다름이 있었다라든, 특히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든, 최종적으로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서로의 운명은 같으며, 脣齒輔車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신주민,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 외국인배우자, 또 같은 태양아래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도, 이 토지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으며, 대만 신가정의 뼈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원인 것입니다.

각각의 에스닉 그룹은 역사의 기억이나 민족적인 생각에 의해, 인식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는 포용력과 상호이해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에 의한 계엄시대에는 그룹 간의 불평등이나 언어문화의 억제 등이 존재했으나, 극소수의 통치자를 제외하면 모든 에스닉 그룹이 다 같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28사건과 백색테러에서는 本省人이나 外省人도 다같이 피해자였으며, 그 근본은 통치자의 권력남용에 의한 것으로, 에스닉 그룹의 압박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만은 다양한 종류의 이민사회이며, 소수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식민지국가가 아니며, 어느 에스닉 그룹도 가공의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대만에서, 출신지는 廣東이거나 臺東이거나, 또 우리들의 모친의 출신이 베트남이거나 臺南이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같은 지위와 존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만아이덴티티이거나 중화민국아이덴티티이거나, 실제로는 같은 것에 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스닉, 일체의 국가' 라고 하는 것이, 대만 땅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며, 본토와 외래의 구별을 지우지 않고, 소수와 다수의 구별도 없고, 2천3백만 국민은 한 덩어리가 되어, 모든 운명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 대만 단결의 필요성

이번 총통선거는 공전의 격전이었으며,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나서도, 아당의 후보자가 의심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임 총통으로서, 나는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사법

의 독립공정을 존중,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솔직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을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의 길이며, 만약 이번의 선거에 의해 국민의 민주 법치나 사법의 독립에 대한 신뢰를 동요시킨다면, 결국은 국민전체가 부담을 지는 결과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주 내리던 비가, 우리들의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켜, 기분은 냉정화 하고, 특히 우리들의 두뇌를 명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에 의해 선거가 정기적으로 행해진다 고 하는 제도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도, 민의와 사회적 가치관의 총점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은 정치가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받고, 또 그것으로 반성하고 전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진영과의 사이에는 이념의 차이나 정책논쟁은 피할 수 없으며, 더러는 민중을 동원하는 것도 피할 수 없었으나, 민주선거의 결과는 결코 이기면 ‘官軍’, 지면 ‘賊軍’ 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민중의 대립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정치 라고 하는 감독메카니즘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과 성실한 야당은 어느 것이나 국민의 의지의 각 부분을 대표하는 것으로, 또 국가국민의 정치적인 자산이기도 합니다. 여당 혹은 야당의 역할을 불문하고, 어느 쪽에도 국민은 찬스와 책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종적인 시련은 다수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가 어떤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대립의 벽을 뛰어넘어, 상호신뢰의 간격을 어떻게 메꾸는 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소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모순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일시적으로 대립은 생기더라도, 나는 계속하여 ‘경청, 이해, 법리, 단결’ 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서의 대립을 해소, 여야당의 신뢰관계 회복에 뛰어들겠습니다.

단결한 대만, 평온한 양안관계, 안정한 사회, 번영한 경제, 그들 어느 것이나, 현재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또 정부가 금후 시정의 요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도 개인 혹은 한 정당이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위해 나는 야당과 여론의 지지와 편달을 원하고, 더욱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을 가지고, 계속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살고 좋은 환경보호를 정비한 영속적인 사회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을 견지 하는 것, 그것은 정치, 사법, 교육, 금융, 재정, 미디어, 사회 등의 개혁을 진전시키는 것이며, 국민들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기대에 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힘이 되고, 견지함으로써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경주하고 있는 노력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사회의 정의, 경제의

정의, 사법의 정의, 남녀 평등 및 국제정의에 합치하는, 새로운 대만에서 생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헌정개혁에 매진

현재, 대만은 전면적으로 급속하고 격변하고 있는 국제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어떻게 하여 전국민의 힘을 결집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여 정부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인가가 국가발전의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국정이나 역사적 요인에 의해 정부기관 효율화예의 개조 등, 특히 헌정체제의 난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 정부와 국민과의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정당시의 배경에 둘러싸여, 대다수의 조문은 목하의 대만과 장래의 요구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헌정개혁을 추진, 본래 있어야 할 헌정을 세우는 것은 국민의 기대일 뿐 아니라, 이미 여야당의 합의도 얻고 있습니다.

헌정개혁의 목적은 정부의 양호한 관리와 효율을 향상시켜, 또 민주법치의 기반을 강화, 국가의 영구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현저화한 문제는 3권분립인가 5권헌법인가,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 총통선거제도를 상대다수로 할 것인가, 특히 국회개혁과 관련조치법, 국민대회의 위차부여와 그 존폐, 성정부조직의 존폐, 투표연령 인하, 병역제도의 조정, 기본적인 인권과 마이놀리티의 권리보호, 국민경제 조항 --- 등등의 문제는 어느 것이나 중요한 문제이며, 그 영향도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십년간 6차례의 헌법을 개정했다고 하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헌정개혁은 일개인 혹은 일 정당이 주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 일시적인 편익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금후 우리들은 여야당, 사법, 학계 등 각 계의 대표들에게 요청하여 헌정개조위원회를 설치, 헌정개혁의 범위 및 순서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구해, 국민과 여론의 감독을 받겠습니다.

2008년 나의 총통임기가 끝나기 까지, 대만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요구에 합치한 신 헌법을 대만국민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나의 역사적인 책임이며, 국민들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원래부터 나는 국가의 주권이나 영토에 관한 문제, 또 통일인가 독립인가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의 대만사회에 아직 절대다수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이 문제는 이번의 헌정개혁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제기합니다. 한편, 최초의 헌정개혁의 수순이나, 우리들은 현행헌법과

추가조문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채택된 후에, 최초이자 최후가 될 잠정임무형의 국민대회대표를 선출, 그것에 의해 헌정개혁을 완성시켜, 국민대회의 철폐, 특히 국민투표의 헌법조문화를 완수, 민주헌정의 영속적인 발전과, 장래 국민들이 국회의 헌법수정안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4년간,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정세변화가 명확해져, 대만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직면, 자기성장을 기해, 기반을 다지는 한편, 글로벌화의 경쟁과 국제협력 사이에서 새로운 입각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과 미국, 일본 및 많은 우방과의 우호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지킬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유, 민주, 인권, 평화라고 하는 '가치관에 의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 국제참가에 가일층의 노력

대만의 민주주의발전과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은 늘 국제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들 거리를 뛰어넘은 우정에 대해, 나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만국민은 평화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해협의 대안이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여야당 및 전체 국민은 강력한 국방의식을 결집, 적극적으로 유효한 방비를 강화하여 자기방위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계속하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관심을 기울려 협력을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 공헌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2천 3백만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반 국제테러활동과 국제인도지원의 대열 속에서, 대만은 일관하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들은 民主太平洋聯盟을 창설, 民主基金會를 설치, 적극적으로 NGO에 참가, 국제사회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자유, 민주,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관을 나뉘가지며, 또 수호해 왔습니다.

대만은 현재 세계 15위의 무역국이며, 각 항목의 국제경쟁력 랭킹도 늘 톱 글라스에 있으나, 우리들은 12년을 거친 노력의 결과, 세계무역기관의 제144번째의 가맹국이 돼, 그 과정의 어려움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더욱 강한 세계보건기구에 가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SARS 유행의 교훈이 아직 새롭게 느껴지며, 의료, 위생, 방역에 국경은 없다는 생각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편적가치

관에 근거, 대만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은 더욱 단결하여, 노력을 계속, 금후 2년 이내에 세계보건기관 가맹의 소원을 실현하도록 요청합니다.

얼마전이나, 유럽연합은 신구가맹의 10개국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십수 년의 노력을 거쳐, 각 국 및 그 국민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유러피안 공동이익의 통합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귀중한 경험은 신세기의 세계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통합은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통합은 글로벌한 발전에 더해, 인간사회에서 기존의 국가주권의 원리, 특히 국경의 벽이라는 것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동은 이미 달성될 수 없는 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 양안의 평화구조의 확립

해협양안의 신세기에서의 지도자는 국민의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 새로운 추세를 전향적으로 받아드려, 특히 새로운 사고와 스케줄을 가지고, 공동으로 양안의 장래의 문제에 대응,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안인민들은 공통의 혈연과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1세기 사이, 함께 강권에 의한 압박과 전제통치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양안 인민은 스스로를 주인으로 세우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상호 충분한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해협의 대안이 역사적 요소와 민족적 감정에 의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경당국도 대만국민이 민주를 바라고, 평화를 사랑하고, 생존을 찾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안이 2천 3백만 국민의 순수하고 선량한 소망을 체득치 못하고, 계속하여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가해, 정치적인 고립을 도모, 무리하게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하려하면, 대만국민의 마음과 해협양안의 거리는 점점 멀리지게 될 것입니다.

중화민국이 臺灣, 澎湖, 金門, 馬祖 에 존재하고, 대만이 국제사회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고, 여기에 전 대만국민의 의지도 조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세기간, 2천3백만 국민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 낸 대만경험은 중화민국의 존재가치를 증명했을 뿐 아니라, 화인사회와 양안인민의 공동의 자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요소에 의해 양안은 다른 정치제도와 생활양식을 발전시켜왔으나, 만약 양안

이 걸어온 '다름'과 '같음'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전진하여 협력호혜의 관계로 매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만은 완전히 자유, 민주화된 사회이며, 어떤 개인 혹은 정당도, 국민을 대신하여 최후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양안이 선의를 기초로하여, 공동으로 '평화의 발전, 자유로운 선택'의 환경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장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혹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진전되더라도, 2천3백만의 대만국민의 동의를 얻는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거부할 것은 아닙니다. 과거 십 수년에 걸친 양안인민의 상호연동과 교류는 이미 아주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안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금후, 이미 만들어진 기초위에, 계속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양안의 메스컴, 정보, 교육, 문화, 경제 무역 등의 교류의 관련조치를 확대, 양안의 대화와 의사소통의 루트회복을 추진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리를 축소하게 돼, 상호 신뢰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의 이 20년간은 대만에 있어 전면적으로 향상할 터닝포인트 일 뿐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도 민주화와 자유화에 매진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쌍방의 정부는 이 기회를 장악, 전력을 기울여 글로벌한 경쟁이라는 추세에 눈을 돌려, 다시 정치적 투쟁에 힘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중국의 지도자가 최근 안정적인 발전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13억 대륙인민의 복지를 강조, 또 '평화적 대두'를 국제관계 개척의 기초로 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 북경 당국이 양안 쌍방의 발전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대만해협평화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양안이 건설과 발전에 진력, 평화안정의 상호연동 메카니즘의 구축을 협의, 공동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하게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더욱 일보 전진하여 '삼통'을 포함한 문화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것만이, 양안인민의 복지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화민국 총통으로서, 대만국민들의 부탁을 받아,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을 지키고, 또 국가의 영속적인 발전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국민전체의 의지와 합의를 결집하여, 적절하게 이제부터의 양안관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2000년 5월 20일의 취임연설에 내건 원칙과 공약은, 과거 4년 동안에 변하지 않았고, 지금부터 34년간도 변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초위에서, 나는 일보 전진하여 여야당과 사회 각계의 참가를 요청, '양안평화발전위원회'를 설치, 여야당의 지혜와 국민전체의 합의를 결집, '양안평화발전강령'을 제정, 공동으로 양안

의 평화안정과 영속적인 신관계를 만들어 나 갈 것입니다.

## 대만의 새로운 방향

내빈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세계지도에서는 臺灣, 澎湖, 金門, 馬祖는 태평양 연안의 몇 개의 조그만 섬에 지나지 않으나, 이들 도서의 뛰어난 산하, 다원적인 에스닉 그룹, 다양한 생태를 상세하게 보면, 2천3백만 국민이 지금까지 수 세기에 걸쳐 만들어 온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성과는 어디까지나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진 백과전서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서양국가로서의 포용력, 세계의 섬으로서의 활달함, 이 토지에 사는 사람들의 시야와 흥금을, 수평선의 저쪽까지 무한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만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는 것은, 선천적으로 혜택 받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둬되는 좌절과 고난의 시련을 거친 후의 내려 쏘이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만정신'이며, 우리들 선조의 대에서 지금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에 전해온 것이다.

현재, 역사의 바톤은 다시 우리들의 손을 거쳐, 또 국민 여러분들 한사람 한사람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지금부터 4년간, 나는 성심성의, 자비심을 가지고, 공정무사하게 중도를 걷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나를 지지, 한층 더한 편달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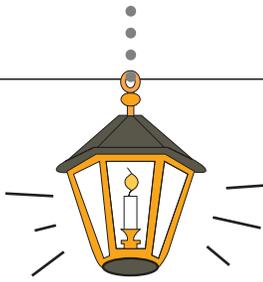
나는 평범한 인간이며, 위대한 총통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이 있음으로써, 위대한 국가가 창출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 지속, 개혁의 지속, 안정사회의 지속, 평화의 지속, 더욱 국가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대만중화민국을 단결과 조화, 공평과 정의, 부의 평균화, 활력있는 사회를 향해 매진하는 것이, 역사가 나에게 부여한 책임이며, 또 국민들이 나에게 부과한 사명입니다.

금년 2월28일, 수 백 만 명의 민중들이 플로샤의 이 땅에서, 에스닉,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손에 손을 잡고, 5백 킬로에 걸친 민주주의 장성을 구축, 가장 아름다운 대만의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만은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과감하게 세계로 발을 내디디며, 세계지도의 위에 영속적으로 발전, 움직임 없는 전진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다함께 이 토지에 감사하고, 함께 국민에 경의를 포함시다. 대만의 단결과 수호와 전진을 강화하고, 21세기에 다시 한번 감동적인 대만이야기를 만들어 냅시다. 최후로, 중화민국의 가일층의 흥융, 및 여러분들의 건강과 다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대의 논리 · 민족연구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고품격 국제정보지 『시대의 논리』와 민족문제 전문지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대의 논리」·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 정기구독 절차

1.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서>에서 정기구독 희망 잡지를 <구독희망>란에 표시(○)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 연 락 처

<저널 편집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절취선>

## 정기구독 신청서

III 교양사회

구분	저널명	간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잡 지	시대의 논리	계 간	4권(1년분)	₩ 40,000		
			8권(2년분)	₩ 70,000		
	민족연구	반년간 (연2회)	4권(2년분)	₩ 40,000		
			8권(4년분)	₩ 70,000		
구 독 자	구독자명(기관)				E-mail	
	주 소	우편번호				전화

<절취선>

시대의 논리

ISSN 1739-1679-05

값 10,000원

III 교양사회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발행인 : 교양사회 (대표 최철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95  
영동빌딩507호(☎02-725-0936)

편집인 : 조정남(☎010-4716-3616)

발행일 : 2004년 9월 1일

발행처 : 교양사회(☎02-725-0936)

등록번호 : 문화 바 03029 / 등록일자 2004.3.3